

정책보고서 2022-111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485-0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욕구·인지 조사 연구

이다미  
김지원·류재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10. 28.)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욕구·인지 조사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21</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제2절 연구의 구성 .....	25
<b>제2장 조사 개요 .....</b>	<b>27</b>
제1절 연구의 설계 .....	29
제2절 조사대상자 특성 .....	29
<b>제3장 사회정책 영역별 인식과 태도 .....</b>	<b>35</b>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	37
제2절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	71
제3절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82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	97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10
<b>제4장 사회정책 영역의 인식과 태도 변화: 2020년, 2022년 비교 .....</b>	<b>117</b>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	119
제2절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32
제3절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34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	137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45

---

<b>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b>	<b>149</b>
제1절 주요 연구결과 .....	151
제2절 정책 제언 .....	158
 <b>참고문헌 .....</b>	 <b>161</b>
 <b>부록 .....</b>	 <b>163</b>
[부록 1]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설문지 .....	163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조사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 .....	30
〈표 2-2〉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32
〈표 2-3〉 조사대상자의 복지 욕구 및 복지 경험 .....	34
〈표 3-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	38
〈표 3-2〉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집단별 차이 .....	41
〈표 3-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	43
〈표 3-4〉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연령대별 .....	45
〈표 3-5〉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	46
〈표 3-6〉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	48
〈표 3-7〉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세대별 .....	51
〈표 3-8〉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 .....	52
〈표 3-9〉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 가구소득-집단별 차이 .....	53
〈표 3-10〉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 세대-집단별 차이 .....	53
〈표 3-11〉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	55
〈표 3-12〉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지역별 .....	56
〈표 3-13〉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	59
〈표 3-14〉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	61
〈표 3-15〉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세대별 .....	62
〈표 3-16〉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	64
〈표 3-17〉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세대별 .....	65
〈표 3-18〉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가구소득별 .....	66
〈표 3-19〉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수준 .....	67
〈표 3-20〉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세대별 .....	68
〈표 3-21〉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가구소득별 .....	68
〈표 3-22〉 조세 부담 의향 수준 .....	69
〈표 3-23〉 조세 부담 의향 수준: 세대별 .....	70
〈표 3-24〉 조세 부담 의향 수준: 가구소득별 .....	70
〈표 3-25〉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	72
〈표 3-26〉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	73
〈표 3-27〉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비율: 세대별, 가구소득별 .....	73
〈표 3-28〉 바람직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 수준: 1순위 .....	74

〈표 3-29〉 바람직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 수준: 복수 응답 .....	75
〈표 3-30〉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 .....	76
〈표 3-31〉 보육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	78
〈표 3-32〉 아동수당 지급 연령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	79
〈표 3-33〉 아동수당 지급 계층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	79
〈표 3-34〉 아동수당 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	80
〈표 3-35〉 현금성 청년복지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	81
〈표 3-36〉 비현금성 청년복지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	82
〈표 3-37〉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수준 .....	83
〈표 3-38〉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비율 .....	84
〈표 3-39〉 통일이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85
〈표 3-40〉 통일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	86
〈표 3-4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대체에 대한 인지도 .....	87
〈표 3-4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관심도 .....	88
〈표 3-43〉 로봇,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대체 시,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	89
〈표 3-44〉 변화하는 사회 대비를 위한 복지정책 필요성 인식(필요하다는 응답 비율) .....	91
〈표 3-45〉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	92
〈표 3-46〉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구매 및 이용 의사 .....	93
〈표 3-47〉 사회적 경제 조직 기부 혹은 투자 의사 .....	94
〈표 3-48〉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 .....	95
〈표 3-49〉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 .....	96
〈표 3-50〉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	98
〈표 3-51〉 자신의 정치 이념적 위치 .....	100
〈표 3-52〉 주관적 계층 인식 수준 .....	101
〈표 3-53〉 소득 격차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	103
〈표 3-54〉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정치 성향별 .....	103
〈표 3-55〉 기본적 생활 보장 시, 희망 노동시간 .....	104
〈표 3-56〉 우리 사회 및 타인에 대한 공정성 인식 .....	105
〈표 3-57〉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 .....	106
〈표 3-58〉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정치 성향별 .....	107





〈표 3-59〉 복지에 대한 견해 .....	108
〈표 3-60〉 가족 관련 인식 .....	109
〈표 3-61〉 가족 관련 인식: 성별, 세대별, 가구소득별 .....	110
〈표 3-62〉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행복도 .....	111
〈표 3-63〉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	112
〈표 3-64〉 우리나라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	113
〈표 3-65〉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복수 응답) .....	114
〈표 3-66〉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 가장 크게 변화할 것 .....	115
〈표 4-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20
〈표 4-2〉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	121
〈표 4-3〉 복지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23
〈표 4-4〉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24
〈표 4-5〉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25
〈표 4-6〉 보건의료, 실직자 지원 지출 증가 찬성 비율 추이(2006~2022년) .....	126
〈표 4-7〉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27
〈표 4-8〉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수준: : 2020년, 2022년 비교 .....	128
〈표 4-9〉 조세부담 의향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29
〈표 4-10〉 선별적,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 추이(2006~2022년) .....	130
〈표 4-11〉 납세 의사 추이(2006~2022년) .....	131
〈표 4-12〉 복지 증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인식 비교(2018~2022년) .....	132
〈표 4-13〉 노인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	133
〈표 4-14〉 통일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2020년, 2022년 비교 .....	134
〈표 4-15〉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2020년, 2022년 비교 .....	135
〈표 4-16〉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구매 및 이용 의사: 2020년, 2022년 비교 .....	135
〈표 4-17〉 사회적 경제 조직 기부 혹은 투자 의사: 2020년, 2022년 비교 .....	136
〈표 4-18〉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 관련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	136
〈표 4-19〉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	137
〈표 4-20〉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2020년, 2022년 비교 .....	138
〈표 4-21〉 자신의 정치 이념적 위치: 2020년, 2022년 비교 .....	139
〈표 4-22〉 소득 격차에 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	139

---

〈표 4-23〉 소득 격차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40
〈표 4-24〉 기본적 생활 보장 시, 희망 노동시간: 2020년, 2022년 비교 .....	141
〈표 4-25〉 우리 사회 및 타인에 대한 공정성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	142
〈표 4-26〉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42
〈표 4-27〉 복지에 대한 견해: 2020년, 2022년 비교 .....	143
〈표 4-28〉 가족 관련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45
〈표 4-29〉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행복도: 2020년, 2022년 비교 .....	145
〈표 4-30〉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2020년, 2022년 비교 .....	146
〈표 4-31〉 우리나라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	146
〈표 4-32〉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종합 순위)_복수 응답: 2020년, 2022년 비교 .....	147
〈표 4-33〉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가장 크게 변화할 것): 2020년, 2022년 비교 .....	148



[그림 1-1]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추이(2006~2020년)	24
[그림 2-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33
[그림 3-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39
[그림 3-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44
[그림 3-3]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연령대별	45
[그림 3-4]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47
[그림 3-5]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49
[그림 3-6]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 선호 비율: 가구소득, 세대별	54
[그림 3-7]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55
[그림 3-8]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지역별	57
[그림 3-9]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60
[그림 3-10]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61
[그림 3-11]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64
[그림 3-12]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67
[그림 3-13]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72
[그림 3-14] 바람직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급 수준: 1순위	75
[그림 3-15]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	77
[그림 3-16]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 대체 시 상황에 대한 인식	90
[그림 3-17]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98
[그림 3-18] 주관적 계층 인식 수준	102
[그림 3-19]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수준	104
[그림 3-20] 복지에 대한 견해	108
[그림 3-21]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큰 문제	114
[그림 4-1]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121
[그림 4-2]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125
[그림 4-3] 보건의료, 실직자 지원 지출 증가 찬성 비율 추이(2006~2022년)	126
[그림 4-4]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128
[그림 4-5] 선별적,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 추이(2006~2022년)	130
[그림 4-6] 납세 의사 추이(2006~2022년)	131
[그림 4-7] 복지 증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인식 비교(2018~2022년)	132
[그림 4-8] 노인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133



[그림 4-9]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2020년, 2022년 비교 .....	138
[그림 4-10] 소득 격차에 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	140
[그림 4-11] 소득 격차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	144
[그림 4-12]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종합 순위)_복수 응답: 2020년, 2022년 비교 .....	147
[그림 4-13]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가장 크게 변화할 것): 2020년, 2022년 비교 .....	148



## 요약

### 1. 들어가며

- (연구 필요성) 복지정책은 사회적 격차에 따른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신뢰수준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일수록 그 성공 가능성은 높아짐.
- 복지정책을 둘러싼 개인의 인식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복지인식 지형과 복지정책의 균열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함.
- 다양한 복지정책 영역에서 복지가 누구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국민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방향 설정 시 참고하는 것은 향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함.
- 한국은 주로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욕구와 인식이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민심과 정치 영역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미래 복지지형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미시적 욕구·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지위에 따른 친복지·반복지 지형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복지정책이 각 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복지 이슈,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의 사회정책 욕구와 태도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 개요)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표본추출) 2020년 통계청 장애인구추계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비례배분에 의한 할당(표본 수가 적은 지역은 유의 할당 적용) 방법을 사용
-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2022.11.10.~12.2. 약 2주 간 가구 방문에 의한 대면 면접조사 실시

## 2. 주요 연구 결과

###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 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 총 11개 사회정책 영역별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사회정책 영역에서 절반 이상 국민이 정부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0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아짐.

- 정부 책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81.3%)이며, 국민 중 81.2%는 아픈 이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 책임으로 인식함.
- 아동 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책임 응답률은 81.1%로 2020년 (67.0%)과 비교할 때 14%p 가까이 증가함.
-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책임 응답으로, 2020년 48.6%에서 2022년 63.3%로 크게 증가함.
  - 무주택자 주택공급은 2020년 조사에서 정부 책임이 가장 낮은 사회정책이 었다는 점에서 지난 2년 사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의 인식 변화가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집단별 인식 수준의 차이

- 대체로 2030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높으나, 일자리

정책과 실업자 지원정책의 경우 4050 세대의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제공은 자가소유율이 낮은 2030 세대(평균 2.23점), 자가소유율이 높은 60대 이상(평균 2.38점)의 인식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역임.
- 대부분 사회정책에서 고소득 집단의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중도, 우파 성향인 사람보다 정부 책임 인식이 높게 나타남.

##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의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은 장애인(80.9%)으로 나타남.
  - 아동(71.5%), 노인(62.1%), 여성 가장(54.4%), 저소득층(50.0%), 북한이탈주민(45.4%) 순이었고, 장기실직자가 31.9%로 가장 낮았음.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은 아동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40대(79.1%)에서 가장 높았고, 노인에 대한 국가 책임은 역설적이게도 60대 이상에서 54.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60대 이상의 23.5%가 기본 생활 유지의 책임을 '본인이 일해서'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계속하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2020년과의 비교)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적 약자의 삶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인식 하에 이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아동과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이 대체로 가족 책임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점차 ‘국가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3.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

-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중간소득 이하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건의료서비스가 30.3%로 가장 높은 반면, 주거복지서비스는 10.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아동보육서비스는 보편적 보육 제도를 통해 이미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어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까지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모든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6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의 응답률이 다른 소득집단과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남.
- (2020년과의 비교)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매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4.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

- 현금성 소득지원보다 사회서비스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아동, 노인은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42.4%, 43.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은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76.3%, 80.5%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약자 유형별로 지지하는 지원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짐.



- 대체로 3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이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를,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음.
  - 아동과 노인에 대한 지원의 경우, 3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현금성 지원방식 선호가 높았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39.9%)보다 300~600만 원 미만 중간소득층(43.1%)이 현금성 소득지원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30 세대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선호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5.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 대다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응답자 다수가 공공기관을 통한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국가가 설치한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는 아동보육서비스(78.7%)가 가장 높았고, 장애인서비스(71.7%), 보건의료서비스(70.7%), 노인돌봄서비스(68.7%), 교육서비스(64.2%), 간병서비스(55.1%) 순으로 나타남.
  - 민간기관 중 비영리기관보다 영리기관에 대한 선호가 모든 사회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영리기관이 질적으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양질의 서비스 선호가 응답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는 중소도시 거주자에게서, 읍/면 지역 거주자들은 민간 영리기관과 개별 서비스 제공 주체(가족, 친지 외 개인)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를 검토할 때, 지역별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6.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 (사회정책 영역별) 모든 사회정책 영역에서 '현재 수준으로 지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은 돌봄지원정책(43.0%)에서 가장 높았고, 이 중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13.2%) 역시 다른 정책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았음.
- (2020년과 비교) 주거정책과 치안정책은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각각 30.9%에서 35.9%, 33.6%에서 42.1%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그 하락 폭은 고용정책(43.8% → 38.6%), 보건의료정책(45.5% → 40.2%)에서 두드러짐.
- (복지정책 영역별) 복지정책 영역 대상별 정부지출 확대의 경우,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보다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복지정책(42.7%)이 가장 높았고, 정부지출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복지정책(30.0%), 실직자 복지정책(23.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0년과 비교) 청년 정책(26.1% → 28.3%)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감소함.
- (세대별 비교) 대부분 영역에서 2030 세대가 60대 이상보다 정부지출 축소보다는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노인복지정책만이 60대 이상에서 다른 세대보다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소득집단별 비교) 저소득층보다 중간소득층 이상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7. 세금부담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

### 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

- 복지 확대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57.5%)이며,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43.0%), 사회보험료 증액(39.9%), 새로운 세금 도입(37.2%), 국채 확대(27.3%) 순으로 나타남.

- (2020년과 비교)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에 대한 동의 비율이 37.1%에서 43.0%로 약 6%p 증가한 반면,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과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7.8%p, 8.5%p 감소함.
- (세대별 비교)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 사회보험료 증액에 대한 동의는 4050 세대에서, 국채 확대에 대한 동의는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한 동의는 2030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집단별 비교)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 국채 발행은 저소득층일수록, 사회보험료 증액은 중간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동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나.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

- 가장 선호하는 전통적 증세 방안은 법인세 증액(65.8%)이었고, 소비세 증액(36.7%)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2020년과 비교) 소득세 증액에 대한 동의 비율만 큰 폭으로 증가(25.5% → 39.6%)하고, 다른 방안들은 모두 감소함.
- (소득집단별) 모든 증세 방안에 대하여 300~600만 원 중간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법인세 증액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 조세부담 의향<sup>1)</sup>

- 상황별 납세 의향의 평균값은 5점대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납세 의향'의 평균(5.22점)이 가장 높았고,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납세 의향'이 평균 5.18점,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납세 의향'이 평균 5.03점 순으로 나타남.

1) 10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2020년과 비교) 세 가지 모든 경우에 대한 납세 의향 수준이 감소하였는데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납세 의향’이 평균 5.62점에서 5.18점으로 가장 크게 감소함.
- (소득집단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납세 의향’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았고,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납세 의향’,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납세 의향’은 중간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2절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노인복지정책 개혁 방향

#### 가. 노인복지정책의 우선순위

- ‘요양과 치료’를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복지 혜택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38.7%), 이어서 노후소득보장(24.1%), 일자리 제공(23.1%), 여가와 문화생활(9.7%), 가사 도움(4.4%) 순으로 나타남.
- 당사자라 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41%가 요양과 치료를 우선 제공 정책으로 응답함.
- (소득집단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중간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요구가, 고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2020년과 비교) 요양과 치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고, 일자리 제공과 가사 도움은 소폭 감소함.

#### 나. 노인복지정책 방향

- 연금 급여를 줄이는 대신 노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에 대한 동의율이 47%로 매우 높고,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연금지급 시기를 연장하는 방향 - 수급개시연령 연장 - 에 대한 동의율 역시 46.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세대별) 연금 급여를 줄이는 대신 노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은 60대 이상에서 동의율이 낮았고,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연금 지급을 늦추는 방향은 4050 세대에서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에서 43.3%로 낮게 나타남.
- (소득집단별) 연금 급여를 줄이는 대신 노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은 저소득층에서 동의율이 낮았고,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연금 지급을 늦추는 방향은 중간소득층의 동의율이 가장 높고(49.4%), 저소득층(42.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급여수준<sup>2)</sup>

- ‘지급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지율이 29.2%로 가장 높았고,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23.4%),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23.2%) 순으로 나타남.
- (세대별, 소득집단별) 60대 이상의 경우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27.2%)가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 소득층은 자신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선호가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라. 국민연금 개혁 방향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의 경우, 현행 유지가 44.3%로 가장 높고, 수급개시연령 연장 31.8%, 보험료 인상 방안 16.2%, 급여를 덜 받게 하는 방안 7.7%로 나타남.
-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60세 이상(52.5%)에서 가장 높는데, 4050 세대(41.0%)와 60세 이상과는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세대 간 인식 수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수급개시연령 연장에 대한 선호는 2030 세대(33.9%)에서 가장 높고, 60대

2) 202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기초연금을 개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이상(28.6%)에서 가장 낮음.

- 급여를 덜 받는 방안에 대한 선호는 모든 세대에서 낮게 나타남.
- 현행 유지에 대한 선호는 저소득층(49.4%)에서 가장 높게,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한 선호는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2. 아동 및 청년복지정책 개혁 방향

### 가. 보육서비스정책 방향

- 보육서비스의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평균 3점대 후반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한부모 가족이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장시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수준이 평균 3.89점으로 셋 중 가장 높았고, 이어서 현금성 양육수당 지급을 지급하고,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및 시설 선택은 부모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평균 3.66점), 모든 계층이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남.
- (소득집단별) 맞벌이/한부모가족의 장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맞벌이에 속한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평균 3.93점),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 수준은 고소득층(평균 3.26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급여수준

- (지급연령) 현행 유지에 대한 지지비율이 49.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초등학생까지 확대(24.7%), 만 18세 아동 전체로 확대(13.7%), 중학생까지 확대(11.7%) 순으로 나타남.
- 2030 세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세대의 27.6%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함.
- (지급계층) 현행 유지에 대한 지지비율이 49.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급(29.4%), 중간소득층 아동까지 지급하는 방안(18.2%)의 순으로 나타남.

○ 현행 유지는 저소득층에서 지지비율이 높았고, 중간소득층 아동까지 지원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서 지지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급여수준)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71.3%,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이 28.7%로 둘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젊은 세대로 갈수록, 중간소득층에서 현재보다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다. 청년복지 정책 대상

□ (현금성 청년복지 지원) 저소득층 가구 청년에게만 현금성 소득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계층에서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현금성 소득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가장 많았음.

□ (비현금성 청년복지 지원) 현금성 지원과 달리 중간소득층 청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근소한 차이로 35.2%가 모든 청년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함.

○ 현금성 지원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 청년에게만(32.9%), 중간소득층은 중간소득층 청년에게만(42.0%), 고소득층은 모든 청년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38.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현금지원은 저소득 청년에게, 비현금성 사회서비스 지원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지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3절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기본소득 도입

□ (근로 여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 제공) 찬성 40.6%, 반대 59.4%로 나타남.

○ (세대별) 2030 세대에서 찬성 비율(42.9%)이 높았고, 4050 세대에서 찬성 비율(37.4%)이 가장 낮음.

□ (기존의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제공) 찬성 33.2%, 반대 66.8%로 나타남.

○ (세대별)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36.8%)을 나타냄.

□ (소득계층별) 전반적으로 3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많이 지지하였고(46.2%),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집단의 지지율이 36.7%로 가장 높았음.

○ (노동시장 지위별) 무급가족종사자(53.8%), 구직자(47.4%), 휴직 또는 퇴직자 집단(46.3%)에서 기본소득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전업주부, 자영업자, 학생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정치 성향별) 좌파라고 응답한 경우에 기본소득의 찬성 비율이 중도와 우파보다 높게 나타남.

#### 2. 통일 관련 사회적 이슈

□ (통일이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의 13.6%는 개선, 63.2%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통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과 비교하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42.1%)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통일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전체 응답자의 33.8%는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지만 66.2%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치 성향별) 중도 36.0%, 좌파 35.1%가 세금부담 의향을 나타낸 것에 반해, 우파는 29.6%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남.

### 3. 4차 산업혁명 대응

#### 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 전체 응답자의 70.2%가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남성일수록(74.4%), 새로운 기술 변화를 빨리 수용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2030 세대, 77.0%)이 높게 나타남.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8%가 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함.
- 남성일수록(62.4%), 젊은 세대일수록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2030 세대, 60.6%)이 높게 나타남.

####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상

-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의 89.4%가 빈부 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86.1%는 과학기술의 인간노동 대체로 인해 전체 일자리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세대가 높아질수록, 우파일수록 빈부 간 불평등 문제의 심화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나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우파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복지정책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81.4%)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심리상담 및 적응지원서비스 확대(78.1%), 의료 및 복지서비스 확대(77.4%), 전 국민 현금지원(53.7%) 순으로 나타남.
- 전 국민 현금지원(기본소득)에 대하여는 중도가 다른 정치 성향보다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함.

#### 4.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전체 응답자의 47.6%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혹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0년에 30%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지난 2년 사이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4050 세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구매 및 이용 의사) 전체 응답자의 33.4%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한 상품을 구입,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고 답하였고, 원치 않는다는 답변은 15.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구매 및 이용 의사는 2030 세대(34.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세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짐.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구매 및 이용 의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좌파(38.8%)에서 구매 의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사회적 경제 조직 기부 혹은 투자 의사) 전체 응답자의 22.1%가 사회적 조직에 기부하거나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2020년(32.8%)과 비교하면 응답률이 크게 낮아짐.
- 4050 세대의 투자 의향이 23.5%로 가장 높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그 의향은 높아짐.

- 좌파(23.9%)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 전체 응답자의 57.1%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에 찬성하였으나, 2020년(71.8%)과 비교하면 응답률이 크게 낮아짐.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제공 인식) 전체 응답자의 59.4%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020년(77.6%)과 비교하면 응답률이 크게 낮아짐.
- 이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은 4050 세대(61.4%), 중간소득집단(60.6%), 좌파 성향(60.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 1. 정치적 성향

-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중도 성향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살리기’에 대한 지지율이 50.6%로 가장 높았고, 보수 성향인 ‘제한적 복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은 29.4%, ‘노동자, 빈민을 위한 정책 실현’은 11.4%,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는 비율은 8.6%로 나타났고, 2020년과 비교할 때 보수와 중도 성향이 소폭 증가함.
- 세대별로 유사한 정치 성향 분포를 나타내며, 대체로 보수, 중도, 진보 순으로 나타남,
  - 보수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세대별로 크게 차이하지 않는 반면,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60대 이상에서 15.7%로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가구소득 집단에서 중도 성향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지지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주관적 정치 성향)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가장 많았고, 우파(31.5%), 좌파(18.8%) 순으로 나타남.

○ (2020년과 비교) 정치적으로 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2020년 32.7%에서 17%p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지난 2년 사이 주관적 정치 성향의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

## 2. 계층 인식

□ (주관적 계층 인식)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 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한 비율이 41.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득 중간층 45.5%, 소득 상층 12.7% 순으로 나타남.

○ (10년 전) 10년 전에 상층에 속했다는 비율은 15.3%에서 현재 12.7%로 낮아진 반면, 하층에 속했다는 인식 비율은 39.2%에서 41.8%로 증가함.

○ (10년 후) 상층으로의 계층 이동을 전망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12.7%에 불과한 상층 인식 비율은 10년 후 전망에서 30.9%로 크게 증가함.

- 이는 미래에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임.

## 3.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 전체 응답자의 79.3%가 한국 사회의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격차가 크지 않은 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3% 이하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격차 해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에는 59.5%가 동의하였으며,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은 12%, 중립적 혹은 유보적 의견은 31.5%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좌파와 중도가 우파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크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남.

## 4. 일반적인 복지 인식

### 가.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

□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에 대하여는 28.0%가 찬성, 2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하여는 20.1%가 찬성, 33.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에 소극적이고, 복지 증세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결과임.

○ 경제를 위한 감세에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26.2%)과 우파(26.4%)에서 동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의 경우에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33.2%)과 중도(28.9%)에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나.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

□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0.5%가 찬성, 13.1%만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36.2%가 찬성, 21.7%가 반대 입장을 나타냄.

○ 두 문항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린 자녀에 대한 모성의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3.67점)이 자식의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3.22점)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세대 간 부양책임의 약화는 두드러지는 반면, 성별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견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sup>3)</sup>

□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 6.42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모두 10점 척도

○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삶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보다 다소 높은 평균 6.55점으로 나타나는데,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냄.

## 2.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은 31.5%, 평균 3.10점으로 나타났고, ‘우리 사회는 대체로 남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은 45.0%, 평균 3.33점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우리 사회는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동의는 성별이나 세대별, 가구소득 별로 크게 의미 있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나, 정치 성향에서는 좌파(27.6%)나 중도(29.6%)에 비하여 우파(36.8%)에서 동의 정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남.

## 3.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 (사회통합 수준) 한국에서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부정이 49.3%로 긍정(24.2%)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평균 점수 기준으로 남성(4.06점), 60대 이상(3.72점), 300만 원 미만 저소득층(3.8점), 좌파(4.12점)에서 사회통합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사회통합 저해 요인: 복수 응답) ‘소득, 성, 지위 등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가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신뢰가 낮고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51.0%), ‘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량이 작다’(46.4%), ‘빈곤, 실업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45.7%) 순으로 나타남.

□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성별, 교육수준별, 고용형태별 불균형과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29.6%),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것이다'(24.7%)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집단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특히 여성(48.1%),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파일수록(50.2%) 이에 동의한 경우가 높게 나타남.

### 3. 시사점

-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들은 사회정책 각 영역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을 개선함에 있어 기대수준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사회정책은 노동시장 및 기술 변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 변화 외에도 개인 차원의 정치적 성향,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올해 실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정책 영역에서 정책 수요자들의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심층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신규 추가된 조사문항의 경우,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과정 역시 필요함.
- 내년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치열한 정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됨.
-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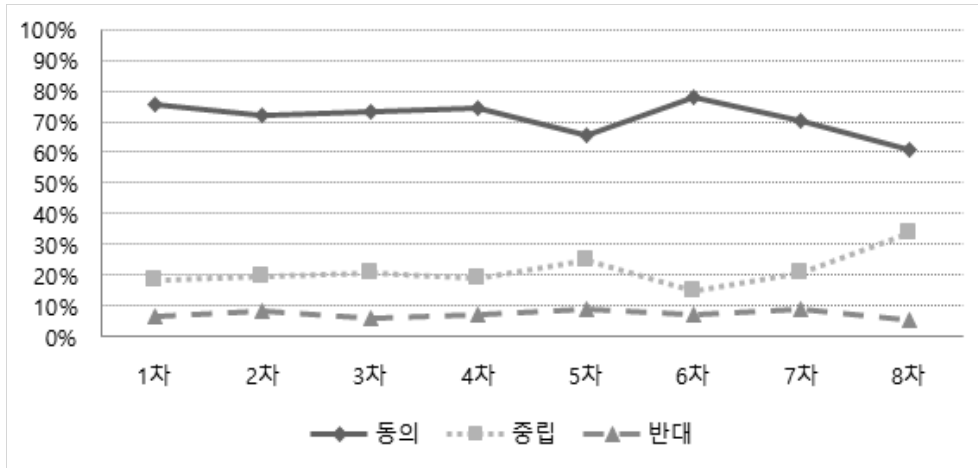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의 낮은 사회통합 수준, 양극화, 사회적 갈등에 관한 문제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되었다. 최근 사회정책은 진보-보수 간 정책 경쟁의 가장 뚜렷한 주로 등장하였고,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성, 복지 제공대상, 증세 방안 등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 구체적인 이슈로 공론화 되기도 하였다. 복지 확대의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 다양한 입장에서 논쟁들이 진행된 것이다.

복지정책은 사회적 격차에 따른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신뢰수준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일수록 그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개인의 인식과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복지인식 지형과 복지정치의 균열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여러 복지 정책 영역에서 복지가 누구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국민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 정책 방향 설정 시 참고하는 것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한편, 한국은 주로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정책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민의 욕구와 인식이 바뀌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즉 민심과 정치 영역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말, 실시된 사회정책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격차의 정부 책임 인식에 대한 동의율은 크게 낮아진 반면, 중립을 취하는 입장은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1] 참조). 가상의 복지공약에 관하여 후보 갑(‘시장중심, 잔여복지’), 후보 을(‘성장과 복지 동시 지향’), 후보 병(‘노동자 빈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도에서 ‘시장중심, 잔여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20%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도는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해식 외, 2021).

[그림 1-1]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추이(2006~2020년)

(단위: %)



주: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해 '당연히 정부 책임이다', '대체로 정부 책임인 것 같다'에 응답한 비율을 이용함.

자료: 정해식 외. (2021). 삶의 질/사회통합지수 및 보건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미래예측 모델 개발- 사회통합지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정부가 사각지대 없이 발굴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면 현 시점에서 국민의 복지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미래 복지지형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미시적인 욕구·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지위 -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 제공자 - 에 따른 친복지·반복지 지형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복지정책이 각 개인의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복지 이슈와,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국민의 사회정책 욕구와 태도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제2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사회정책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한다. 최근의 사회정책 방향성과 복지정치 지형을 고려하여 국민의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복지지위에 따른 정책 선호도를 파악한다. 한 해의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만으로는 정책 변화에 따른 복지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였던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 조사’의 일부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변화도 함께 분석한다.

먼저, 구체적인 복지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성 인식, 복지서비스별 대상자 범위, 복지정책 영역별 확대 지지 등을 파악하고, 복지재원 마련 및 조세 부담에 대한 인식, 증세방안별 선호도 파악 및 정책 선호의 영향요인 등을 분석한다. 이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둘러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한다. 각 정책 영역 간 예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선호도를 파악하고, 재원 확보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연구의 설계 및 조사대상자 특성을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2022년 실시된 사회정책 영역별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2020년, 2022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회정책 영역별 인식과 태도 변화를 비교하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조사 개요

제1절 연구의 설계

제2절 조사대상자 특성





## 제2장 조사 개요

### 제1절 연구의 설계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를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sup>4)</sup> 표본 추출은 202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조사를 바탕으로 비례배분에 의한 할당(표본 수가 적은 지역은 유의 할당 적용)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22년 11월 10일부터 12월 2일 까지 약 2주 간 가구 방문에 의한 대면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sup>5)</sup> 직관적인 설문 이해 증진, 응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선발, 교육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수행기관 : (주)글로벌알앤씨). 응답 거절 또는 여건상 응답이 불가한 경우 표본설계 시 구분된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해 대체 응답자를 발굴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 제2절 조사대상자 특성

#### 1. 기본 인적 사항

먼저,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자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거주 지역, 혼인상태 등을 조사하였다(〈표 2-1〉 참조). 성별 분포는 남성 50.7%, 여성 49.3%이며, 연령별 분포는 20대 19.1%, 30대 17.5%, 40대 20.6%, 50대 21.1%, 60대 이상 21.7%이다. 전체 응답자의 79.2%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이다. 거주 지역 분포는 수도권이 49.9%로 가장 많고, 경상권이 11.1%, 충청권이 8.9%, 전라권이 6.2%, 강원과

4) 설문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자 모집 계획, 조사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완료하였다(승인번호: 제2022-119호)

5) 조사표는 〈부록〉을 참조할 것

제주가 각각 2.9%, 2.0%이다. 혼인상태 분포는 기혼이 63.6%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31.4%, 동거·사별·이혼·별거가 5.0%이다. 종교 분포는 무교가 54.5%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19.6%, 불교 17.9%, 천주교 7.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 분포는 고졸 33.8%, 4년제 대졸 41.8%, 2/3년제 대졸 1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조사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

(단위: 명, %)

집단 구분		사례 수	비율
성별	남성	507	50.7
	여성	493	49.3
연령	19~29세	191	19.1
	30~39세	175	17.5
	40~49세	206	20.6
	50~59세	211	21.1
	60세 이상	217	21.7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76	47.6
	배우자	316	31.6
	자녀	189	18.9
	부모	17	1.7
	손자녀	1	0.1
	친척	1	0.1
거주 지역	서울	188	18.8
	부산	64	6.4
	대구	47	4.7
	인천	58	5.8
	광주	28	2.8
	대전	29	2.9
	울산	22	2.2
	경기	253	25.3
	강원	29	2.9
	충북	30	3.0
	충남	39	3.9
	전북	31	3.1
	전남	31	3.1
	경북	49	4.9
	경남	62	6.2
	제주	20	2.0
	세종	20	2.0

집단 구분		사례 수	비율
혼인상태	미혼	314	31.4
	기혼	636	63.6
	동거	5	0.5
	사별	19	1.9
	이혼	22	2.2
	별거	4	0.4
종교	무교	545	54.5
	개신교	196	19.6
	천주교	70	7.0
	불교	179	17.9
	원불교	3	0.3
	기타	7	0.7
최종 학력	무학	1	0.1
	초등학교 졸업	9	0.9
	중학교 졸업	45	4.5
	고등학교 졸업	338	33.8
	2/3년제 대학 졸업	141	14.1
	4년제 대학 졸업	418	41.8
	대학원 석·박사 이상	48	4.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2.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시장 지위(직업), 종사상 지위, 고용 형태, 가구소득, 사회보험 가입, 주택 소유 형태를 조사하였다(〈표 2-2〉 참조). 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임금근로자 48.9%, 자영업자 15.8%, 무급가족종사자 1.3%로 응답자의 66.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비율이 85.3%로 가장 높고, 임시직 9.4%, 일용직 5.3% 순이다. 고용 형태의 경우, 정규직 81.2%, 비정규직 18.8%로 나타났다(〈그림 2-1〉 참조). 사회보험 가입의 경우, 51.0%가 가입상태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 분포는 월 300만 원 미만인 15.8%, 300~600만 원 미만 42.9%, 600만 원 이상이 40.8%이다. 주택 소유 형태는 자가 소유 비율이 72.5%로 가장 높고, 전세 18.0%, 월세 7.9%로 나타났다.

〈표 2-2〉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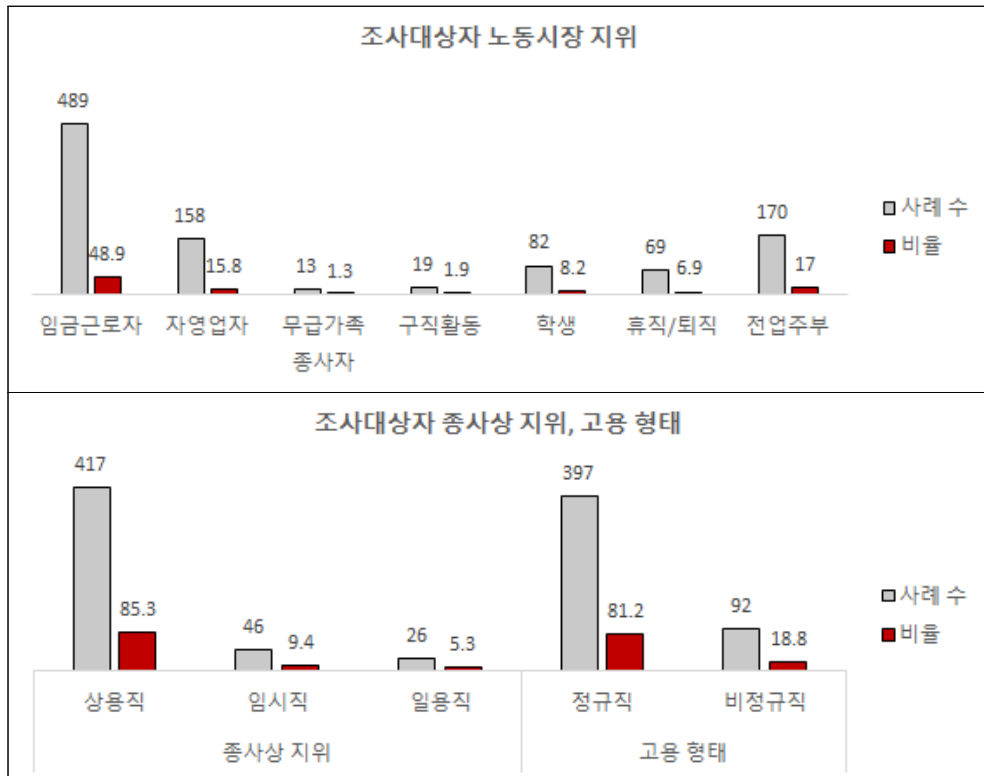
(단위: 명, %)

집단 구분		사례 수	비율
노동시장 지위	임금근로자	489	48.9
	자영업자	158	15.8
	무급가족종사자	13	1.3
	구직활동	19	1.9
	학생 (취업진학 준비, 직업훈련 중 포함)	82	8.2
	휴직/퇴직	69	6.9
	전업주부	170	17.0
종사상 지위	상용직	417	85.3
	임시직	46	9.4
	일용직	26	5.3
고용 형태	정규직	397	81.2
	비정규직	92	18.8
사회보험 가입	가입	510	51.0
	미가입	150	15.0
	모름/무응답	340	34.0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58	15.8
	300~600만 원 미만	429	42.9
	600만 원 이상	408	40.8
	무응답	5	0.5
주택 소유 형태	자가	725	72.5
	전세	180	18.0
	보증부 월세	56	5.6
	월세(사글세 포함)	23	2.3
	무상 및 기타(사택, 관사 등)	16	1.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2-1]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3. 조사대상자의 복지 욕구 및 경험

조사대상자 가구의 복지 욕구와 복지급여 수급 경험을 조사하였다(〈표 2-3〉 참조). 복지 욕구와 관련하여 가구원 수 분포를 살펴보면, 1인 가구 13.4%, 2인 가구 23.3%, 3인 가구 24.7%, 4인 가구 33.0%, 5인 이상 가구 5.6%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2.95명이다. 조사대상자 중 8.6% 가구에 미취학 아동이 있고, 9.5% 가구에 초등학교 아동이, 16.9% 가구에 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가구원이 최근 1년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복지급여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현금성 복지급여는 18.9%, 현물성 복지서비스는 4.2%가 수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조사대상자의 복지 욕구 및 복지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총 가구원 수	1명	133	13.4
	2명	233	23.3
	3명	237	24.7
	4명	330	33.0
	5명	44	4.4
	6명	11	1.1
	7명 이상	1	0.1
가구 내 미취학 아동 수	0명	912	91.2
	1명	70	7.0
	2명	13	1.3
	3명	3	0.3
가구 내 초등학교 아동 수	0명	903	90.3
	1명	60	6.0
	2명	35	3.5
가구 내 65세 이상 노인 수	0명	831	83.1
	1명	88	8.8
	2명	81	8.1
최근 1년 간 현금성 복지급여 수급 여부	있다	189	18.9
	없다	811	81.1
최근 1년 간 현물성 복지서비스 수급 여부	있다	42	4.2
	없다	958	9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제3장

### 사회정책 영역별 인식과 태도

-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 제2절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제3절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제3장 사회정책 영역별 인식과 태도

###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 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먼저, 우리 국민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소득 격차 축소, 일자리 마련과 같은 거시적 문제부터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실업자, 장애인의 삶의 질 유지, 빈곤층의 삶의 질 유지, 청년층 자립 지원, 저소득 대학생의 학비 지원, 무주택자 주택공급, 보육서비스 제공 등 국민의 삶에 관한 11개 사회정책 영역에 대하여 국민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사회정책 영역에서 절반 이상 국민이 정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정부 책임 인식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장애인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의 81.3%가 ‘장애인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가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당연히 정부 책임이라 응답한 비율도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 중 81.2%는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정부 책임으로 인식하였고, 아동 양육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정부 책임으로 응답한 비율도 81.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3-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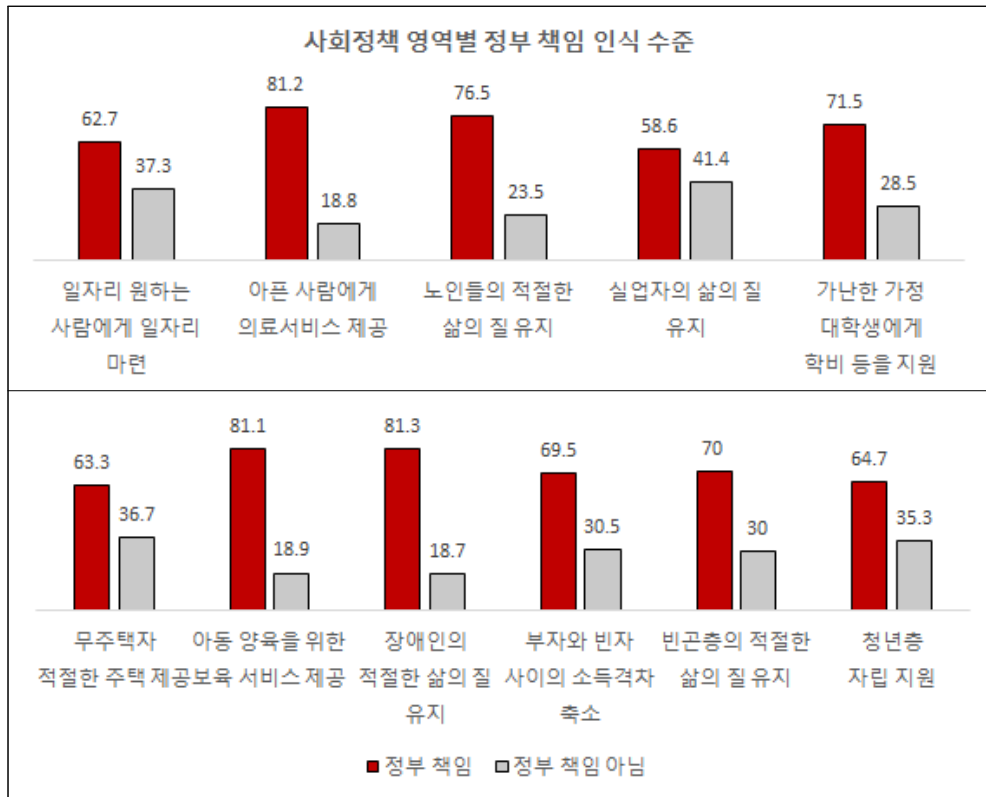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당연히 정부 책임	대체로 정부 책임	대체로 정부 책임 아님	당연히 정부 책임 아님		
① 일자리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마련	15.3	47.4 (62.7)	31.9	5.4	2.27	0.78
②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8.2	53.0 (81.2)	16.6	2.2	1.93	0.73
③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25.0	51.5 (76.5)	21.7	1.8	2.00	0.73
④ 실업자의 삶의 질 유지	16.7	41.9 (58.6)	35.2	6.2	2.31	0.82
⑤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	19.4	52.1 (71.5)	24.1	4.4	2.14	0.77
⑥ 무주택자에게 적절한 주택 제공	14.6	48.7 (63.3)	29.8	6.9	2.29	0.80
⑦ 아동 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29.3	51.8 (81.1)	15.9	3.0	1.93	0.75
⑧ 장애인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29.9	51.4 (81.3)	16.4	2.3	1.91	0.74
⑨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 축소	22.2	47.3 (69.5)	25.7	4.8	2.13	0.81
⑩ 빈곤층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18.3	51.7 (70.0)	27.2	2.8	2.15	0.74
⑪ 청년층 자립 지원	15.6	49.1 (64.7)	27.5	7.8	2.28	0.82

주: 4점 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정부 책임이라고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이 집단별로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성별 차이의 경우,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정부 책임에서 인식 차이(0.2점)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청년층 자립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차이는 0.0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인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2030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높으나, 일자리 정책과 실직자 지원정책은 4050 세대의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제공정책의 경우, 자가소유 비율이 낮은 2030 세대와 그 비율이 높은 60대 이상의 인식 격차가 각각 2.23점, 2.38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정책 영역에서 고소득 집단의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물론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고 분석한 것은 아니므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학력 수준과 상관성이 높은 것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 제공, 빈부 격차 해소는 가구 소득 300~600만 원 미만 집단의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지위별 차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모든 사회정책 영역에서 임금근로자의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는 아동 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책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에서는 대도시일수록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높고, 읍/면 지역일수록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 제공과 청년층 자립지원 영역은 중소도시 거주자의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에서는 모든 사회정책 영역에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중도,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정부 책임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사회복지 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집단별 차이

(단위: 점)

구분	일자리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마련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실업자의 삶의 질 유지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	무주택자 에게 적절한 주택 제공	이동 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 축소	빈곤층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청년층 자립 지원
성별	전체	2.27	1.93	2.00	2.31	2.14	2.29	1.93	2.13	2.15	2.28
	남	2.37	1.99	2.04	2.37	2.19	2.33	1.97	2.17	2.20	2.29
연령대별	여	2.17	1.86	1.97	2.25	2.08	2.25	1.88	2.09	2.09	2.26
	20대	2.23	1.87	1.95	2.35	2.09	2.23	1.90	2.16	2.13	2.24
	30대	2.39	1.89	1.95	2.27	2.10	2.23	1.87	2.11	2.16	2.24
	40대	2.26	1.95	2.04	2.31	2.17	2.36	1.93	2.10	2.16	2.30
	50대	2.25	1.95	2.03	2.26	2.16	2.23	1.92	2.10	2.13	2.30
세대별	60대 이상	2.25	1.97	2.04	2.36	2.14	2.38	1.99	2.18	2.15	2.28
	2030 세대	2.31	1.88	1.95	2.31	2.10	2.23	1.89	2.14	2.14	2.24
	4050 세대	2.25	1.95	2.03	2.28	2.16	2.29	1.93	2.10	2.14	2.30
	60대 이상	2.25	1.97	2.04	2.36	2.14	2.38	1.99	2.18	2.15	2.28
가구 소득별	300만 원 미만	2.28	1.96	1.99	2.35	2.23	2.39	1.96	2.26	2.20	2.42
	300~600만 원 미만	2.28	1.94	2.04	2.32	2.11	2.24	1.94	2.09	2.16	2.25
	600만 원 이상	2.26	1.90	1.97	2.29	2.13	2.31	1.90	2.13	2.12	2.24
	무응답	2.20	1.80	1.80	2.20	2.00	2.00	1.80	2.00	1.80	2.20
노동시장 지위	임금근로자	2.27	1.89	1.97	2.27	2.10	2.26	1.90	2.10	2.13	2.25
	자영업자	2.39	2.11	2.15	2.44	2.18	2.36	2.11	2.18	2.24	2.36
	무급가족종사자	2.08	1.77	2.08	2.69	2.54	2.46	1.77	2.31	2.31	2.38

구분	일자리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마련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실업자의 삶의 질 유지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	무주택자 에게 적절한 주택 제공	아동 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 축소	빈곤층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청년층 자립 지원
정치 성향	구직활동자	2.47	2.11	2.21	2.32	2.42	2.58	1.95	2.11	2.05	2.26
	학생	2.23	1.89	2.00	2.34	2.07	2.21	1.96	2.12	2.15	2.12
	휴직 또는 퇴직	2.25	2.01	1.84	2.30	2.26	2.42	1.87	2.29	2.23	2.25
	전업주부	2.19	1.85	2.01	2.25	2.11	2.25	1.85	2.11	2.06	2.36
합력	좌파	2.21	1.87	1.87	2.14	2.02	2.16	1.85	1.94	1.98	2.26
	중도	2.27	1.90	1.97	2.32	2.10	2.29	1.88	2.14	2.11	2.23
	우파	2.32	2.01	2.14	2.38	2.26	2.37	2.05	2.23	2.30	2.36
	무학	1.00	1.00	1.00	2.00	1.00	2.00	2.00	1.00	1.00	2.00
지역	초졸	2.22	2.00	2.00	2.44	2.33	2.44	2.11	2.33	2.44	2.56
	중졸	2.33	1.96	2.02	2.53	2.38	2.73	1.87	2.40	2.40	2.60
	고졸	2.27	2.01	2.08	2.41	2.21	2.36	2.00	2.21	2.23	2.38
	2/3년제 대졸	2.37	1.98	2.00	2.39	2.15	2.30	1.94	2.12	2.15	2.25
지역	4년제 대졸	2.28	1.87	1.97	2.20	2.07	2.20	1.87	2.07	2.08	2.20
	대학원 이상	1.98	1.73	1.81	2.04	1.90	2.08	1.85	1.90	1.83	1.92
	대도시	2.23	1.88	1.98	2.26	2.15	2.34	1.90	2.10	2.11	2.27
	중소도시(동)	2.30	1.93	1.99	2.33	2.12	2.24	1.92	2.14	2.16	2.23
	읍/면 지역	2.40	2.38	2.50	2.53	2.25	2.45	2.33	2.30	2.35	2.83

주: 4점 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정부 책임이라고 인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우리 국민은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여성 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이들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책임의 주체로 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의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은 장애인(80.9%)으로 나타났고, 아동(71.5%), 노인(62.1%), 여성 가장(54.4%), 저소득층(50.0%), 북한이탈주민(45.4%) 순이었으며, 장기실직자(31.9%)가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본인이 일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기실직자가 40.3%로 가장 높았으며, 저소득층 31.4%, 여성 가장 25.9%, 북한이탈주민 23.9%, 노인 19.1%의 응답자가 ‘본인이 일해서’ 기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였다(〈표 3-3〉 참조).

〈표 3-3〉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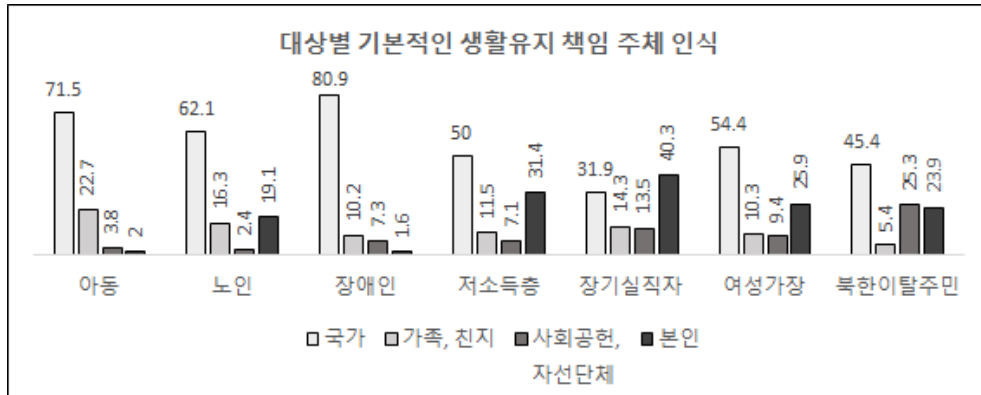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가족, 친지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헌이나 자선단체를 통해서	본인이 일해서
아동	71.5	22.7	3.8	2.0
노인	62.1	16.3	2.4	19.1
장애인	80.9	10.2	7.3	1.6
저소득층	50.0	11.5	7.1	31.4
장기실직자	31.9	14.3	13.5	40.3
여성 가장	54.4	10.3	9.4	25.9
북한이탈주민	45.4	5.4	25.3	23.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사회적 약자 중 아동과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주체에 대한 인식이 연령대 별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였다(〈표 3-4〉 참조). 분석 결과, 아동의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체로 아동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40대에서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족, 친지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인의 기초생활을 국가의 지원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60대 이상은 54.8%로 낮게 나타났고, 20대(64.9%)와 30대(65.1%)에서 오히려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이들 집단의 23.5%가 기본 생활 유지의 책임을 ‘본인이 일해서’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계속하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4〉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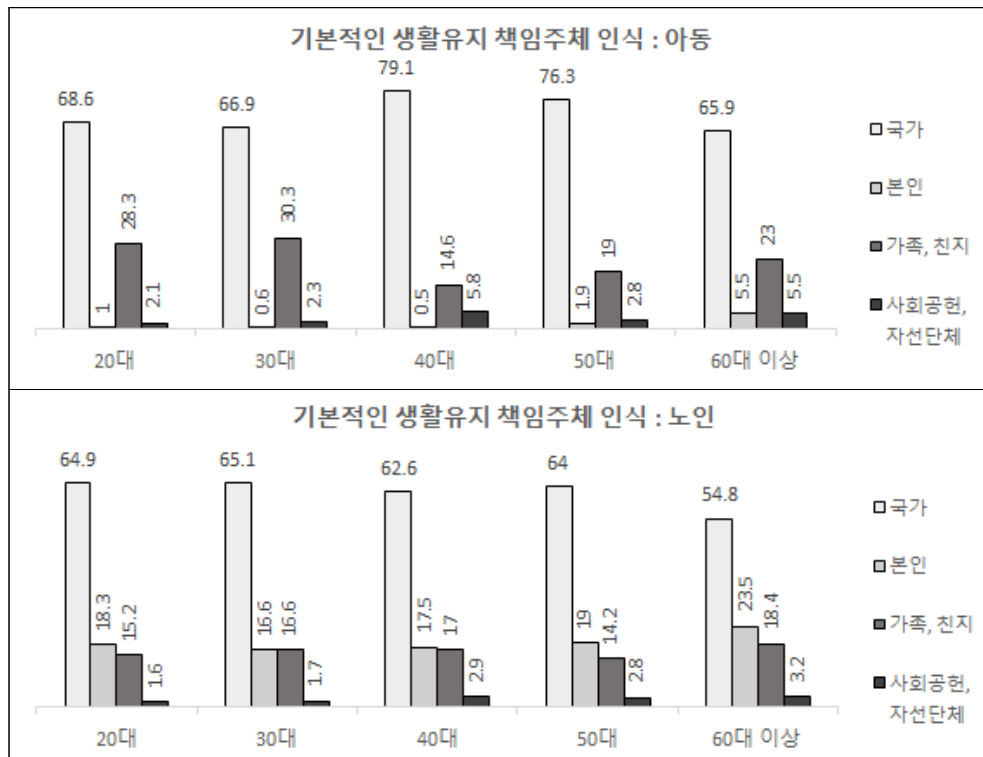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일해서	가족, 친지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헌이나 자선단체를 통해서
아동	20대	68.6	1.0	28.3	2.1
	30대	66.9	0.6	30.3	2.3
	40대	79.1	0.5	14.6	5.8
	50대	76.3	1.9	19.0	2.8
	60대 이상	65.9	5.5	23.0	5.5
노인	20대	64.9	18.3	15.2	1.6
	30대	65.1	16.6	16.6	1.7
	40대	62.6	17.5	17.0	2.9
	50대	64.0	19.0	14.2	2.8
	60대 이상	54.8	23.5	18.4	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3〕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연령대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3.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우리 국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요 사회서비스를 ‘누구에게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중간소득 이하까지’, ‘중상층까지’, ‘모든 국민’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중간소득 이하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5〉 참조). 7개의 복지서비스 모두 ‘중간소득 이하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비율은 주거복지서비스가 48.0%로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대학교육 포함) 43.9%, 고용지원서비스(교육훈련 포함) 41.4%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건의료서비스가 30.3%로 가장 높고, 주거복지서비스가 10.5%로 가장 낮았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아동보육서비스는 보편적 보육제도를 통해 이미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까지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5〉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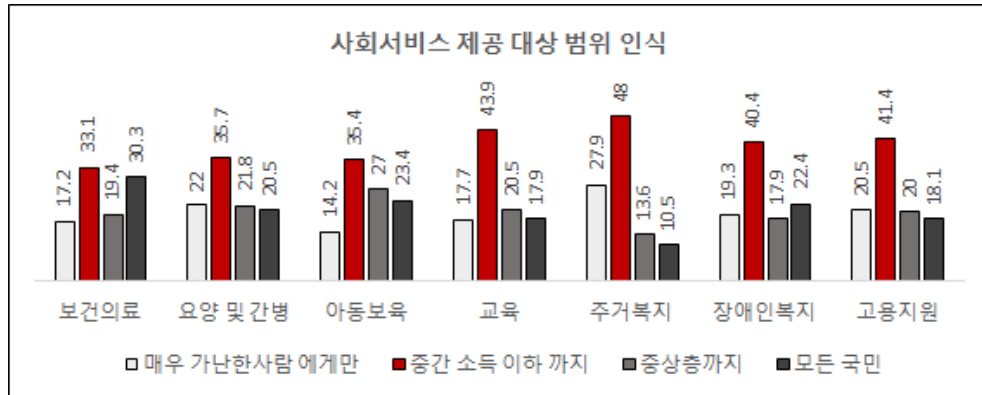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중간소득 이하 사람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잘사는 사람들(중상층)에게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17.2	33.1	19.4	30.3
요양 및 간병서비스	22.0	35.7	21.8	20.5
아동보육서비스	14.2	35.4	27.0	23.4
교육서비스 (대학교육 포함)	17.7	43.9	20.5	17.9
주거복지서비스	27.9	48.0	13.6	10.5
장애인복지서비스	19.3	40.4	17.9	22.4
고용지원서비스 (교육훈련 포함)	20.5	41.4	20.0	1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4]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가구소득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중간소득 이하 사람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사회서비스 영역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3-6〉 참조).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은 다른 소득집단과 비교할 때 ‘매우 가난한 사람에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주거복지서비스에서 동의 비율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사회서비스에서 가구 소득 6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의 지지 비율이 다른 소득집단과 비교할 때 높게 나타났다.

〈표 3-6〉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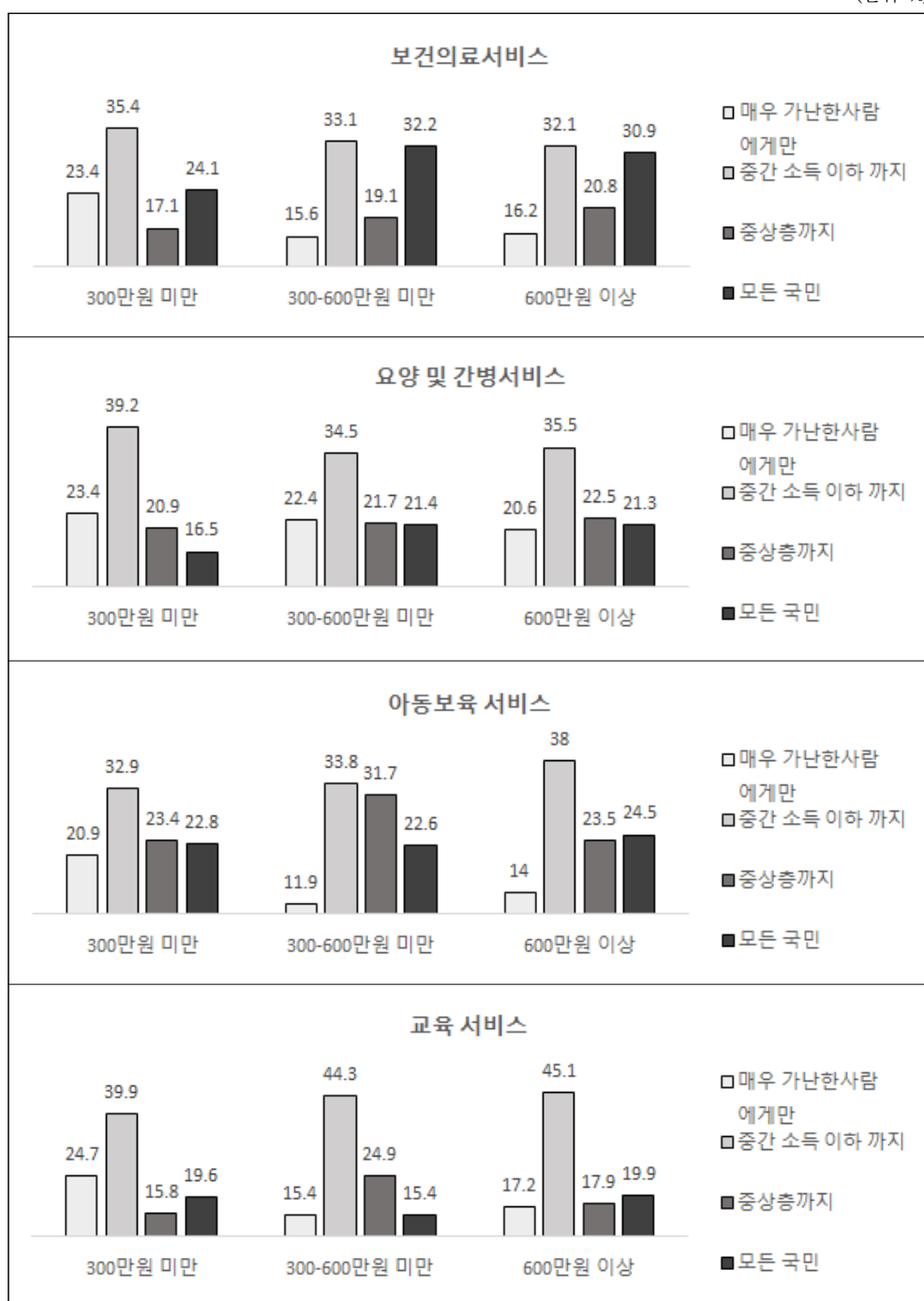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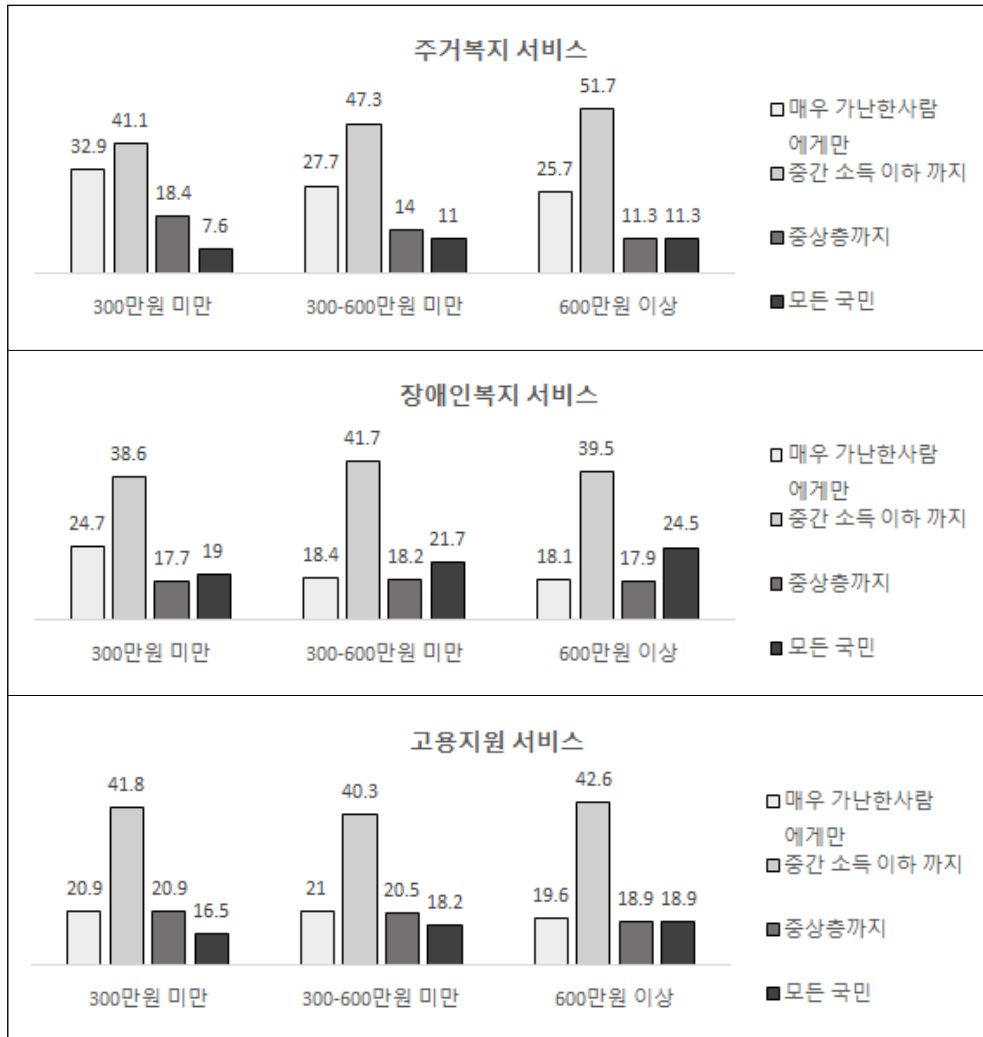
구분		응답 범주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중간소득 이하 사람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잘사는 사람들(중상층) 에게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300만 원 미만	23.4	35.4	17.1	24.1
	300~600만 원 미만	15.6	33.1	19.1	32.2
	600만 원 이상	16.2	32.1	20.8	30.9
요양 및 간병 서비스	300만 원 미만	23.4	39.2	20.9	16.5
	300~600만 원 미만	22.4	34.5	21.7	21.4
	600만 원 이상	20.6	35.5	22.5	21.3
아동보육 서비스	300만 원 미만	20.9	32.9	23.4	22.8
	300~600만 원 미만	11.9	33.8	31.7	22.6
	600만 원 이상	14.0	38.0	23.5	24.5
교육 서비스 (대학교육 포함)	300만 원 미만	24.7	39.9	15.8	19.6
	300~600만 원 미만	15.4	44.3	24.9	15.4
	600만 원 이상	17.2	45.1	17.9	19.9
주거복지 서비스	300만 원 미만	32.9	41.1	18.4	7.6
	300~600만 원 미만	27.7	47.3	14.0	11.0
	600만 원 이상	25.7	51.7	11.3	11.3
장애인 복지 서비스	300만 원 미만	24.7	38.6	17.7	19.0
	300~600만 원 미만	18.4	41.7	18.2	21.7
	600만 원 이상	18.1	39.5	17.9	24.5
고용지원 서비스	300만 원 미만	20.9	41.8	20.9	16.5
	300~600만 원 미만	21.0	40.3	20.5	18.2
	600만 원 이상	19.6	42.6	18.9	1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5]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세대별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은 60대 이상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3-7〉 참조). 2030 세대는 요양 및 간병서비스(38.5%), 아동보육서비스(38.0%), 교육서비스(46.7%), 주거복지서비스(54.1%)에서 ‘중간소득 이하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4050 세대는 보건의료서비스(36.2%), 장애인복지서비스(45.6%), 고용지원서비스(43.4%)에서 ‘중간소득 이하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은 60세 이상

보다는 60세 미만 세대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33.1%), 장애인복지서비스(27.3%), 고용지원서비스(19.4%), 주거복지서비스(10.9%)는 2030 세대에서, 아동보육서비스(24.9%), 요양 및 간병서비스(23.0%)는 4050 세대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7〉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세대별

(단위: %)

구분		응답 범주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중간소득 이하 사람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잘사는 사람들 (중상층)에게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2030 세대	12.0	33.1	21.9	33.1
	4050 세대	16.3	36.2	18.7	28.8
	60대 이상	27.6	27.2	16.6	28.6
요양 및 간병서비스	2030 세대	18.9	38.5	24.6	18.0
	4050 세대	20.1	36.2	20.6	23.0
	60대 이상	30.9	30.0	19.4	19.8
아동보육서비스	2030 세대	9.8	38.0	28.7	23.5
	4050 세대	13.4	35.0	26.6	24.9
	60대 이상	23.0	31.8	24.9	20.3
교육서비스 (대학교육 포함)	2030 세대	12.3	46.7	21.0	19.9
	4050 세대	17.5	42.9	22.8	16.8
	60대 이상	27.2	41.0	15.2	16.6
주거복지서비스	2030 세대	21.6	54.1	13.4	10.9
	4050 세대	26.9	47.7	14.6	10.8
	60대 이상	40.6	38.2	12.0	9.2
장애인복지서비스	2030 세대	14.8	39.9	18.0	27.3
	4050 세대	15.8	45.6	18.7	19.9
	60대 이상	33.6	31.3	16.1	18.9
고용지원서비스	2030 세대	16.4	42.6	21.6	19.4
	4050 세대	19.2	43.4	18.5	18.9
	60대 이상	30.0	35.5	20.3	1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4.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은 정부가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여성 가장,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금성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가운데 어떤 방식을 더욱 지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현금성 소득지원보다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확대하는 것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8〉 참조). 다만 대상별로 지지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아동과 노인은 상대적으로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에 대한 지지 비율이 각각 42.4%, 43.7%로 높게 나타난 데 반해,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은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지지 비율이 각각 76.3%, 80.5%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

(단위: %)

구분	현금성 소득지원을 확대한다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
아동	42.4	57.6
노인	43.7	56.3
장애인	34.4	65.6
저소득층	38.9	61.1
장기실직자	23.7	76.3
여성 가장	38.1	61.9
북한이탈주민	19.5	8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가구소득 집단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으로 현금성 소득지원보다는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를 지지했다. 물론 대상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아동과 노인에 대한 지원에서 특히 저소득층의 현금성 소득지원 방식 선호가 각각 51.9%, 49.4%로 강하게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식의 경우,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39.9%)보다 300~600만 원 미만의 중간소득층(43.1%)이 현금성 소득지원을 더 크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세대별 인식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2030 세대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선호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표 3-9〉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 가구소득-집단별 차이

(단위: %)

구분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확대		
	300만 원 미만	3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아동	51.9	40.8	40.7	48.1	59.2	59.3
노인	49.4	42.0	43.1	50.6	58.0	56.9
장애인	41.1	33.8	31.9	58.9	66.2	68.1
저소득층	39.9	43.1	34.1	60.1	56.9	65.9
장기실직자	25.9	26.1	20.1	74.1	73.9	79.9
여성 가장	36.1	40.3	36.8	63.9	59.7	63.2
북한이탈주민	20.3	20.5	18.1	79.7	79.5	81.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표 3-10〉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 세대-집단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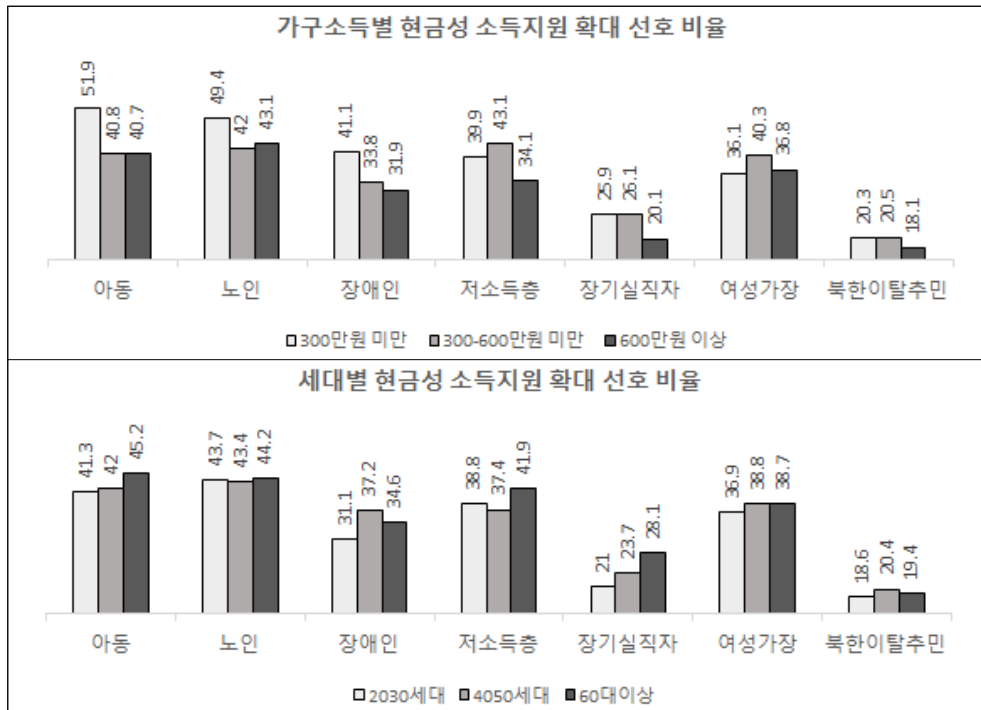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확대		
	2030 세대	4050 세대	60대 이상	2030 세대	4050 세대	60대 이상
아동	41.3	42.0	45.2	58.7	58.0	54.8
노인	43.7	43.4	44.2	56.3	56.6	55.8
장애인	31.1	37.2	34.6	68.9	62.8	65.4
저소득층	38.8	37.4	41.9	61.2	62.6	58.1
장기실직자	21.0	23.7	28.1	79.0	76.3	71.9
여성 가장	36.9	38.8	38.7	63.1	61.2	61.3
북한이탈주민	18.6	20.4	19.4	81.4	79.6	8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6] 사회적 약자 지원방식에 대한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 선호 비율: 가구소득, 세대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5.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이를 누가 맡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긴 하나, 대다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11〉 참조).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는 아동보육서비스가 78.7%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지원서비스(71.7%), 보건의료서비스(70.7%), 노인돌봄서비스(68.7%), 교육서비스(64.2%), 간병서비스(55.1%) 순으로 나타났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개인 차원에서 개별화된 서비스의 경우, 이를 바람직한 제공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선호하지 않는다고보다는, 주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를 기관으로 보고 개별화된 서비스는 보조적 또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민간기관 중 비영리기관보다 영리기관에 대한 선호가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기관보다 영리기관이 질적으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들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현행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질적 제고를 통하여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정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1〉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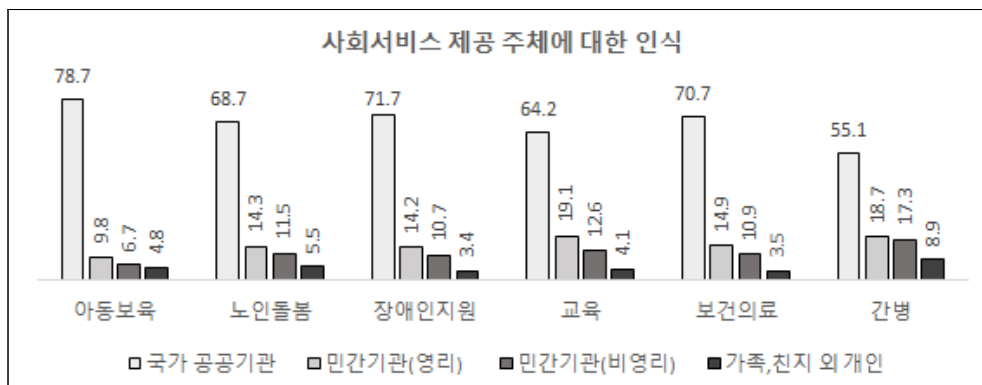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국가(중앙/지방정부)가 설치한 공공기관	민간기관(영리)	민간기관(비영리)	가족, 친지 외 개인(간병인,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아동보육서비스	78.7	9.8	6.7	4.8
노인돌봄서비스	68.7	14.3	11.5	5.5
장애인지원서비스	71.7	14.2	10.7	3.4
교육서비스	64.2	19.1	12.6	4.1
보건의료서비스	70.7	14.9	10.9	3.5
간병서비스	55.1	18.7	17.3	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7]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 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표 3-12〉 참조). 대체로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장애인지원서비스를 제외하면 민간 영리기관, 개별 서비스 제공 주체(가족, 친지 외 개인)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읍/면 지역의 경우,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특히 국·공립기관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들은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를 검토할 때 지역별 차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2〉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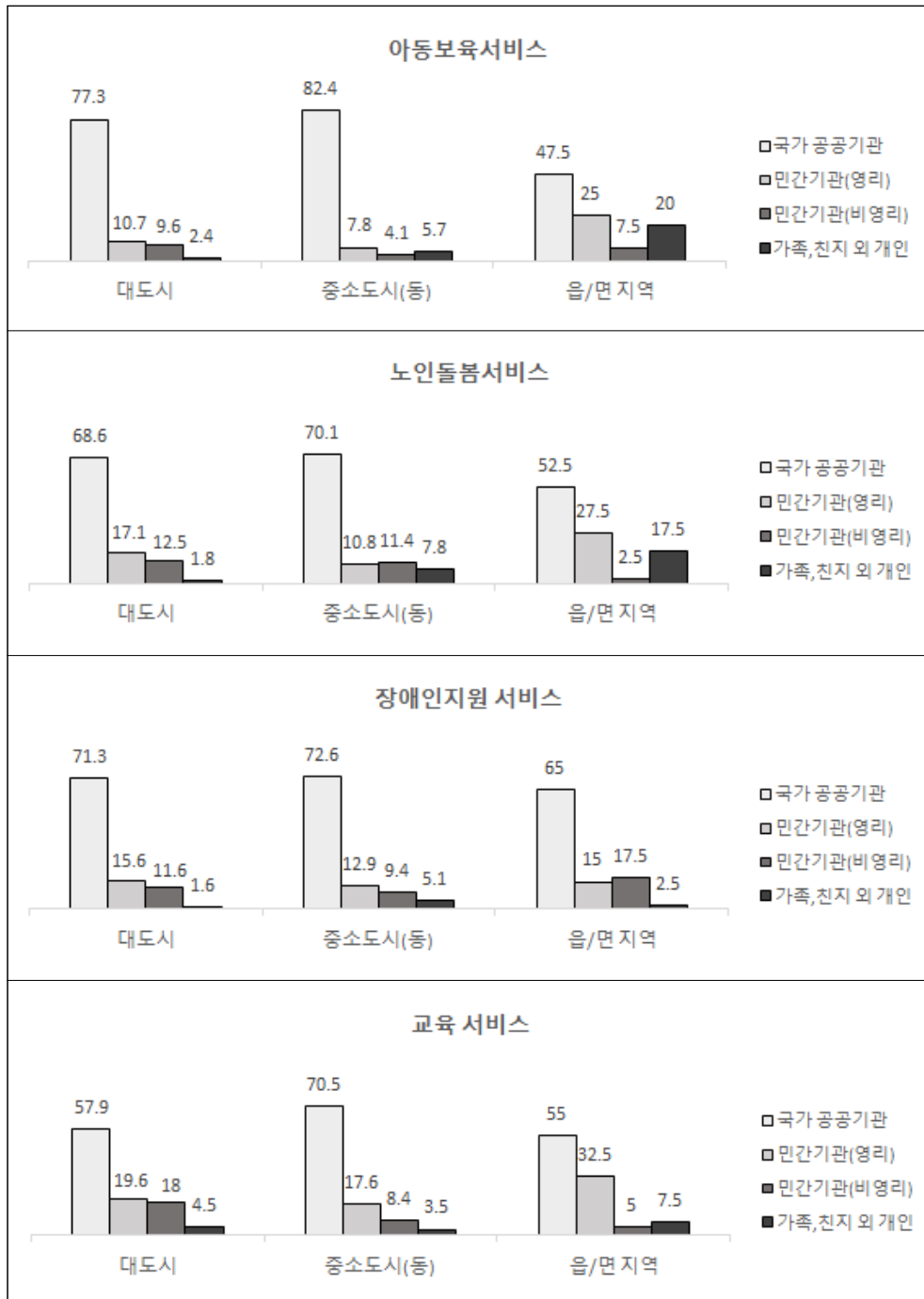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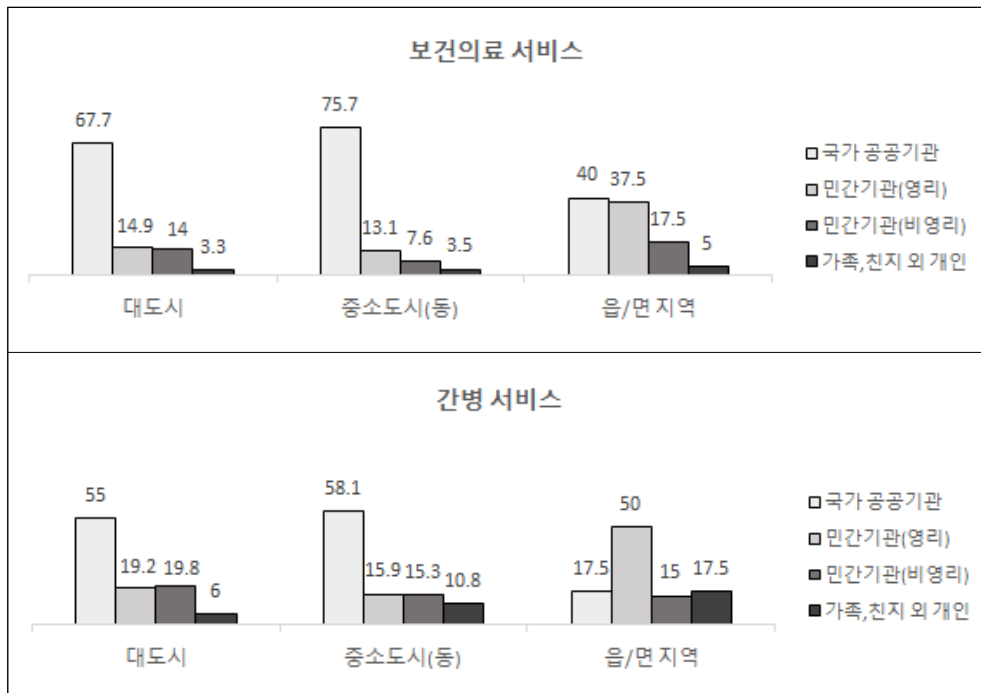
구분		응답 범주			
		국가(중앙/지방정부)가 설치한 공공기관	민간기관 (영리)	민간기관 (비영리)	가족, 친지 외 개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아동보육 서비스	대도시	77.3	10.7	9.6	2.4
	중소도시(동)	82.4	7.8	4.1	5.7
	읍/면 지역	47.5	25.0	7.5	20.0
노인돌봄 서비스	대도시	68.6	17.1	12.5	1.8
	중소도시(동)	70.1	10.8	11.4	7.8
	읍/면 지역	52.5	27.5	2.5	17.5
장애인지원 서비스	대도시	71.3	15.6	11.6	1.6
	중소도시(동)	72.6	12.9	9.4	5.1
	읍/면 지역	65.0	15.0	17.5	2.5
교육서비스	대도시	57.9	19.6	18.0	4.5
	중소도시(동)	70.5	17.6	8.4	3.5
	읍/면 지역	55.0	32.5	5.0	7.5
보건의료 서비스	대도시	67.7	14.9	14.0	3.3
	중소도시(동)	75.7	13.1	7.6	3.5
	읍/면 지역	40.0	37.5	17.5	5.0
간병서비스	대도시	55.0	19.2	19.8	6.0
	중소도시(동)	58.1	15.9	15.3	10.8
	읍/면 지역	17.5	50.0	15.0	1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8]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인식: 지역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6.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이어서 우리 국민은 사회정책 영역별로 정부지출이 어느 정도로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사회정책 영역에서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13〉 참조). 다만 사회정책 영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복지정책 전반에서 현행 수준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61.8%로 가장 높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59.0%), 경제정책(52.3%), 치안정책(50.9%), 교육정책(49.1%), 고용정책(49.0%), 보건의료정책(48.6%)이 뒤를 이었다. 정부지출의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돌봄지원정책(43.0%)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2%로 전체 사회정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안정책(42.1%), 보건의료정책(40.2%), 고용정책(38.6%), 주거정책(35.9%), 경제정책(35.0%), 사회복지정책 전반(25.8%),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23.9%), 남북교류 및 통일

정책(12.8%) 순으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 비율은 사회정책 영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3〉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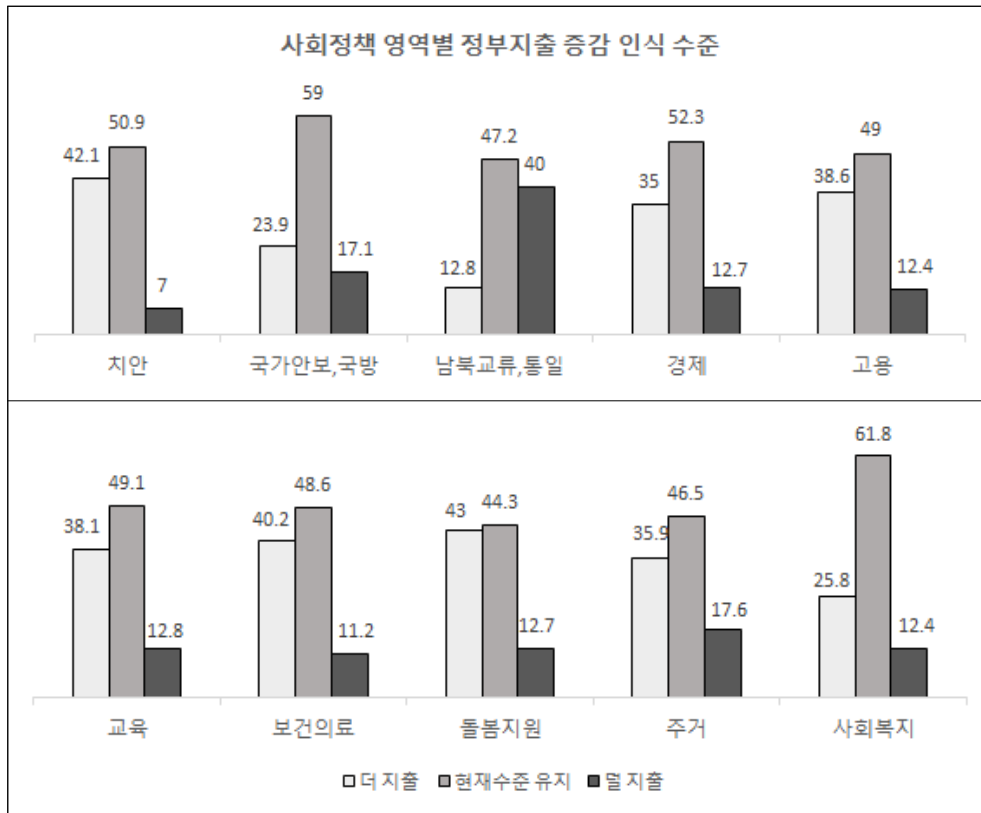
구분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평균	표준편차
치안정책 (범죄 및 폭력 대응)	12.5	29.6	50.9	6.2	0.8	3.47	0.82
		42.1			7.0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4.0	19.9	59.0	14.6	2.5	3.08	0.77
		23.9			17.1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2.1	10.7	47.2	29.3	10.7	2.64	0.89
		12.8			40.0		
경제정책 (산업발전지원 등)	6.4	28.6	52.3	11.1	1.6	3.27	0.80
		35.0			12.7		
고용정책 (일자리지원정책)	6.9	31.7	49.0	11.2	1.2	3.32	0.81
		38.6			12.4		
교육정책	7.4	30.7	49.1	11.6	1.2	3.32	0.82
		38.1			12.8		
보건의료정책	8.5	31.7	48.6	10.3	0.9	3.37	0.81
		40.2			11.2		
돌봄지원정책	13.2	29.8	44.3	11.8	0.9	3.43	0.89
		43.0			12.7		
주거정책	7.5	28.4	46.5	16.0	1.6	3.24	0.87
		35.9			17.6		
사회복지정책 (전반)	6.3	19.5	61.8	11.2	1.2	3.19	0.76
		25.8			12.4		

주: 평균 점수는 '정부 지출이 현재보다 얼마나 확대 혹은 축소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지출(1)~훨씬 덜 지출(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9]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단위: %)



주: 더 지출은 훨씬 더 많이 지출과 조금 더 지출을 합한 값이고 덜 지출은 조금 덜 지출과 훨씬 덜 지출을 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복지정책 영역을 대상별 - 노인, 아동, 청년, 장애인, 빈곤층, 실직자 - 로 세분화하여 정부지출이 어느 정도로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복지정책 영역에서 ‘현재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14 참조). 노인 복지정책(63.0%), 빈곤층 복지정책(60.5%), 장애인 복지정책(60.4%), 실직자 복지정책(60.1%)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0.0% 이상이 현행 수준 유지를 지지했다. ‘현재보다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복지정책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다른 정책들은 실직자 복지정책(16.9%)을 제외하면 20%대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현재보다 정부지출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 복지정책이 30.0%로 가장 높았고, 실직자 복지정책이 23.0%로 뒤를 이었다.

〈표 3-14〉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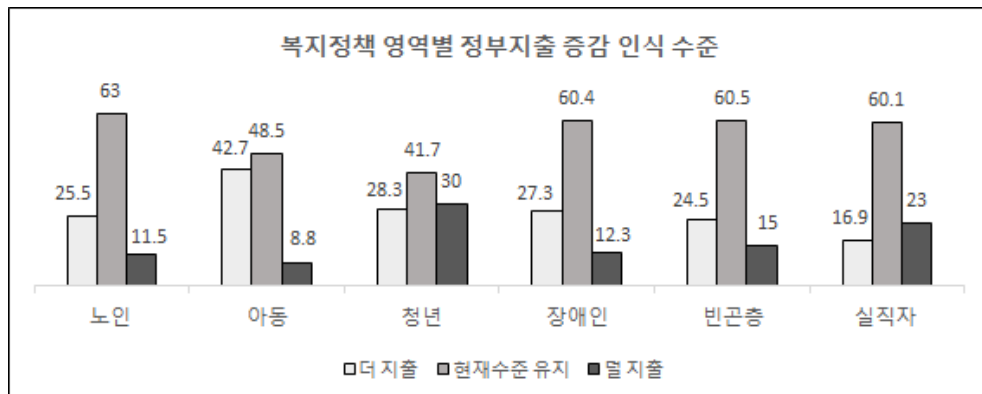
구분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평균	표준편차
노인 복지정책	6.0	19.5	63.0	10.9	0.6	3.19	0.73
		25.5			11.5		
아동 복지정책	11.5	31.2	48.5	8.3	0.5	3.45	0.82
		42.7			8.5		
청년 복지정책	8.1	20.2	41.7	22.6	7.4	2.99	1.02
		28.3			30.0		
장애인 복지정책	5.6	21.7	60.4	10.4	1.9	3.19	0.77
		27.3			12.3		
빈곤층 복지정책	4.8	19.7	60.5	13.7	1.3	3.13	0.75
		24.5			15.0		
실직자 복지정책	2.8	14.1	60.1	19.9	3.1	2.94	0.76
		16.9			23.0		

주: 평균 점수는 '정부 지출이 현재보다 얼마나 확대 혹은 축소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지출(1)~훨씬 덜 지출(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0〕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단위: %)



주: 더 지출은 훨씬 더 많이 지출과 조금 더 지출을 합한 값이고, 덜 지출은 조금 덜 지출과 훨씬 덜 지출을 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세대별로 구분하여 평균값(5점 척도)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2030 세대가 60대 이상보다 정부지출 축소보다는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표 3-15〉 참조). 특히 치안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의 경우, 2030 세대의 평균값은 3.62점으로 4050 세대(3.38점), 60대 이상(3.38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복지정책 영역 중 노인 복지정책만이 60대 이상(3.25점)이 다른 세대보다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3-15〉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세대별

(단위: 점)

구분	영역	2030 세대		4050 세대		60대 이상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정책 영역별	치안정책 (범죄 및 폭력 대응)	3.62	0.85	3.38	0.77	3.38	0.8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3.16	0.78	3.04	0.78	3.03	0.73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2.62	0.90	2.64	0.89	2.68	0.87
	경제정책 (산업발전지원 등)	3.33	0.83	3.28	0.77	3.16	0.80
	고용정책 (일자리지원정책)	3.40	0.79	3.31	0.80	3.20	0.83
	교육정책	3.40	0.81	3.29	0.82	3.23	0.82
	보건의료정책	3.41	0.81	3.33	0.80	3.35	0.84
	돌봄지원정책	3.48	0.87	3.40	0.90	3.40	0.93
	주거정책	3.30	0.85	3.24	0.88	3.14	0.87
	사회복지정책 (전반)	3.24	0.77	3.17	0.75	3.12	0.75
복지정책 영역별	노인 복지정책	3.19	0.75	3.17	0.70	3.25	0.75
	아동 복지정책	3.49	0.83	3.43	0.80	3.41	0.84
	청년 복지정책	3.17	0.99	2.87	1.04	2.93	1.02
	장애인 복지정책	3.23	0.79	3.15	0.76	3.18	0.73
	빈곤층 복지정책	3.17	0.76	3.09	0.74	3.13	0.74
	실직자 복지정책	2.99	0.77	2.89	0.77	2.94	0.71

주: '정부 지출이 현재보다 얼마나 확대 혹은 축소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지출(1)~훨씬 덜 지출(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7. 세금부담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앞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면, 이제는 조세 부담 및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려면 국민 부담도 함께 늘려야 함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복지는 모두의 문제이므로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증액’,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입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 ‘국채(나라 빚) 확대(단, 이 경우 후세대의 부담 증가)’, ‘새로운 형태의 세금(자동화세, 로봇세, 탄소세, 사회복지세, 통일세 등) 도입’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동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으로, 동의 비율이 57.5%로 나타났다(〈표 3-16〉 참조). 다음으로 전 국민의 세금 부담 확대(43.0%), 사회보험료 증액(39.9%), 새로운 세금 도입(37.2%), 국채(나라 빚) 확대(27.3%) 순으로 나타났다.<sup>6)</sup>

6) 2021년 실시된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서도 사회서비스 이용료를 차등부담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이 7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안수란 외, 2021).

〈표 3-16〉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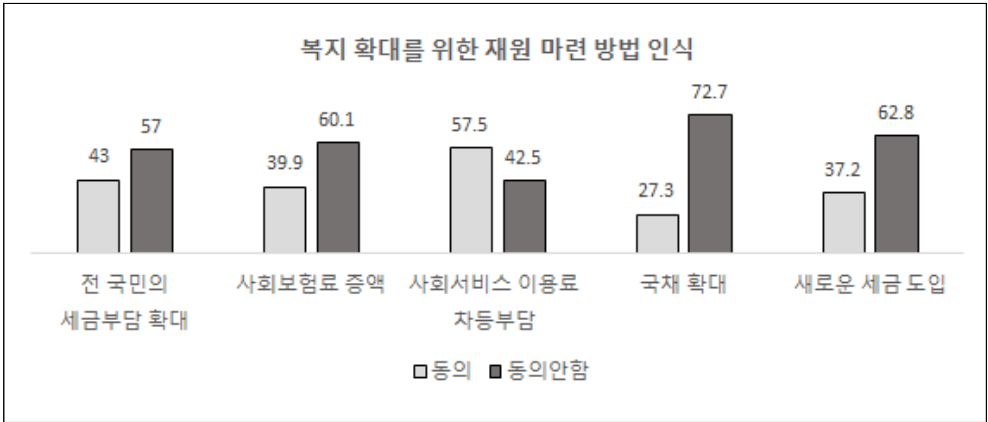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안 함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	5.0	38.0	45.0	12.0	2.36	0.76
		43.0		57.0		
사회보험료 증액	2.5	37.4	45.4	14.7	2.28	0.74
		39.9		60.1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	4.6	52.9	34.6	7.9	2.54	0.71
		57.5		42.5		
국채(나라 빚) 확대	1.0	26.3	49.0	23.7	2.05	0.73
		27.3		72.7		
새로운 세금 도입	8.6	28.6	45.9	16.9	2.29	0.85
		37.2		62.8		

주: 평균 점수는 '다음의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1〕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



주: 동의는 매우 동의, 동의를 합한 값이고 동의 안 함은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안 함을 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세대별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동의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표 3-17〉 참조).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 사회보험료 증액에 대한 동의 수준은 4050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고, 국채 확대에 대한 동의 수준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한 동의 수준은 2030 세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대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국채(나라 빚) 발행의 경우, 20대와 50대는 74.4%가 반대했는데 매우 반대하는 비율 역시 50대가 27%, 20대가 26.2%로 높은 수준이다. 60대 이상 역시 국채 발행에 대한 반대 비율이 69.1%로 높긴 하나 다른 세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젊은 세대의 경우, 국채 발행의 부담이 자신들에게 오는 만큼 이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7〉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세대별

(단위: 점)

구분	2030 세대		4050 세대		60대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	2.34	0.73	2.38	0.78	2.35	0.76
사회보험료 증액	2.26	0.75	2.30	0.73	2.25	0.74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	2.57	0.68	2.56	0.73	2.47	0.71
국채 확대	2.04	0.75	2.03	0.72	2.08	0.73
새로운 세금 도입	2.32	0.84	2.29	0.86	2.24	0.82

주: 평균 점수는 '다음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가구소득 집단별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났다(〈표 3-18〉 참조).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료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채 발행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동의 수준이 높았고, 사회보험료 증액은 중간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동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8〉 복지 확대를 위한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가구소득별

(단위: 점)

구분	300만 원 미만		3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	2.39	0.80	2.37	0.74	2.34	0.75
사회보험료 증액	2.29	0.82	2.25	0.73	2.30	0.71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	2.40	0.72	2.52	0.69	2.62	0.71
국채 확대	2.12	0.73	2.00	0.73	2.07	0.74
새로운 세금 도입	2.28	0.84	2.27	0.82	2.32	0.88

주: 평균 점수는 '다음의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나.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의견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만약 향후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면, 소득세를 높이는 방안,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높이는 방안, 법인세를 높이는 방안, 재산세를 높이는 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각각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었다(〈표 3-19〉 참조).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은 법인세에 한하여 증세에 동의하며, 나머지 세금에 대하여는 모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법인세 증액은 65.8%가 동의한 것에 반해, 소득세와 소비세는 각각 60.4%, 63.3%가 증액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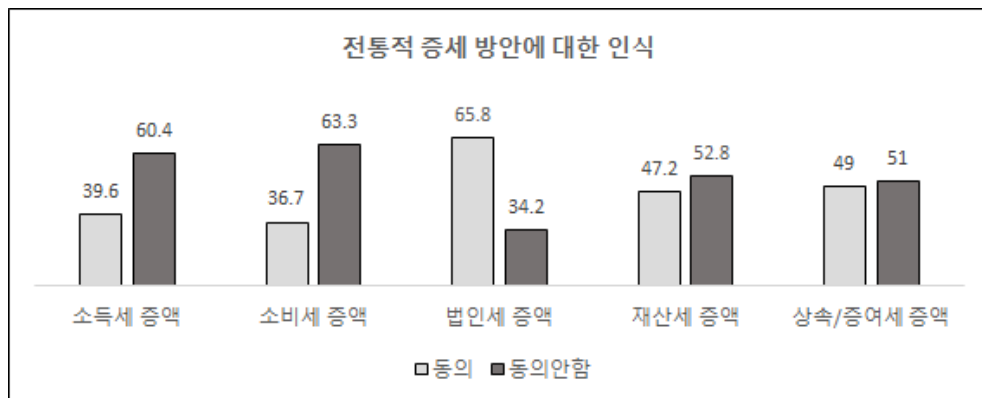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안 함		
소득세 증액	1.9	37.7	46.8	13.6	2.28	0.72
	39.6		60.4			
소비세 증액	4.3	32.4	48.3	15.0	2.26	0.76
	36.7		63.3			
법인세 증액	26.7	39.1	23.8	10.4	2.82	0.94
	65.8		34.2			
재산세 증액	10.2	37.0	37.5	15.3	2.42	0.87
	47.2		52.8			
상속/증여세 증액	9.5	39.5	35.1	15.9	2.43	0.87
	49.0		51.0			

주: 평균 점수는 '전통적 증세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2〕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동의는 매우 동의, 동의를 합한 값이고 동의 안 함은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안 함을 합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세대 집단별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모든 증세 방안에 대해 4050 세대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세, 법인세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은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표 3-20〉 참조). 소득계층별 인식 차이의

경우,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증세 방안에 대해 가구소득 300~600만 원 미만의 중간 소득 집단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증액에 대한 동의 수준은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3-21〉 참조).

〈표 3-20〉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세대별

(단위: 점)

구분	2030 세대		4050 세대		60대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득세 증액	2.23	0.70	2.34	0.71	2.24	0.74
소비세 증액	2.19	0.73	2.34	0.76	2.22	0.81
법인세 증액	2.84	0.90	2.87	0.97	2.69	0.95
재산세 증액	2.42	0.85	2.45	0.88	2.37	0.88
상속/증여세 증액	2.43	0.86	2.46	0.86	2.36	0.90

주: 평균 점수는 '전통적 증세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표 3-21〉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가구소득별

(단위: 점)

구분	300만 원 미만		3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득세 증액	2.22	0.74	2.30	0.69	2.28	0.73
소비세 증액	2.18	0.76	2.29	0.73	2.27	0.80
법인세 증액	2.69	1.00	2.82	0.93	2.88	0.94
재산세 증액	2.34	0.87	2.44	0.83	2.43	0.91
상속/증여세 증액	2.42	0.90	2.44	0.84	2.41	0.89

주: 평균 점수는 '전통적 증세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다. 조세 부담 의향

다음으로 조세 부담에 대한 의향을 조사하였다. 첫째, 자신이 내는 세금이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대부분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둘째, 세금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셋째, 소득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상의 3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10점 척도로 질문했다.

분석 결과, 평균값은 5점대로 나타났고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는 평균(5.22점)이 가장 높았고, 모든 국민을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이 평균 5.18점,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이 평균 5.03점으로 나타났다(〈표 3-22〉 참조).

〈표 3-22〉 조세 부담 의향 수준

(단위: %, 점)

구분	<div> <div>전혀 더 낼 생각 없음</div> <div>←</div> <div>→</div> <div>많이라도 더 낼 것</div> </div>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6.1	8.2	11.1	10.8	18.7	19.7	16.0	5.1	3.2	1.1	5.03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6.0	7.2	10.1	9.9	18.5	20.4	16.6	6.7	2.6	2.0	5.18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5.5	6.7	7.9	10.2	21.1	22.2	16.3	7.0	1.6	1.5	5.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세대 집단별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모두 2030 세대에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높은 것은 4050 세대였고, 근소한 차이로 2030 세대가 그 뒤를 이었다(〈표 3-23〉 참조).

〈표 3-23〉 조세 부담 의향 수준: 세대별

(단위: 점)

구분	2030 세대		4050 세대		60대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5.14	2.03	5.10	2.05	4.74	2.23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5.32	2.09	5.28	2.10	4.76	2.14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5.29	1.89	5.31	1.98	4.90	2.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가구소득 집단별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았고,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과 소득 증가 시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은 중간소득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표 3-24〉 참조).

〈표 3-24〉 조세 부담 의향 수준: 가구소득별

(단위: 점)

구분	300만원 미만		3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4.80	2.18	5.01	1.94	5.12	2.19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5.04	2.17	5.26	1.98	5.14	2.23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	5.09	2.20	5.28	1.86	5.18	2.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제2절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크게 노인 복지정책과 아동 및 청년 정책의 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노인 복지정책 개혁 방향은 노인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노인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인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복지정책 개혁 방향은 보육서비스와 아동수당의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덧붙여 청년 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들은 향후 아동, 청년, 노인 대상 정책들을 개혁하는 과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 1. 노인복지정책 개혁 방향

#### 가.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먼저,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야 할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요양과 치료’를 우선 제공해야 할 복지 혜택으로 꼽은 응답자가 38.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24.1%), 일자리 제공(23.1%), 여가와 문화생활(9.7%), 가사 도움(4.4%) 순으로 나타났다(〈표 3-25〉 참조).

세대별로 살펴보면, 당사자인 60대 이상은 41.0%가 요양과 치료를 우선 제공 정책으로 꼽았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중간소득층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고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필요와는 별개로 일을 통한 사회참여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양과 치료에 대한 요구는 고소득층이 40.2%로 가장 높고, 저소득층 역시 39.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5〉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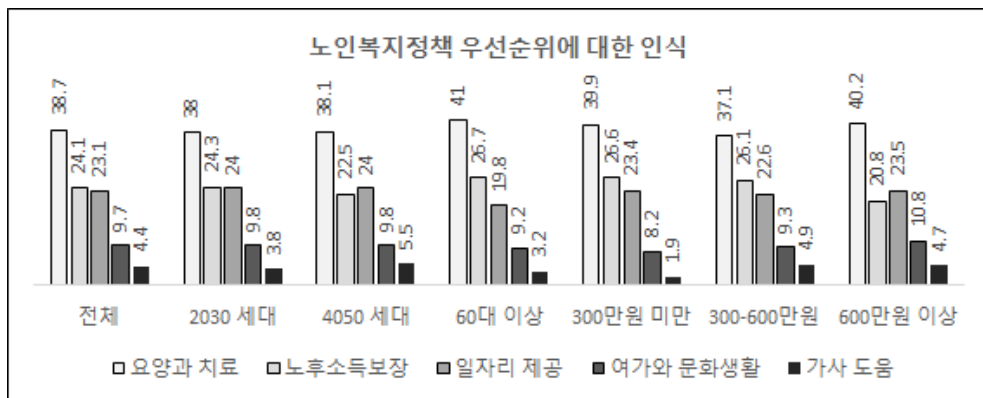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요양과 치료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일자리 제공	여가와 문화생활	가사 도움
전체		38.7	24.1	23.1	9.7	4.4
세대	2030 세대	38.0	24.3	24.0	9.8	3.8
	4050 세대	38.1	22.5	24.0	9.8	5.5
	60대 이상	41.0	26.7	19.8	9.2	3.2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39.9	26.6	23.4	8.2	1.9
	300~600만 원	37.1	26.1	22.6	9.3	4.9
	600만 원 이상	40.2	20.8	23.5	10.8	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3]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나.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첫째, 연금 급여를 줄이는 대신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료, 요양, 주거, 가사 지원 등)를 늘리는 방향, 둘째,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연금 지급을 늦추는 방향이다. 분석 결과, 연금 급여를 줄이는 대신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에 대한 동의 비율은 47.0%로 매우 높고, 반대 비율은 14.8%로 나

났다.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연금 지급을 늦추는 방향에 대한 동의 비율 역시 유사하게 46.7%로 높고, 반대 비율은 17.7%로 나타났다(〈표 3-26〉 참조).

〈표 3-26〉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연금 급여 줄이는 대신 복지서비스 확대	5.7	41.3	38.2	13.6	1.2	3.37	0.83
	47.0			14.8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대신 연금 지급 시기 연장	6.0	40.7	35.6	14.8	2.9	3.32	0.90
	46.7			17.7			

주: 평균 점수는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세대 및 가구소득 집단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연금 급여를 줄이는 대신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료, 요양, 주거, 가사 지원 등)를 늘리는 방향의 경우 60대 이상은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동의 비율이 낮고, 저소득층은 다른 소득계층보다 동의 비율이 낮았다.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연금 지급을 늦추는 방향의 경우, 4050 세대의 동의 비율이 48.9%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은 43.8%로 낮다. 가구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중간소득층의 동의 비율이 49.4%로 가장 높고, 저소득층의 동의 비율이 42.4%로 가장 낮다(〈표 3-27〉 참조).

〈표 3-27〉 노인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비율: 세대별, 가구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세대			가구소득		
	2030 세대	4050 세대	60대 이상	300만 원 미만	3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연금 급여 줄이는 대신 복지서비스 확대	47.0	49.1	42.8	41.8	49.7	46.8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대신 연금 지급 시기 연장	45.9	48.9	43.8	42.4	49.4	4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다.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에 대한 인식

202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기초연금을 개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먼저 ‘1순위’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급대상은 현행대로 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지 비율이 29.2%로 가장 높았고,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23.4%,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23.2%로 뒤를 이었다. 현행 유지는 응답자의 14.0%만이 동의했고, 지급대상과 급여수준 모두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10.2%로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표 3-28〉 참조).

세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27.2%로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자신들까지 포괄할 수 있게 하는 지급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선호가 27.0%로 가장 높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급대상은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32.3%로 가장 높다.

〈표 3-28〉 바람직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 수준: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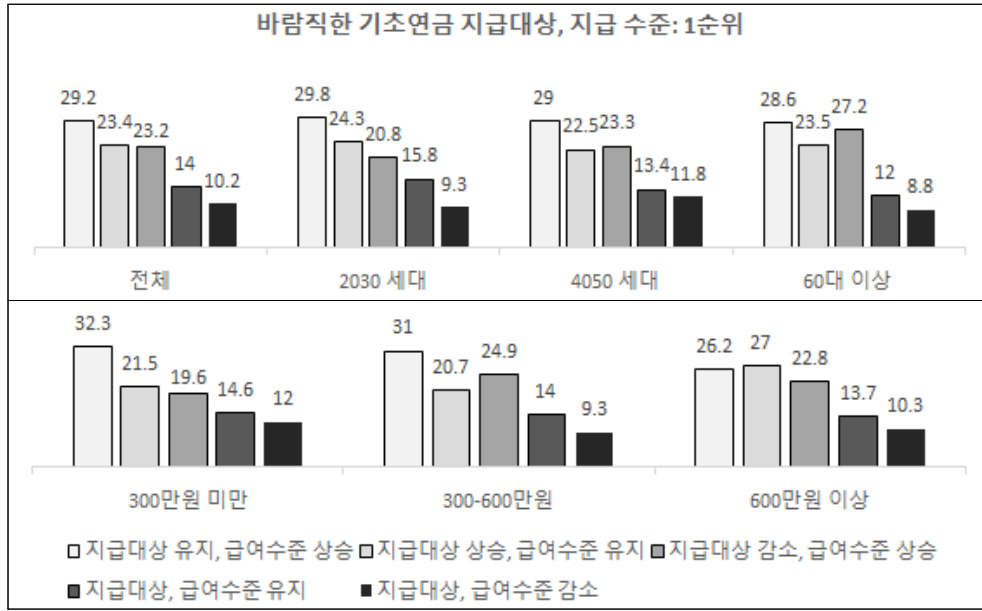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지급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인다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인다	지급 대상과 급여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도 높인다
전체		29.2	23.4	23.2	14.0	10.2
세대	2030 세대	29.8	24.3	20.8	15.8	9.3
	4050 세대	29.0	22.5	23.3	13.4	11.8
	60대 이상	28.6	23.5	27.2	12.0	8.8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32.3	21.5	19.6	14.6	12.0
	300~600만 원	31.0	20.7	24.9	14.0	9.3
	600만 원 이상	26.2	27.0	22.8	13.7	1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4] 바람직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지급 수준: 1순위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복수 응답(1순위, 2순위 포함)’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3-29〉 참조), 전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9〉 바람직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 수준: 복수 응답

(단위: %)

구분		지급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인다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인다	지급 대상과 급여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도 높인다
전체		54.0	45.0	34.6	34.4	29.8
세대	2030 세대	52.5	47.5	32.2	36.1	30.6
	4050 세대	55.2	43.6	34.5	33.8	30.9
	60대 이상	54.4	43.3	38.7	32.7	26.3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51.9	42.4	31.6	39.9	30.4
	300~600만 원	56.9	42.4	37.3	32.4	29.1
	600만 원 이상	52.0	48.3	33.1	34.6	3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라.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때 개혁 조치는 ‘지금 바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제시한 개혁방안은 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②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 ③ 급여를 덜 받도록 해야 한다, ④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유지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 즉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이 31.8%,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이 16.2%, 급여를 덜 받도록 하는 방안이 7.7%로 선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3-30〉 참조).

세대별로 살펴보면, 현행 유지 선호는 현재 60대 이상이 52.5%로 가장 높고, 4050 세대가 41.0%로 60대 이상과는 약 12%p 가까이 인식 격차를 보여 세대 간의 인식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수급개시연령 연장에 대한 선호는 2030 세대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은 가장 낮다.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4050 세대의 선호가 가장 높고,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은 선호하지 않는다. 급여를 덜 받는 방안의 경우, 선호 비율이 모든 세대에서 낮긴 하나 상대적으로 2030 세대의 선호가 높은 편이다. 급여 감소에 대한 동의 비율은 4050 세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현행 유지에 대한 선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에 대한 선호는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0〉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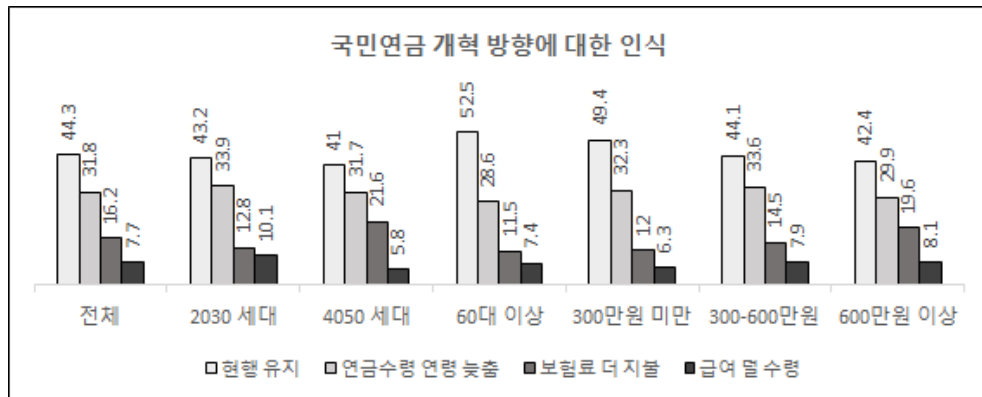
구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급여를 덜 받도록 해야 한다
전체		44.3	31.8	16.2	7.7
세대	2030 세대	43.2	33.9	12.8	10.1
	4050 세대	41.0	31.7	21.6	5.8
	60대 이상	52.5	28.6	11.5	7.4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49.4	32.3	12.0	6.3
	300~600만 원	44.1	33.6	14.5	7.9
	600만 원 이상	42.4	29.9	19.6	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5]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2. 아동 및 청년복지 정책 개혁 방향

### 가. 보육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은 보육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정책 방향은 ① 모든 계층이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맞벌이나 일하는 한부모 가족이 더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현금성 양육수당(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급하고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시설 선택은 부모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세 가지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모두 평균값이 3점을 상회하여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1〉 참조).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맞벌이나 일하는 한부모 가족이 더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89점), 현금성 양육수당(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급하고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시설 선택은 부모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3.66점). 모든 계층이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3.33점). 이 같은 결과는 현재와 같은 무상 보육 정책 방식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부모의 선택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요구들이 향후 보육서비스 정책 개혁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대별로 보면,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 2030 세대는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맞벌이나 한부모 가족의 장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맞벌이가 속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상보육에 대한 동의 수준은 고소득층이 가장 낮다.

〈표 3-31〉 보육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단위: 점)

구분		모든 계층이 무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맞벌이/한부모 가족이 장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현금성 양육수당 지급(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및 시설 선택은 부모가 결정)
전체		3.33	3.89	3.66
세대	2030 세대	3.42	3.95	3.66
	4050 세대	3.28	3.86	3.66
	60대 이상	3.28	3.84	3.65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3.30	3.80	3.61
	300~600만 원	3.40	3.87	3.62
	600만 원 이상	3.26	3.93	3.71

주: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나.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에 대한 인식

현재 만 8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향후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과 계층, 급여 수준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연령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현행 유지에 대한 지지 비율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급 연령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24.7%, 만 18세 아동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13.7%,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11.7%의 지지를 받았다. 세대별로 보면 2030 세대는 지급 연령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27.6%가 초등학교까지는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했고, 4050 세대 역시 25.7%가 이 방안을 지지했다. 소득계층별로는 현행 유지에 대한 지지는 중간소득층(53.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는 저소득

층(29.7%)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32〉 참조).

〈표 3-32〉 아동수당 지급 연령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단위: %)

구분		현행 유지 (만 8세까지)	초등학생까지 확대	중학생까지 확대	만 18세 아동 전체로 확대
전체		49.9	24.7	11.7	13.7
세대	2030 세대	45.4	27.6	12.6	14.5
	4050 세대	50.1	25.7	11.3	12.9
	60대 이상	57.1	18.0	11.1	13.8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48.1	29.7	10.8	11.4
	300~600만 원	53.1	22.1	10.5	14.2
	600만 원 이상	47.3	25.5	13.5	1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아동수당 지급 계층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현행 유지에 대한 지지 비율이 49.1%로 가장 높고,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 29.4%, 중간소득층 아동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18.2%의 지지를 얻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현행 유지는 저소득층에게서 지지 비율이 높았고, 중간소득층 아동까지 지원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서 지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33〉 참조).

〈표 3-33〉 아동수당 지급 계층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단위: %)

구분		현행 유지 (모든 아동)	저소득층 가구 아동에게만	중간소득층 가구 아동까지	중상층 가구 아동까지
전체		49.1	29.4	18.2	3.3
세대	2030 세대	49.5	27.6	19.1	3.8
	4050 세대	46.8	30.5	19.2	3.6
	60대 이상	53.0	30.4	14.7	1.8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56.3	24.1	15.8	3.8
	300~600만 원	49.4	30.5	17.0	3.0
	600만 원 이상	46.3	30.1	20.6	2.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현행 유지하는 방안은 71.3%가 찬성했고, 28.7%는 현재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찬성했다.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현재보다 급여가 인상되는 방안에 대한 지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계층별로는 중간소득층의 지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34〉 참조).

〈표 3-34〉 아동수당 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단위: %)

구분		현행 유지	현재보다 인상
전체		71.3	28.7
세대	2030 세대	68.9	31.1
	4050 세대	72.2	27.8
	60대 이상	73.7	26.3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73.4	26.6
	300~600만 원	70.9	29.1
	600만 원 이상	71.6	2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다. 청년복지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모두 청년 지원정책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조사에서는 청년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청년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식은 ‘현금성 소득지원(청년수당 등)’과 ‘비현금성 사회서비스(교육, 주거,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이다.

먼저, 현금성 소득지원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표 3-35〉 참조),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가장 높았다. 세대별로 보면, 2030 세대 역시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긴 하나, 다른 세대에 비해 응답 비율이 낮았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모든 계층에서 저소득층 청년에게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저소득층은 저소득 청년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간소득층은 중간소득층 청년에게만 제공

해야 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모든 청년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35〉 현금성 청년복지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층 가구 청년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중간소득층 가구 청년까지 제공해야 한다	모든 청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체		51.8	33.2	15.0
세대	2030 세대	44.0	39.1	16.9
	4050 세대	52.8	33.3	13.9
	60대 이상	63.1	23.0	13.8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55.7	31.0	13.3
	300~600만 원	47.6	38.2	14.2
	600만 원 이상	54.7	28.9	16.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비현금성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현금성 지원과 달리 중간소득층 청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이 36.8%로 가장 높고 근소한 차이인 35.2%가 모든 청년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표 3-36〉 참조). 즉, 현금지원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사회서비스 지원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지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로 보면, 2030 세대는 40.7%가 중간소득층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든 청년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36.3%로 뒤를 이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현금성 지원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 청년에게만, 중간소득층은 중간소득층 청년에게만, 고소득층은 모든 청년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36〉 비현금성 청년복지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세대별, 가구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층 가구 청년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중간소득층 가구 청년까지 제공해야 한다	모든 청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체		28.0	36.8	35.2
세대	2030 세대	23.0	40.7	36.3
	4050 세대	28.5	37.4	34.1
	60대 이상	35.5	29.0	35.5
소득 집단	300만 원 미만	32.9	32.3	34.8
	300~600만 원	25.6	42.0	32.4
	600만 원 이상	28.7	33.1	3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제3절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최근 복지 이슈로서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주창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본소득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월 소득을 지급하는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많은 사회보장급여가 대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답변할 수 있게 하였다.<sup>7)</sup>

우선,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표 3-37〉 참조). 이에 대해 찬성은 40.6%, 반대는 59.4%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33.2%가 찬성하고 66.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한편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유지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았다.

〈표 3-37〉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근로 여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 도입	3.1	37.5	46.0	13.4	2.30	0.74
기존의 복지제도 모두 없애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제공	1.5	31.7	52.1	14.7	2.20	0.70

주: 평균 점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1)~매우 반대한다(4)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전체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가 더 우세한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집단별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찬성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3-38〉 참조). 근로 여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를 보면, 여성(34.7%)보다는 남성(46.3%)의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는 2030 세대(42.9%)에서 기본소득 도입 찬성 비율이 높으며, 4050 세대(37.4%)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낮다.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지지한다(36.8%).

소득집단별 분포를 보면, 300만 원 이하 집단이 46.2%로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 미만 저소득 집단이 36.7%로 지지 비율이 가장 높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사례 수가 적긴 하나 무급가족종사자(53.8%)와 구직활동 중인 집단(47.4%), 휴직 혹은 퇴직자 집단(46.3%)이 기본소득 도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업주부(31.8%), 자영업자(37.3%), 학생(37.8%)의 지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 성향별 분포를 보면, 좌파라고 응답한 경우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비율이 46.8%로 중도(39.6%)나 우파(3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찬성이 낮게 나타나고(36.8%), 중소도시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44.0%). 이러한 경향은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3-38〉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근로 여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 도입	기존의 복지제도 모두 없애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제공
성별	남성	(507)	46.3	37.1
	여성	(493)	34.7	29.2
세대	2030 세대	(366)	42.9	34.5
	4050 세대	(417)	37.4	30.2
	60대 이상	(217)	42.8	36.8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58)	46.2	36.7
	300~600만 원 미만	(429)	39.9	34.0
	600만 원 이상	(408)	39.0	31.4
노동시장 지위	임금근로자	(489)	43.8	33.9
	자영업자	(158)	37.3	31.6
	무급가족종사자	(13)	53.8	30.8
	구직활동	(19)	47.4	42.1
	학생	(82)	37.8	32.9
	휴직/퇴직	(69)	46.3	36.2
	전업주부	(170)	31.8	30.6
정치 성향	좌파	(188)	46.8	35.6
	중도	(497)	39.6	31.2
	우파	(315)	38.5	35.1
지역	대도시	(449)	36.8	32.3
	중소도시(동)	(511)	44.0	34.1
	읍/면 지역	(40)	40.0	3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2. 통일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통일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다. 통일이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미칠 영향과 통일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통해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통일이 되면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표 3-39〉 참조).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6 %는 개선될 것이라고, 63.2%는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통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동일한 문항에 대해 개선(26.6%)과 악화(42.1%)로 응답한 것에 비해 통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개선 15.7%, 악화 58.5%)이 여성(개선 11.3%, 악화 67.9%)보다 통일의 영향을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통일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개선 12.0%, 악화 65.0%). 한편, 좌파 성향은 12.2%가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중도는 15.7%, 우파는 11.2%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9〉 통일이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을 것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전체		3.6	10.0	23.2	44.8	18.4	2.36	1.01	(1,000)
성별	남성	4.9	10.8	25.6	39.4	19.1	2.43	1.07	(507)
	여성	2.2	9.1	20.7	50.3	17.6	2.28	0.93	(493)
세대	2030 세대	3.0	11.2	24.3	40.7	20.8	2.35	1.02	(366)
	4050 세대	4.6	9.4	22.3	49.2	14.6	2.40	1.00	(417)
	60대 이상	2.8	9.2	23.0	43.3	21.7	2.28	1.00	(217)
정치 성향	좌파	3.2	9.0	26.6	42.6	18.6	2.36	0.99	(188)
	중도	4.2	11.5	19.9	46.1	18.3	2.37	1.04	(497)
	우파	2.9	8.3	26.3	44.1	18.4	2.33	0.96	(315)

주: 평균 점수는 '통일이 되면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크게 개선될 것이다(1)~크게 악화될 것이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통일과 통일에 따른 사회지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급여 등 - 확대를 위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8%는 더 낼 생각이 있지만, 66.2%는 더 낼 의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통일에 따른 사회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금 납부에 상당히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3-40〉 참조).

집단별 인식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이 37.3%, 여성은 30.2%로 여성의 세금부담 의향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는 4050 세대가 세금을 더 낼 의향에 38.7%로 응답하여, 2030 세대(31.2%)나 60대 이상(29.0%)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의 36.0%, 좌파의 35.1%가 납세 의사를 보이는 데 비해, 우파는 29.6%로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0〉 통일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많이 더 낼 생각 있다	조금 더 낼 생각 있다	별로 더 낼 생각 없다	전혀 더 낼 생각 없다			
전체	1.8	32.0	47.5	18.7	2.17	0.74	(1,000)
성별	남	2.6	34.7	44.4	2.21	0.77	(507)
	여	1.0	29.2	50.7	2.12	0.71	(493)
세대	2030 세대	1.4	29.8	46.7	2.10	0.75	(366)
	4050 세대	2.2	36.5	46.5	2.26	0.73	(417)
	60대 이상	1.8	27.2	50.7	2.11	0.73	(217)
정치 성향	좌파	2.7	32.4	47.3	2.20	0.75	(188)
	중도	2.0	34.0	45.7	2.20	0.75	(497)
	우파	1.0	28.6	50.5	2.10	0.72	(315)

주: 평균 점수는 '통일과 통일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해 많이 더 낼 생각이 있다(1)~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4)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3.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인식

4차 산업혁명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이슈이다. 우리 국민은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 결과 나타날 상황에 대한 전망, 그에 따른 대응 방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 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다음의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로봇과 컴퓨터의 새로운 발전들이 많은 일자리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기술들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들을 수행하는 환경에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미래에는 고도로 발달된 로봇과 컴퓨터가 오늘날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전혀 모른다(2.7%)’와 ‘잘 모른다(27.1%)’를 제외한 70.2%의 응답자가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세대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일수록, 새로운 기술 변화를 빨리 수용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알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다. 남성의 74.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6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2030 세대의 16.1%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77.0%로 가장 높았다. 4050 세대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4%이며, 60대 이상은 5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좌파가 72.4%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중도가 69.9%, 우파는 69.5%로 나타났다(〈표 3-41〉 참조).

〈표 3-4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대체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응답 범주				사례 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11.1	59.1	27.1	2.7	(1,000)
성별	남성	13.8	60.6	22.9	2.8	(507)
	여성	8.3	57.6	31.4	2.6	(493)
세대	2030 세대	16.1	60.9	21.3	1.6	(366)
	4050 세대	10.3	63.1	24.9	1.7	(417)
	60대 이상	4.1	48.4	41.0	6.5	(217)
정치 성향	좌파	9.6	62.8	23.9	3.7	(188)
	중도	11.3	58.6	28.0	2.2	(497)
	우파	11.7	57.8	27.6	2.9	(3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인공지능, 로봇, 무인 항공기 등)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전혀 관심이 없다(4.1%)’와 ‘관심이 없는 편이다(38.1%)’를 제외한 57.8%의 응답자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42〉 참조).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일수록, 새로운 기술 변화를 빨리 수용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관심이 있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다. 남성의 62.4%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53.2%가 ‘관심 있다’고 응답했다.

2030 세대는 전체적으로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로 가장 높았다. 4050 세대는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이며, 60대 이상은 4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우파가 57.4%로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좌파와 중도는 55.3%로 나타났다.

〈표 3-4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관심도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있다			
전체		4.1	38.1	50.8	7.0	2.61	0.68	(1,000)
성별	남성	3.6	34.1	53.3	9.1	2.68	0.69	(507)
	여성	4.7	42.2	48.3	4.9	2.53	0.66	(493)
세대	2030 세대	4.1	35.2	52.7	7.9	2.64	0.69	(366)
	4050 세대	2.2	33.6	57.1	7.2	2.69	0.63	(417)
	60대 이상	7.8	51.6	35.5	5.1	2.38	0.70	(217)
정치 성향	좌파	4.3	40.4	45.2	10.1	2.61	0.73	(188)
	중도	4.2	36.8	53.5	5.4	2.60	0.66	(497)
	우파	3.8	38.7	49.8	7.6	2.61	0.68	(315)

주: 평균 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높다(1)~매우 낮다(4)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이 공존한다. 먼저 부정적인 전망으로는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오늘날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로봇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고 나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긍정적 전망으로는 사람들은 일에 덜 신경 쓰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화

하며, 인간에게 새롭고, 더 좋은 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점 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부정적 문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질문했고, 응답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 높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9.4%가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았고, 86.1%가 과학기술의 인간 노동 대체로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34.9%의 응답자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여 긍정적 변화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빈부 간 불평등 문제 심화(90.0%)나 생계 어려움의 발생 가능성(86.2%)을 남성(88.8%, 82.7%)에 비해 약간 높게 전망하고 있으면서도, 일보다 삶에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51.9%)이라는 점에서는 남성(47.6%)보다 긍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세대가 높아질수록, 우파일수록 빈부 간 불평등 문제 심화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았다. 나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에 대한 우려는 우파(80.6%)와 60대 이상(85.7%)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2030 세대(53.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43〉 참조).

〈표 3-43〉 로봇,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대체 시,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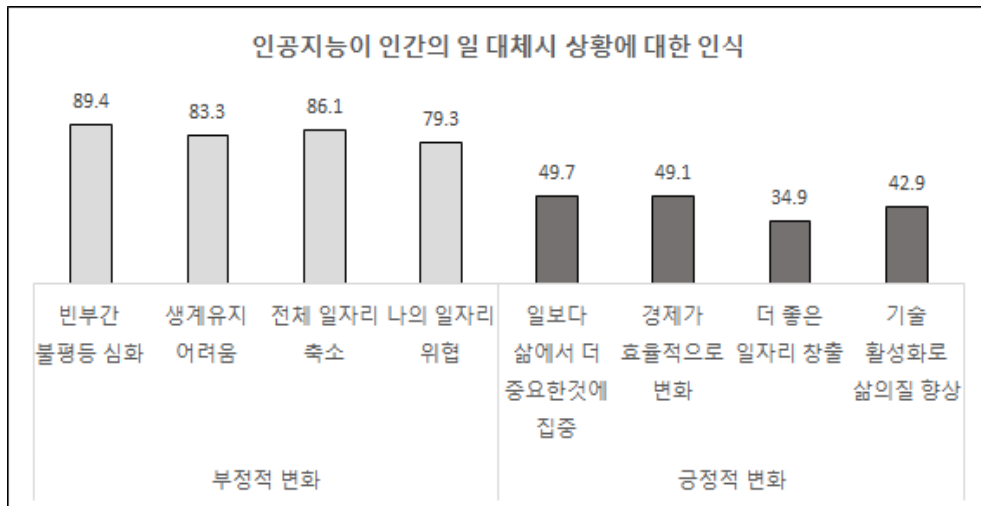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부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빈부 간 불평등 문제 심화	생계 유지 어려움 발생	전체 일자리 축소	나의 일자리 위협	일보다 삶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변화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기술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전체		89.4	83.3	86.1	79.3	49.7	49.1	34.9	42.9
성별	남성	88.8	82.7	86.0	79.3	47.6	50.9	35.9	43.2
	여성	90.0	84.0	86.2	79.3	51.9	47.5	33.9	42.5
세대	2030 세대	88.6	81.2	86.1	74.0	46.2	53.0	35.5	44.0
	4050 세대	89.5	84.6	82.4	80.6	54.2	49.4	35.7	44.8
	60대 이상	90.8	84.3	89.2	85.7	47.0	42.4	32.3	37.3
정치 성향	좌파	84.5	80.3	84.1	79.8	52.1	52.7	37.3	45.3
	중도	89.9	86.1	87.3	78.4	44.9	48.2	32.4	38.0
	우파	90.4	80.6	85.4	80.6	55.9	48.6	41.5	49.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6]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 대체 시 상황에 대한 인식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복지정책 필요성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사회보험 확대, 심리상담 및 적응 지원서비스,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전 국민 기본소득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중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는 81.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심리상담 및 적응지원서비스 확대(78.1%), 의료 및 복지서비스 확대(77.4%), 전 국민 현금지원(기본소득)(53.7%)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표 3-44〉 참조), 대응 방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성(82.7%)이 여성(80.2%)보다, 좌파(83.5%)가 중도(82.5%)나 우파(78.8%)보다 높았다. 심리상담 및 적응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80.1%)이 남성(76.2%)보다, 2030 세대와 4050 세대(각 78.4%)가 60대 이상(77%)보다, 중도(81.7%)가 우파(74.9%)나 좌파(7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 및 복지서비스 확대 필요성은 성별 차이는 거의 없고, 2030 세대(78.9%)가 다른 세대보다, 중도

(78.9%)와 좌파(78.7%)가 우파(7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 국민 현금지원(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세대가 높을수록, 중도(55.9%)가 다른 정치 성향보다 좀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4〉 변화하는 사회 대비를 위한 복지정책 필요성 인식(필요하다는 응답 비율)

(단위: %, 점)

구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확대			심리상담 및 적응 지원서비스 확대			의료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전 국민 현금지원 (기본소득)		
		필요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필요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필요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필요 응답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81.4	2.91	0.57	78.1	2.88	0.60	77.4	2.90	0.63	53.7	2.52	0.79
성별	남성	82.7	2.92	0.55	76.2	2.84	0.59	77.0	2.87	0.58	54.0	2.51	0.74
	여성	80.2	2.90	0.60	80.1	2.92	0.60	77.9	2.94	0.67	53.4	2.53	0.84
세대	2030 세대	81.7	2.89	0.56	78.4	2.86	0.60	78.9	2.93	0.58	52.2	2.48	0.79
	4050 세대	81.1	2.91	0.59	78.4	2.90	0.60	77.4	2.90	0.66	54.5	2.52	0.78
	60대 이상	81.6	2.94	0.57	77.0	2.87	0.59	74.6	2.87	0.61	54.8	2.58	0.80
정치 성향	좌파	83.5	2.91	0.52	74.0	2.85	0.61	78.7	2.98	0.65	51.6	2.52	0.87
	중도	82.5	2.92	0.55	81.7	2.90	0.56	78.9	2.90	0.61	55.9	2.54	0.77
	우파	78.8	2.90	0.65	74.9	2.87	0.66	74.3	2.87	0.64	51.4	2.48	0.7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4.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는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기회 제공, 지역공동체 발전, 공익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주체이자 대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인식,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 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먼저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6%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혹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5〉 참조). 집단별 차이를 보면, 세대 중에서 4050 세대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알고 있음’ 비율 51.6%로, 평균값 2.23점). 소득집단의 경우, 고소득일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다. 300만 원 미만 소득 집단에서 알고 있다는 비율은 38.6%인 반면,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은 그 비율이 49.7%이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좌파(56.9%)가 우파(49.6%)보다 알고 있는 비율이 높고, 중도 성향(42.8%)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45〉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전혀 알지 못함	잘 알지 못하나, 들어본 적 있음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알고 있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음			
전체		8.4	44.0	42.1	5.5	2.45	0.73	(1,000)
세대	2030 세대	10.4	46.2	39.3	4.1	2.37	0.72	(366)
	4050 세대	4.8	43.6	45.6	6.0	2.53	0.68	(417)
	60대 이상	12.0	41.0	40.1	6.9	2.42	0.79	(2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8.4	43.0	35.4	3.2	2.23	0.78	(158)
	300~600만 원	7.7	43.6	43.1	5.6	2.47	0.72	(429)
	600만 원 이상	5.4	44.9	43.6	6.1	2.50	0.69	(408)
정치 성향	좌파	8.0	35.1	48.9	8.0	2.57	0.75	(188)
	중도	9.5	47.7	39.0	3.8	2.37	0.71	(497)
	우파	7.0	43.5	42.9	6.7	2.49	0.72	(3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나.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구매 및 이용 의사

이번에는 ‘일반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값이라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질문했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4%는 상품 구입,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고答한 반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7%로 낮게 나타났다(〈표 3-46〉 참조).

집단별로 살펴보면, 구매 및 이용 의사는 세대 중에서는 2030 세대(34.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가구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집단으로 갈수록 구매 및 이용 의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00만 원 미만 소득 집단은 25.9%가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데 반해,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은 37.2%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중간소득 집단은 32.4%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좌파 성향(38.8%)에서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3-46〉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 구매 및 이용 의사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구매/이용 하고 싶다	약간 구매/이용 하고 싶다	보통이다	별로 구매/이용 하고 싶지 않다	전혀 구매/이용 하고 싶지 않다			
전체		3.3	30.1	50.9	13.8	1.9	3.19	0.78	(1,000)
세대	2030 세대	4.6	30.1	50.3	13.7	1.4	3.23	0.79	(366)
	4050 세대	2.9	30.5	52.5	12.7	1.4	3.21	0.75	(417)
	60대 이상	1.8	29.5	48.8	16.1	3.7	3.10	0.82	(2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4	21.5	55.7	16.5	1.9	3.10	0.79	(158)
	300~600만 원	2.6	29.8	51.0	14.7	1.9	3.17	0.77	(429)
	600만 원 이상	3.4	33.8	49.0	11.8	2.0	3.25	0.78	(408)
정치 성향	좌파	5.3	33.5	40.4	18.1	2.7	3.21	0.89	(188)
	중도	3.0	28.2	57.1	10.7	1.0	3.22	0.71	(497)
	우파	2.5	31.1	47.3	16.2	2.9	3.14	0.82	(315)

주: 평균 점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시거나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에 대해 매우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싶다(1)~전혀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싶지 않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다. 사회적 경제 조직 기부 혹은 투자 의사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 기부 또는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1%가 투자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표 3-47〉 참조). 한편 27.3%는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50.6%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세대별로는 4050 세대의 투자 의향이 23.5%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18.0%로 가장 낮다. 가구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앞서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투자 의향은 높게 나타난다.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은 25.5%가 투자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300만 원 미만 소득집단은 그 비율이 18.3%, 중간소득 집단은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좌파(23.9%)에서 투자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47〉 사회적 경제 조직 기부 혹은 투자 의사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하고 싶다	약간 하고 싶다	보통 이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전혀 하고 싶지 않다			
전체	2.4	19.7	50.6	21.8	5.5	2.92	0.85	(1,000)
세대	2030 세대	3.8	19.1	49.7	22.7	2.95	0.87	(366)
	4050 세대	1.2	22.3	53.0	18.2	2.96	0.81	(417)
	60대 이상	2.3	15.7	47.5	27.2	2.78	0.88	(2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4	13.9	47.5	28.5	2.83	0.90	(158)
	300~600만 원	1.4	18.9	53.6	20.7	2.90	0.81	(429)
	600만 원 이상	2.5	23.0	48.8	20.1	2.97	0.87	(408)
정치 성향	좌파	3.2	20.7	46.8	21.3	2.90	0.93	(188)
	중도	2.0	18.7	57.3	18.7	2.98	0.76	(497)
	우파	2.5	20.6	42.2	27.0	2.83	0.93	(315)

주: 평균 점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 기부 또는 투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에 대해 매우 하고 싶다(1)~전혀 하고 싶지 않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1%가 찬성하고, 42.9%가 반대로 나타나 다수의 우리 국민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3-48〉 참조).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2030 세대가 57.9%, 4050 세대가 57.3%로 찬성 비율이 유사하고, 60대 이상이 55.3%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가의 지원을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0만 원 미만 소득집단의 찬성 비율은 59.5%, 중간소득 집단은 57.5%, 600만 원 이상 소득집단의 찬성 비율은 55.2%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의 찬성 비율이 57.7%로 가장 높고, 좌파(56.9%), 우파(5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48〉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전체		2.0	55.1	38.7	4.2	2.45	0.61	(1,000)
세대	2030 세대	1.6	56.3	38.3	3.8	2.44	0.60	(366)
	4050 세대	2.9	54.4	37.9	4.8	2.45	0.63	(417)
	60대 이상	0.9	54.4	41.0	3.7	2.47	0.59	(2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3	58.2	36.7	3.8	2.43	0.59	(158)
	300~600만 원	1.6	55.9	38.9	3.5	2.44	0.59	(429)
	600만 원 이상	2.7	52.5	39.7	5.1	2.47	0.64	(408)
정치 성향	좌파	2.1	54.8	39.9	3.2	2.44	0.60	(188)
	중도	2.8	54.9	39.0	3.2	2.43	0.61	(497)
	우파	0.6	55.6	37.5	6.3	2.50	0.63	(3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다양한 복지 욕구(보육, 노인 돌봄, 학교교육, 평생교육, 보건의료, 주거서비스 등)와 연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4%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표 3-49〉 참조). 과반 이상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4050 세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4%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0.3%, 53.9%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가구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300~600만 원 미만의 중간소득집단은 60.6%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바람직성을 인식했고, 600만 원 이상 집단은 58.6%, 300만 원 미만 집단은 57.6%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좌파(60.1%), 중도(59.5%), 우파(58.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9〉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바람직	약간 바람직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전체		4.0	55.4	34.2	6.4	2.43	0.67	(1,000)
세대	2030 세대	4.6	55.7	33.9	5.7	2.41	0.67	(366)
	4050 세대	3.8	57.6	33.1	5.5	2.40	0.65	(417)
	60대 이상	3.2	50.7	36.9	9.2	2.52	0.71	(2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4.4	53.2	38.0	4.4	2.42	0.65	(158)
	300~600만 원	3.3	57.3	33.3	6.1	2.42	0.66	(429)
	600만 원 이상	4.4	54.2	33.8	7.6	2.45	0.70	(408)
정치 성향	좌파	5.3	54.8	33.0	6.9	2.41	0.70	(188)
	중도	3.0	56.5	34.6	5.8	2.43	0.65	(497)
	우파	4.8	54.0	34.3	7.0	2.43	0.69	(3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 1. 정치적 성향

#### 가.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구체적인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치 성향은 3가지 공약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첫째,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공약은 ‘제한적 복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우리나라는 경제도 어려운데 복지를 너무 강조합니다. 저는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로 제한시키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으로 제시했다. 둘째, ‘중도’ 성향을 드러내는 공약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 살리기’(저는 경제를 살리는 데 힘쓰는 동시에, 국민 전체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로 제시했다. 셋째, ‘진보’ 성향을 드러내는 공약은 ‘노동자, 빈민을 위한 정책 실현’(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노동자들과 빈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으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 보수 성향인 ‘제한적 복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에 대한 지지 비율이 50.6%로 가장 높다. 중도 성향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 살리기’ 공약에 대한 지지 비율은 29.4%, 노동자, 빈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대한 지지 비율이 11.4% 순이다.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는 비율은 8.6%이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세대별로 유사한 정치 성향 분포를 보인다. 대체로 보수 성향 후보 지지율이 높고, 중도, 진보 순으로 나타났다.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0 세대에서 11.5%로 가장 높다. 한편 보수 성향의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지만, 특히 4050 세대에서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후보 병에 대한 지지율은 60대 이상에서 15.7%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역시 모든 가구소득 집단에서 보수 성향 지지도가 가장 높고, 중도, 진보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지지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진보 성향 후보 지지율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좌파

일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3-50〉 참조).

〈표 3-50〉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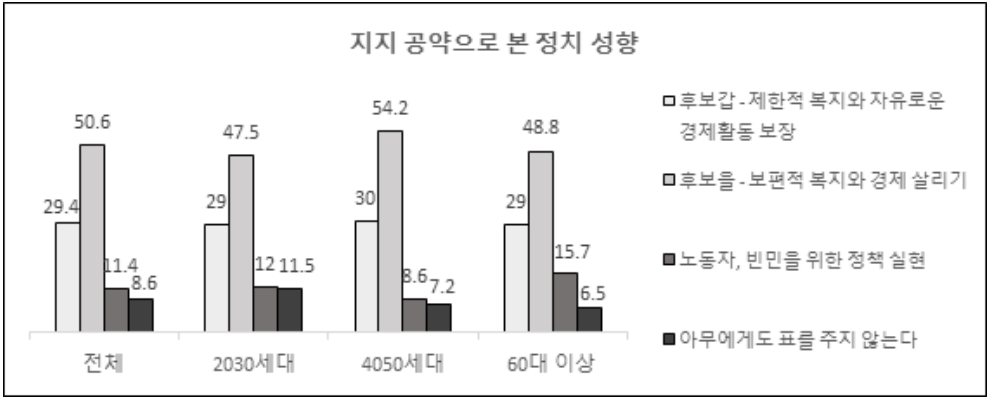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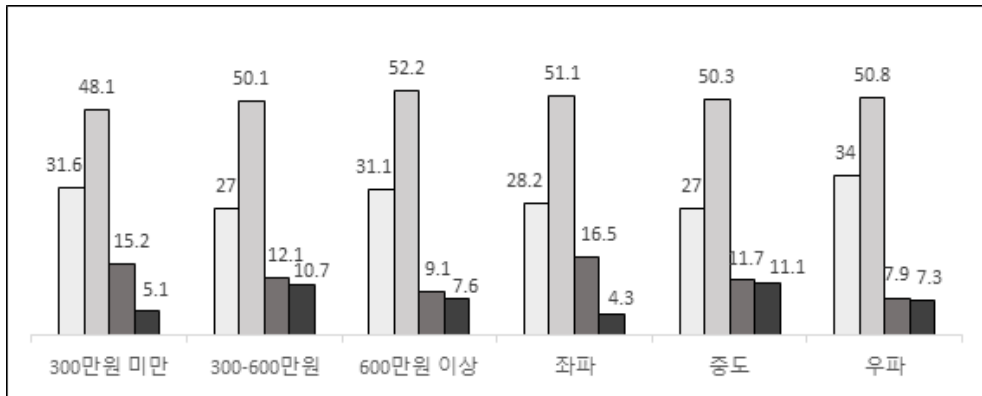
구분		후보 갑	후보 을	후보 병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는다	사례 수
		제한적 복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보편적 복지와 경제 살리기	노동자, 빈민을 위한 정책 실현		
전체		29.4	50.6	11.4	8.6	(1,000)
세대	2030 세대	29.0	47.5	12.0	11.5	(366)
	4050 세대	30.0	54.2	8.6	7.2	(417)
	60대 이상	29.0	48.8	15.7	6.5	(217)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1.6	48.1	15.2	5.1	(158)
	300~600만 원	27.0	50.1	12.1	10.7	(429)
	600만 원 이상	31.1	52.2	9.1	7.6	(408)
정치 성향	좌파	28.2	51.1	16.5	4.3	(188)
	중도	27.0	50.3	11.7	11.1	(497)
	우파	34.0	50.8	7.9	7.3	(3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7]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나. 주관적 정치 성향

좌파, 중도, 우파를 11점 척도 연속 스펙트럼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 각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가장 많았고, 우파(31.5%), 좌파(18.8%) 순으로 나타났다(〈표 3-51〉 참조).<sup>8)</sup> 세대별로는 2030 세대에서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56.0%)이 가장 높았고, 우파라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진다. 가구소득별로는 600만 원 이상에서 50.7%, 300~6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49.0%, 3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47.5%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우파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3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36.5%, 300~600만 원 미만에서 32.0%, 6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30.2%로 나타났다.

8) 2021년 실시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보수 30.4%, 중도 46.8%, 진보 22.8%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51〉 자신의 정치 이념적 위치

(단위: %, 점)

구분		좌파					중도					우파					평균	표준 편차
		-5	-4	-3	-2	-1	0	+1	+2	+3	+4	+5						
전체		0.9	0.7	3.5	7.8	5.9	49.7	10.5	14.3	4.5	0.9	1.3	0.23	1.59				
		18.8						31.5										
세대 별	2030 세대	0.8	0.8	3.0	10.4	3.6	56.0	11.5	9.6	2.7	0.8	0.8	0.05	1.46				
		18.6						25.4										
	4050 세대	1.2	0.5	3.6	7.0	7.2	49.9	9.8	15.6	4.6	0.5	0.2	0.18	1.51				
		19.5						30.7										
	60대 이상	0.5	0.9	4.1	5.1	7.4	38.7	10.1	19.8	7.4	1.8	4.1	0.64	1.85				
		18.0						43.2										
가구 소득 별	300만 원 미만	0.6	0.6	2.5	5.7	5.7	47.5	1.67	12.7	13.9	5.7	2.5	2.5	0.50				
		15.1						36.5										
	300~600 만 원 미만	0.7	0.7	4.7	7.9	5.8	49.0	1.57	10.3	14.9	4.7	0.5	0.9	0.19				
		19.8						32.0										
	600만 원 이상	1.2	0.7	2.7	8.6	6.1	50.7	1.57	10.0	14.0	3.9	0.7	1.2	0.18				
		19.3						3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2. 계층 인식

한국 사회를 10개의 층으로 나눈다면, 자신의 가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때, 과거(10년 전), 현재, 미래(10년 후) 자신이 속했던, 속한,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이 어디인지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주관적 계층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1분위부터 4분위까지를 하(下)층, 5분위와 6분위를 중간층, 7분위부터 10분위까지를 상(上)층이라고 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 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한 비율이 41.8%, 중간층 45.5%, 소득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2.7%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중간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0년 전과 동일하지만, 10년 전 상층에 속했다는 비율이 15.3%에서 현재 12.7%로 낮아지고, 하층에 속했다는 인식 비율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0년 후 자신의 주관적 계층 인식 전망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층으로의 계층 이동을 전망(혹은 희망)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12.7%에 불과한 상층 인식 비율이 10년 후의 전망에는 30.9%로 크게 증가한다. 10년 후 중간층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45.5%에서 44.8%로 소폭 줄어들고, 하층의 비율은 41.8%에서 24.3%로 크게 감소한다. 이는 미래에 사회경제적 계층이 상향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대별로 보면, 2030 세대는 중간층에 속했다는 인식 비율(43.2%)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대신 상층(14.2%), 하층(42.6%)에 속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다. 4050 세대에서는 중간층에 속했다는 비율(47.4%)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60대 이상에서 상층에 속했다고 인식하는 비율(17.1%)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정치성향별로는 중간층에 속했다는 비율은 우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49.5%), 상층에 속했다는 인식 비율은 중도(16.0%)에서 가장 높으며, 하층이라는 인식은 좌파(43.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52〉 참조).

〈표 3-52〉 주관적 계층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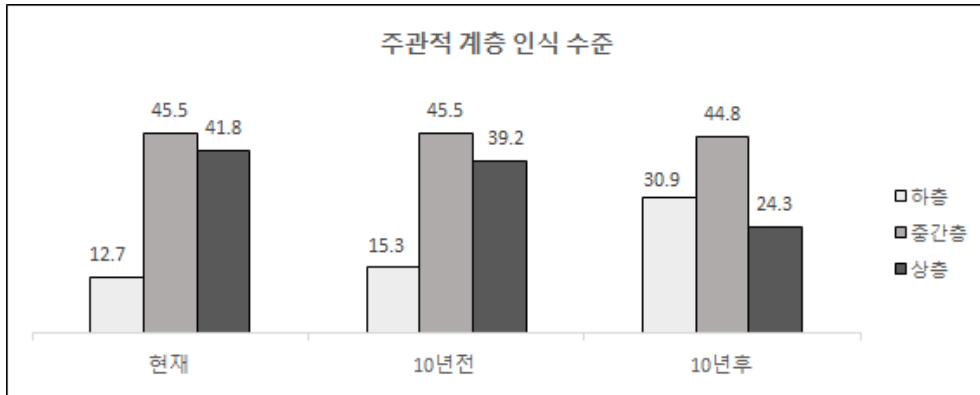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최상층										최하층
	1	2	3	4	5	6	7	8	9	10	
현재	0.2	1.1	3.9	7.5	26.2	19.3	22.4	14.4	4.3	0.7	
	12.7				45.5			41.8			
10년 전	0.4	0.7	6.8	7.4	24.4	21.1	19.2	14.0	4.1	1.9	
	15.3				45.5			39.2			
10년 후	1.1	3.7	10.5	15.6	25.0	19.8	11.4	8.7	3.0	1.2	
	30.9				44.8			24.3			
세대별 (10년 전)	2030 세대	0.3	0.8	7.4	5.7	23.0	20.2	21.3	14.8	4.6	1.9
		14.2				43.2			42.6		
	4050 세대	0.2	0.2	6.5	8.4	24.9	22.5	17.0	13.9	4.1	2.2
		15.3				47.4			37.2		
	60대 이상	0.9	1.4	6.5	8.3	25.8	19.8	19.8	12.9	3.2	1.4
		17.1				45.6			37.3		
정치 성향 (10년 전)	좌파	0.0	1.1	3.7	9.0	18.6	24.5	18.1	18.6	4.3	2.1
		13.8				43.1			43.1		
	중도	0.2	0.2	8.2	7.4	24.9	18.9	21.3	12.9	3.6	2.2
		16.0				43.8			40.0		
	우파	1.0	1.3	6.3	6.3	27.0	22.5	16.5	13.0	4.8	1.3
		14.9				49.5			3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8] 주관적 계층 인식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3.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크다”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해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 조사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두 번째 질문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책임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79.3%가 한국 사회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3% 이하의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소득 격차 해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에는 59.5%가 동의했다.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은 12.0% 수준이었으며, 31.5%는 중립적 혹은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표 3-53〉 참조).

〈표 3-53〉 소득 격차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 점)

구분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평균	표준편차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크다	28.3	51.0	17.4	3.0	0.3	4.04	0.78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15.4	41.1	31.5	9.3	2.7	3.57	0.95

주: 평균 점수는 '소득분배와 관련된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소득분배에 대한 집단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다(〈표 3-54〉 참조).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응답 평균이 4.09점인데, 300만 원 미만 가구는 응답 평균이 3.96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빈부 격차 해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은 3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소득분배 상황 인식 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6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의 평균 값이 3.59점이고 3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는 3.66점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보면, 좌파와 중도가 우파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크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빈부 격차 해소를 정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수준도 '좌파 > 중도 > 우파'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3-54〉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정치 성향별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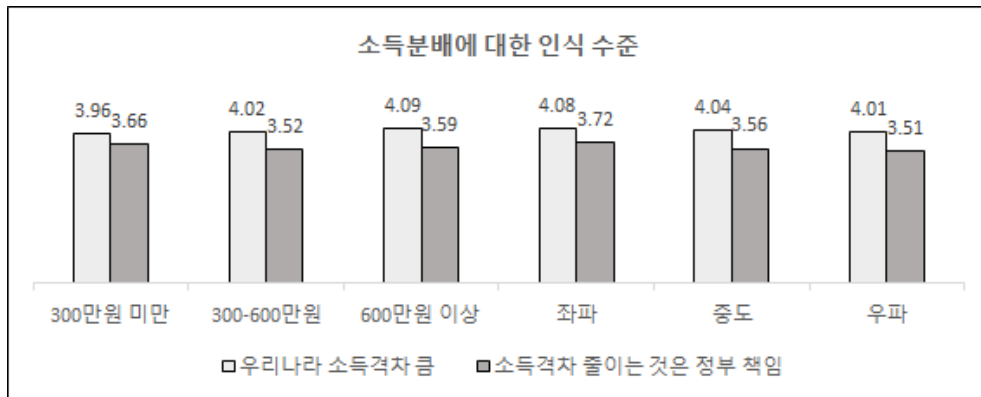
구분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크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96	0.86	3.66	0.98	(158)
	300~600만 원	4.02	0.77	3.52	0.94	(429)
	600만 원 이상	4.09	0.75	3.59	0.95	(408)
정치 성향	좌파	4.08	0.78	3.72	1.00	(188)
	중도	4.04	0.79	3.56	0.93	(497)
	우파	4.01	0.75	3.51	0.95	(315)

주: '소득분배와 관련된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19]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4. 일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복지를 보장한다면 현재에 비해 얼마나 노동시간을 줄일 것인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더라도 노동시간을 거의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일하겠다는 의견(현재 노동시간의 90~100%만큼 일함)은 전체 응답자의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80%로 줄이겠다는 응답은 3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절반 수준인 50~60%로 줄이겠다는 응답은 26.2%, 40%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의견은 17.1%로 조사되었다(〈표 3-55〉 참조).

〈표 3-55〉 기본적 생활 보장 시, 희망 노동시간

(단위: %)

일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일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	1.6	3.9	4.7	5.9	13.6	12.6	18.5	18.4	11.0	8.8
17.1					26.2		36.9		1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5. 공정성에 대한 인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8개의 문항을 통해 7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 각 문항의 평균 점수를 비교할 때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4.08점)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순서대로 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가진다’(4.05점),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3.98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댓가를 받는다’(3.93점),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3.93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한다’(3.83점),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3.65점) 등으로 나타났다. 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3.62점)였다. 즉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표 3-56〉 참조).

〈표 3-56〉 우리 사회 및 타인에 대한 공정성 인식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3.98	1.34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4.08	1.23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가진다	4.05	1.2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3.93	1.20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3.93	1.16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3.83	1.19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	3.65	1.18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	3.62	1.19

주: 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6. 일반적인 복지 인식

### 가.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

먼저,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을 두 가지로 질문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했다(〈표 3-57〉 참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에 대해서는 28.0%가 찬성하고, 2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20.1%가 찬성하고, 33.3%가 반대했다. 우리 국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에는 소극적이고, 복지 증세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57〉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	5.3	22.7	44.9	24.9	2.2	3.04	0.88	(1,000)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1.7	18.4	46.6	27.8	5.5	2.83	0.85	

주: 평균 점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소득집단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를 위한 감세에는 가구소득이 높은 600만 원 이상 가구와 우파 성향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오히려 동의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높은 600만 원 이상 가구와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3-58〉 참조).

〈표 3-58〉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 가구소득별, 정치 성향별

(단위: %, 점, 명)

구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사례 수
		찬성 비율	평균	표준편차	찬성 비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8.5	3.13	0.84	28.5	2.80	0.96	(158)
	300~600만 원	29.6	3.06	0.87	26.8	2.85	0.78	(429)
	600만 원 이상	26.2	2.98	0.90	33.2	2.82	0.87	(408)
정치 성향	좌파	28.2	2.97	0.89	28.2	2.95	0.90	(188)
	중도	28.9	3.09	0.87	28.9	2.84	0.82	(497)
	우파	26.4	3.01	0.88	26.4	2.75	0.85	(315)

주: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나. 복지에 대한 인식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선별복지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하였다(〈표 3-59〉 참조). 분석 결과, 23.5%가 동의하였으며, 중립은 54.7%, 반대는 21.8%이며, 평균 3.03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 기준으로 볼 때,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집단의 평균은 3.09점, 중간 집단은 3.05점, 600만 원 이상 집단의 평균은 2.99점이었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보면 39.1%가 동의하였으며, 중립은 37.6%, 반대는 23.3%이며, 평균 3.15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준으로 볼 때,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집단은 평균 3.08점으로 오히려 동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동의 30.2%, 중립 36.2% 반대 33.6%이며, 평균 2.94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소득계층이 가장 높은 가구소득 월 600만 원 이상 계층에서 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동의 28.2%, 중립 50.3%, 반대 21.5%이며, 평균 3.07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기준으로 볼 때,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동의 정도가 낮다.

〈표 3-59〉 복지에 대한 견해

(단위: %,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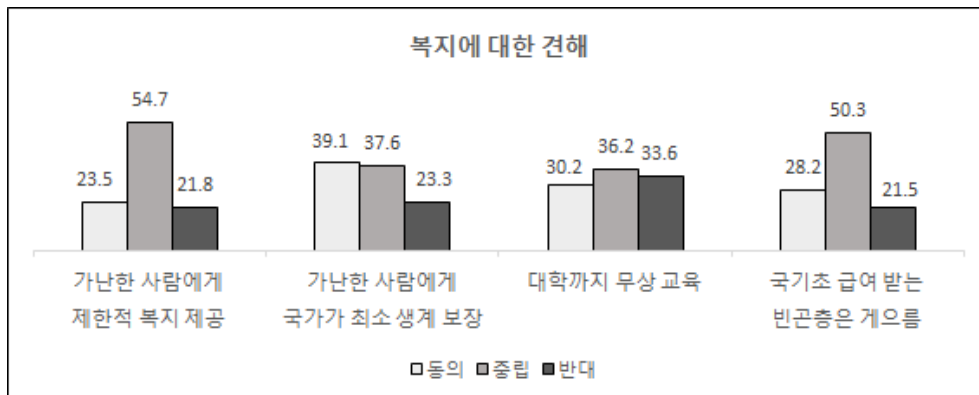
구분	집단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제공	전체	3.8	19.7	54.7	19.3	2.5	3.03	0.80	(1,000)
	300만 원 미만	5.1	17.1	62.7	12.0	3.2	3.09	0.79	(158)
	300~600만 원	2.8	23.8	50.6	21.2	1.6	3.05	0.79	(429)
	600만 원 이상	4.4	16.4	56.1	19.9	3.2	2.99	0.82	(408)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 보장	전체	5.1	34.0	37.6	17.3	6.0	3.15	0.97	(1,000)
	300만 원 미만	2.5	34.8	36.7	19.6	6.3	3.08	0.95	(158)
	300~600만 원	6.1	33.3	37.8	17.9	4.9	3.18	0.96	(429)
	600만 원 이상	5.1	34.3	37.5	15.9	7.1	3.14	0.99	(408)
대학까지 무상 교육	전체	5.8	24.4	36.2	25.1	8.5	2.94	1.03	(1,000)
	300만 원 미만	5.7	24.1	32.9	28.5	8.9	2.89	1.05	(158)
	300~600만 원	7.9	23.5	39.9	21.7	7.0	3.04	1.02	(429)
	600만 원 이상	3.7	25.0	33.8	27.5	10.0	2.85	1.03	(408)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게으름	전체	6.3	21.9	50.3	15.2	6.3	3.07	0.93	(1,000)
	300만 원 미만	8.2	24.1	41.8	16.5	9.5	3.05	1.06	(158)
	300~600만 원	5.1	21.2	54.8	14.0	4.9	3.08	0.87	(429)
	600만 원 이상	6.9	21.6	49.3	15.9	6.4	3.07	0.95	(408)

주: 평균 점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20] 복지에 대한 견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다.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

가족 관련 인식은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두 가지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하였다(〈표 3-60〉 참조).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5%는 어린 자녀를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고 답했고, 13.1%만 반대했다. 육아를 여성(어머니)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견해에 대한 동의 비율 보다 반대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자식의 부모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36.2%가 동의하고, 21.7%가 반대했다. 두 문항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어린 자녀에 대한 모성의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평균 3.67점)이 자식의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평균 3.22점)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부양책임의 약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성별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전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60〉 가족 관련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22.1	38.4	26.4	10.5	2.6	3.67	1.02	(1,000)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11.1	25.1	42.1	17.7	4.0	3.22	0.99	

주: 평균 점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성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두 문항 모두 여성의 동의 수준이 더 높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여성은 66.0%로 남성 55.2%보다 높았으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36.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다. 60대 이상이 65.9%로 가장 높고, 4050 세대가 61.3%로 그 다음이다. 2030 세대의 동의 비율은 56.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지만, 절반을 넘어선다. 부모 부양의 자식 책임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이 42.8%로 동의 수준이 가장 높고, 2030 세대는 35.0%, 4050 세대는 33.8%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집단별 인식 차이를 보면,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어린 자녀를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300만 원 미만 가구는 62.6%, 중간계층은 60.6%,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59.8%가 동의한다. 부모 부양의 자식 책임에 대해서는 월 가구소득 300~600만 원 집단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만 원 미만 집단에서 가장 낮은 31.6%로 나타났다(〈표 3-61〉 참조).

〈표 3-61〉 가족 관련 인식: 성별, 세대별, 가구소득별

(단위: %, 점)

구분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동의 비율	평균	표준편차	동의 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55.2	3.57	1.01	35.1	3.22	1.00
	여성	66.0	3.77	1.01	36.4	3.22	0.99
세대	2030 세대	56.3	3.58	1.06	35.0	3.20	1.03
	4050 세대	61.3	3.69	0.98	33.8	3.18	0.96
	60대 이상	65.9	3.78	1.00	42.8	3.32	0.9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2.6	3.66	1.04	31.6	3.08	0.98
	300~600만 원	60.6	3.70	0.99	40.1	3.29	0.99
	600만 원 이상	59.8	3.65	1.04	34.3	3.20	0.99

주: 평균 점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등에 대해 다루었다.

## 1.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6.42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6.38점)보다는 여성(6.46점)이, 세대별로는 연령대가 어릴수록,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좌파(6.15점)나 중도(6.44점)보다는 우파 성향(6.54점)인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행복도는 삶의 만족도보다 약간 높은 평균 6.55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차이를 보면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남성(6.46점)보다는 여성(6.65점), 세대별로는 연령대가 어릴수록,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좌파(6.25점)나 중도(6.61점)보다는 우파 성향(6.63점)인 경우에 행복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62〉 참조).

〈표 3-62〉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행복도

(단위: 점, 명)

구분		삶의 만족도 (평균)	삶의 행복도 (평균)	사례 수
전체		6.42	6.55	(1,000)
성별	남	6.38	6.46	(507)
	여	6.46	6.65	(493)
세대별	2030 세대	6.48	6.68	(366)
	4050 세대	6.44	6.58	(417)
	60대 이상	6.27	6.29	(217)
가구 소득별	300만 원 미만	6.16	6.19	(158)
	300~600만 원 미만	6.17	6.36	(429)
	600만 원 이상	6.77	6.90	(408)
정치 성향	좌파	6.15	6.25	(188)
	중도	6.44	6.61	(497)
	우파	6.54	6.63	(315)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2.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신뢰수준은 “우리 사회는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남을 도우려고 한다”의 두 가지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사회는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은 31.5%이고 평균은 3.1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사회는 대체로 남을 도우려고 한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45.0%, 평균 3.33점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세대별, 가구소득별로는 의미 있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정치 성향과 관련해서는 좌파(동의 비율 27.6%)나 중도(29.6%)에 비해 우파(36.8%)에서 동의 정도가 확실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대체로 남을 도우려고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동의 비율 47.0%)이 남성(43.0%)보다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좌파(동의 비율 41.0%)나 중도(44.2%)에 비해 우파(48.5%)에서 동의 정도가 확실히 높게 나타났다(〈표 3-63〉 참조).

〈표 3-63〉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		대체로 남을 도우려고 함		사례 수
		동의 비율	평균	동의 비율	평균	
전체		31.5	3.10	45.0	3.33	(1,000)
성별	남	31.6	3.10	43.0	3.31	(507)
	여	31.4	3.09	47.0	3.35	(493)
세대별	2030 세대	31.2	3.07	45.1	3.32	(366)
	4050 세대	30.7	3.13	44.8	3.35	(417)
	60대 이상	33.6	3.06	45.2	3.29	(217)
가구 소득별	300만 원 미만	32.3	3.08	47.5	3.33	(158)
	300~600만 원 미만	30.3	3.10	41.7	3.30	(429)
	600만 원 이상	32.4	3.10	47.6	3.36	(408)
정치 성향	좌파	27.6	3.01	41.0	3.24	(188)
	중도	29.6	3.06	44.2	3.33	(497)
	우파	36.8	3.20	48.5	3.37	(315)

주: 평균 점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3.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 가.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이 49.3%로 긍정 24.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평균 점수 기준으로 볼 때 남성(4.06점)이 여성(4.30점)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세대별로는 60대 이상(3.72점)에서 가장 부정적이었고, 소득계층별로는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3.80점)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파(4.23점)나 중도(4.17점)에 비해 좌파(4.12점)가 사회통합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표 3-64〉 참조).

〈표 3-64〉 우리나라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부정	보통	긍정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전체		49.3	26.5	24.2	4.18	2.01	(1,000)
성별	남	49.5	27.4	23.2	4.06	2.07	(507)
	여	49.1	25.6	25.2	4.30	1.94	(493)
세대별	2030 세대	46.7	27.3	25.9	4.36	1.97	(366)
	4050 세대	47.3	26.6	25.9	4.26	2.00	(417)
	60대 이상	57.2	24.9	18.0	3.72	2.03	(217)
가구 소득별	300만 원 미만	53.8	29.1	17.1	3.80	1.86	(158)
	300~600만 원 미만	49.3	26.1	24.8	4.29	2.14	(429)
	600만 원 이상	48.1	25.5	26.4	4.20	1.52	(408)
정치 성향	좌파	50.1	26.1	23.9	4.12	1.98	(188)
	중도	47.3	29.8	23.0	4.17	2.02	(497)
	우파	52.0	21.6	26.4	4.23	2.01	(315)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함. 0~10까지의 답변 중 0~4까지를 부정적, 5는 보통, 6~10을 긍정적으로 간주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나. 사회통합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성, 지위 등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가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뢰가 낮고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응답이 51.0%이었다. ‘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량이 작다’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경우도 46.4%였으며, ‘빈곤, 실업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를 고른 경우는 45.7%였다.

〈표 3-65〉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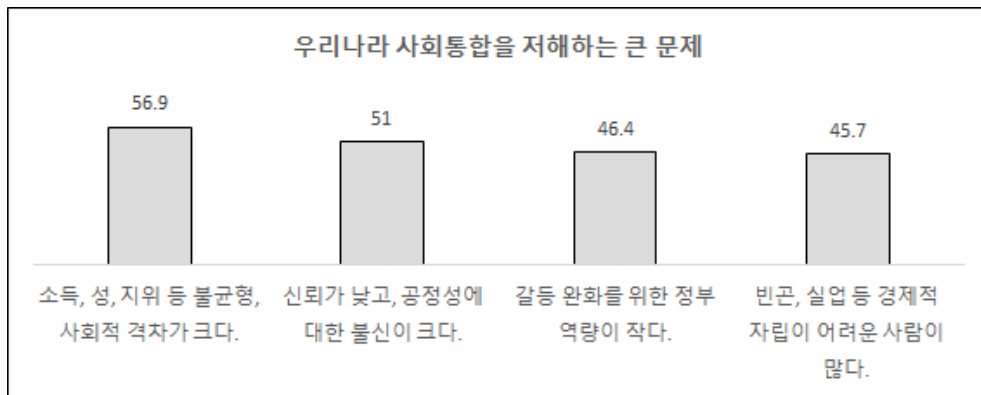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소득, 성, 지위 등 불균형, 사회적 격차가 크다	신뢰가 낮고,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	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량이 작다	빈곤, 실업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	사례 수
전체		56.9	51.0	46.4	45.7	(1,000)
성별	남	56.4	51.5	45.4	46.7	(507)
	여	57.4	50.5	47.5	44.6	(493)
세대별	2030 세대	61.7	48.1	42.1	48.1	(366)
	4050 세대	57.1	51.3	49.4	42.2	(417)
	60대 이상	48.4	55.3	47.9	48.4	(217)
가구 소득별	300만 원 미만	51.3	53.2	51.9	43.7	(158)
	300-600만 원 미만	60.4	50.8	41.5	47.3	(429)
	600만 원 이상	55.6	50.2	49.5	44.6	(408)
정치 성향	좌파	60.1	53.7	44.7	41.5	(188)
	중도	55.9	53.1	44.3	46.7	(497)
	우파	56.5	46.0	50.8	46.7	(3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3-21〕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큰 문제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다.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복지가 더 발달한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별, 교육수준별, 고용형태별 불균형과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를 고른 경우는 29.6%였으며,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4.7%였다. 모든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특히 여성(48.1%)이 남성(43.4%)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좌파(41.5%)나 중도(44.5%)보다 우파(50.2%)에서 이 문항을 고른 경우가 많았다.

〈표 3-66〉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 가장 크게 변화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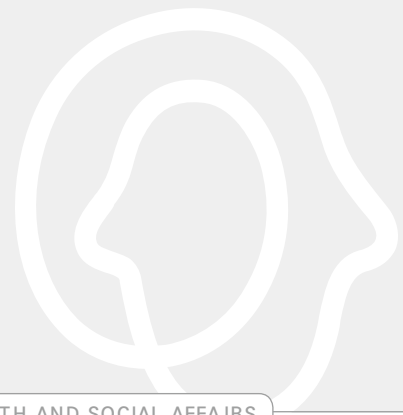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성별, 교육 수준별, 고용 형태별 불균형과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것이다.	사례 수
전체		45.7	29.6	24.7	(1,000)
성별	남	43.4	32.3	24.3	(507)
	여	48.1	26.8	25.2	(493)
세대별	2030 세대	42.9	33.1	24.0	(366)
	4050 세대	45.6	27.8	26.6	(417)
	60대 이상	50.7	27.2	22.1	(217)
가구 소득별	300만 원 미만	48.1	26.6	25.3	(158)
	300~600만 원 미만	45.2	31.0	23.8	(429)
	600만 원 이상	45.3	29.2	25.5	(408)
정치 성향	좌파	41.5	31.9	26.6	(188)
	중도	44.5	28.4	27.2	(497)
	우파	50.2	30.2	19.7	(3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 제4장

### 사회정책 영역의 인식과 태도 변화 : 2020년, 2022년 비교

-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변화
- 제2절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제3절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제 4 장

# 사회정책 영역의 인식과 태도 변화 : 2020년, 2022년 비교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사회정책의 영역별 인식 수준을 2020년 실시된<sup>9)</sup> 조사 결과와 비교, 정리하였다.<sup>10)</sup>

### 제1절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 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2020년과 비교할 때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 참조).

여러 사회정책 중에서 특히 보육서비스 제공, 무주택자 주택공급에 대한 동의 수준이 지난 2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보육서비스 제공의 경우, 2020년 67.0%가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했던 것에서 2022년에는 14%p 가까이 증가하여 81.1%를 나타냈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의 경우, 2020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48.6%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하였으나 2022년에는 63.3%로 그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은 2020년 조사에서 정부 책임이 가장 낮은 사회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2년 사이 주택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대학생의 학비 지원이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 역시 2020년 55.6%에서 2022년에는 71.5%로 16%p 가까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유일하게 정부 책임에 대한 응답이 감소한 것은 실업자의 삶의 질 유지에 관한 것으로, 감소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9)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10) 이 중 일부 문항은 2006년 이후 시계열 수치를 제시하여 설명하였고, 2020년 조사 문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척도가 다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1〉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2022년				2020년			
	당연히 정부 책임	대체로 정부 책임	대체로 정부 책임 아님	당연히 정부 책임 아님	당연히 정부 책임	대체로 정부 책임	대체로 정부 책임 아님	당연히 정부 책임 아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마련	15.3	47.4	31.9	5.4	14.3	42.6	35.3	7.8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8.2	53.0	16.6	2.2	28.1	48.5	17.5	5.9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25.0	51.5	21.7	1.8	19.2	51.5	23.6	5.7
실업자의 삶의 질 유지	16.7	41.9	35.2	6.2	11.4	47.4	35.2	6.0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	19.4	52.1	24.1	4.4	12.8	42.8	33.9	10.5
무주택자에게 적절한 주택 제공	14.6	48.7	29.8	6.9	11.6	37.0	37.7	13.7
아동 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29.3	51.8	15.9	3.0	18.0	49.0	25.8	7.2
장애인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29.9	51.4	16.4	2.3	21.2	53.5	20.4	4.9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 축소	22.2	47.3	25.7	4.8	20.4	47.8	27.1	4.7
빈곤층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18.3	51.7	27.2	2.8	13.0	53.6	30.2	3.2
청년층 자립 지원	15.6	49.1	27.5	7.8	8.5	49.0	38.4	4.1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에 관한 인식은 2020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국가 책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표 4-2〉 참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삶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사회적 약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020년에는 국가 지원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였으나, 2022년에는 71.5%로 16.4%p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그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비율은 36.2%에서 22.7%로 13.5%p 감소하였다.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역시 2020년에는 52.6%가 국가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22년에는 62.1%로 약 10%p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 생활 유지의 책임이 과거 가족 책임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점차 국가 책임, 즉 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2〉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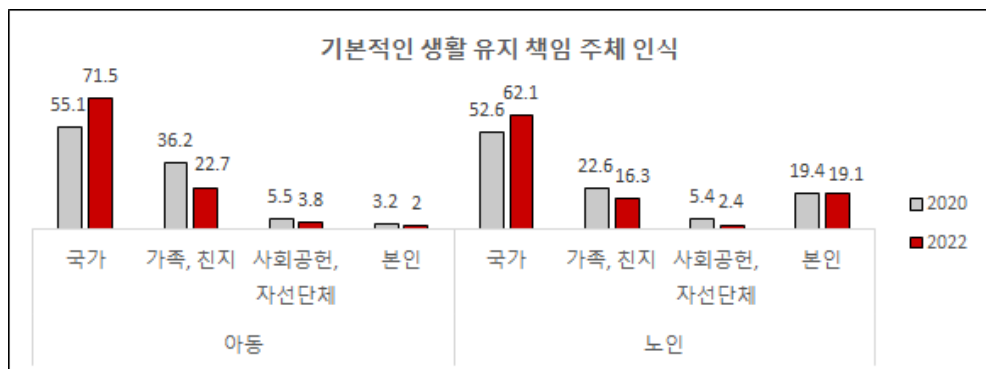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0년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가족, 친지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헌이나 자선단체를 통해서	본인이 일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가족, 친지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헌이나 자선단체를 통해서	본인이 일해서
아동	71.5	22.7	3.8	2.0	55.1	36.2	5.5	3.2
노인	62.1	16.3	2.4	19.1	52.6	22.6	5.4	19.4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1〕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3.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은 2020년과 비교할 때,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3〉 참조). 특히 요양 및 간병서비스가 8.9%에서 22.0%로 약 13%p, 주거복지서비스도 17.4%에서 27.9%로 약 11%p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다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는 다소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앞서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정부 책임 수준을 물었을 때,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2020년보다 증가하였다. 노인, 장애인, 빈곤층의 삶의 질 유지,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제공, 일자리 마련 등이 정부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80%대에 이른다. 즉 매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텁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중간소득 이하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2년 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상층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건의료서비스, 아동보육서비스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반해, 요양 및 간병서비스, 교육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주거복지서비스는 26.3%에서 13.6%로 약 13%p 수준에서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40.4%에서 30.3%로 약 10%p 가까이 감소하였다. 요양 및 간병서비스, 아동보육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20% 초반대로 변화가 미미하였고, 고용지원서비스와 주거복지서비스는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고용지원서비스, 주거복지서비스가 ‘보편적 욕구(need)’라는 인식이 소폭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표 4-3〉 참조).

〈표 4-3〉 복지서비스 제공대상 범위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2022년				2020년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중간 소득 이하 까지	중상층 까지	모든 국민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중간 소득 이하 까지	중상층 까지	모든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17.2	33.1	19.4	30.3	7.2	32.4	20.0	40.4
요양 및 간병서비스	22.0	35.7	21.8	20.5	8.9	35.5	32.0	23.6
아동보육서비스	14.2	35.4	27.0	23.4	9.7	38.9	27.0	24.4
교육서비스	17.7	43.9	20.5	17.9	13.4	40.6	25.9	20.1
주거복지서비스	27.9	48.0	13.6	10.5	17.4	49.4	26.3	6.9
장애인복지서비스	19.3	40.4	17.9	22.4	13.2	34.8	27.4	24.6
고용지원서비스	20.5	41.4	20.0	18.1	10.6	44.9	28.5	16.0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4.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을 2020년과 비교한 결과, 주거정책과 치안정책에서는 정부지출 확대의 지지 비율이 각각 30.9%에서 35.9%, 33.6%에서 42.1%로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정책 전반, 경제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보건의료정책 등 대부분 정책 영역에서는 정부지출 확대의 지지 비율이 감소하였다.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함에 있어 그 하락 폭이 두드러지는 정책 영역은 고용정책(43.8% → 38.6%), 보건의료정책(45.5% → 40.2%)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표 4-4〉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2022년					2020년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치안정책 (범죄 및 폭력 대응)	12.5	29.6	50.9	6.2	0.8	5.4	28.2	50.9	13.8	1.7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4.0	19.9	59.0	14.6	2.5	5.2	19.6	48.7	21.6	4.9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2.1	10.7	47.2	29.3	10.7	0.4	12.6	41.9	34.5	10.6
경제정책 (산업발전지원 등)	6.4	28.6	52.3	11.1	1.6	5.0	31.0	43.3	17.9	2.8
고용정책 (일자리지원정책)	6.9	31.7	49.0	11.2	1.2	7.8	36.0	39.8	12.6	3.8
교육정책	7.4	30.7	49.1	11.6	1.2	4.7	35.7	42.1	14.5	3.0
보건의료정책	8.5	31.7	48.6	10.3	0.9	6.6	38.9	37.8	14.2	2.5
돌봄지원정책	13.2	29.8	44.3	11.8	0.9	-				
주거정책	7.5	28.4	46.5	16.0	1.6	4.6	26.3	48.1	17.7	3.3
사회복지정책 (전반)	6.3	19.5	61.8	11.2	1.2	3.6	28.5	50.8	15.1	2.0

주: 2020년에 돌봄지원정책은 조사하지 않았음.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이어서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을 2020년과 비교한 결과, 26.1%에서 28.3%로 2.2%p 소폭 증가한 청년 복지정책을 제외한 모든 복지정책 영역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표 4-5〉 참조). 2020년, 2022년 모두 정부지출 확대 지지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아동 복지정책으로, 44.0%에서 42.7%로 소폭 감소(1.3%p)하는 것에 그쳤다. 장애인 복지정책, 노인 복지정책, 빈곤층 복지정책, 실직자 복지정책은 2년 사이 10%p 안팎으로 아동 복지정책과 비교할 때 비교적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표 4-5〉 복지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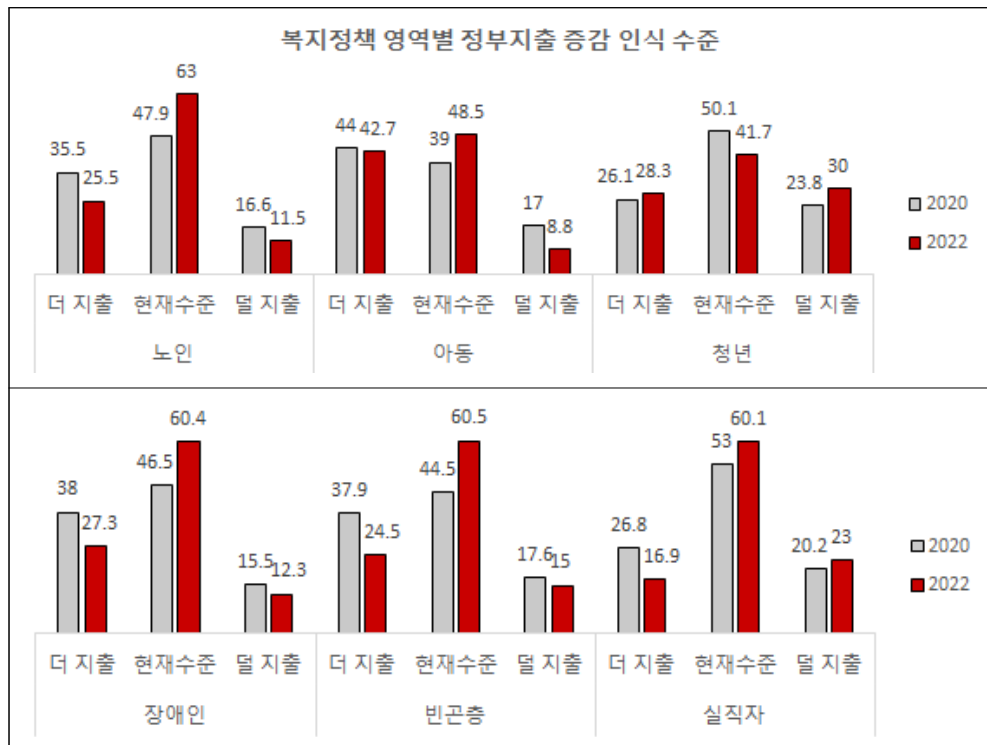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0년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노인 복지정책	6.0	19.5	63.0	10.9	0.6	5.0	30.5	47.9	12.7	3.9
아동 복지정책	11.5	31.2	48.5	8.3	0.5	6.5	37.5	39.0	13.5	3.5
청년 복지정책	8.1	20.2	41.7	22.6	7.4	1.7	24.4	50.1	19.5	4.3
장애인 복지정책	5.6	21.7	60.4	10.4	1.9	5.3	32.7	46.5	12.0	3.5
빈곤층 복지정책	4.8	19.7	60.5	13.7	1.3	5.3	32.6	44.5	13.7	3.9
실직자 복지정책	2.8	14.1	60.1	19.9	3.1	2.7	24.1	53.0	16.0	4.2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2] 아동,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 주체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이어서 과거 정부지출 확대의 지지 비율이 높았던 보건의료 지출 증가, 실직자 지원 지출 증가의 찬성 비율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4-6〉 참조). 보건의료의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한 찬성 비율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다 2022년에 약 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실직자 지원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은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낸다. 2006년 55.6%였던 것이 2020년 26.8%, 2022년 16.9%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4-6〉 보건의료, 실직자 지원 지출 증가 찬성 비율 추이(2006~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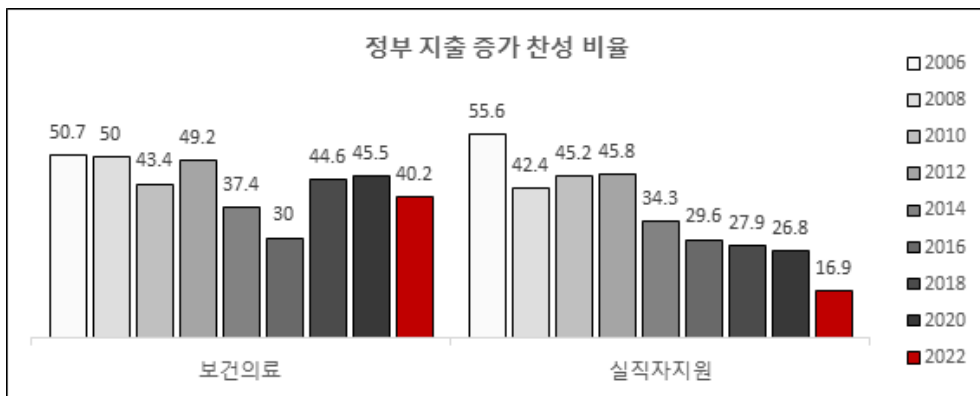
구분	보건의료 정부지출 증가 찬성	실직자 지원 정부지출 증가 찬성
2006	50.7	55.6
2008	50.0	42.4
2010	43.4	45.2
2012	49.2	45.8
2014	37.4	34.3
2016	30.0	29.6
2018	44.6	27.9
2020	45.5	26.8
2022	40.2	16.9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3〕 보건의료, 실직자 지원 지출 증가 찬성 비율 추이(2006~2022년)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5. 세금부담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

세금부담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을 2020년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점은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에 대한 동의 비율이 37.1%에서 43.0%로 약 6%p 가까이 증가한 반면, ‘새로운 세금 도입’에 대한 동의 비율은 45.7%에서 37.2%로 약 9%p 가까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에 대한 동의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긴 하나 65.3%에서 57.5%로 감소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13.3%에서 4.6%로 크게 감소하였다. ‘국채 확대’에 대한 동의 비율은 다른 재원 마련 방법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나 2020년 19.0%에서 2022년 27.3%로 8%p 가까이 증가하였다(〈표 4-7〉 참조).

〈표 4-7〉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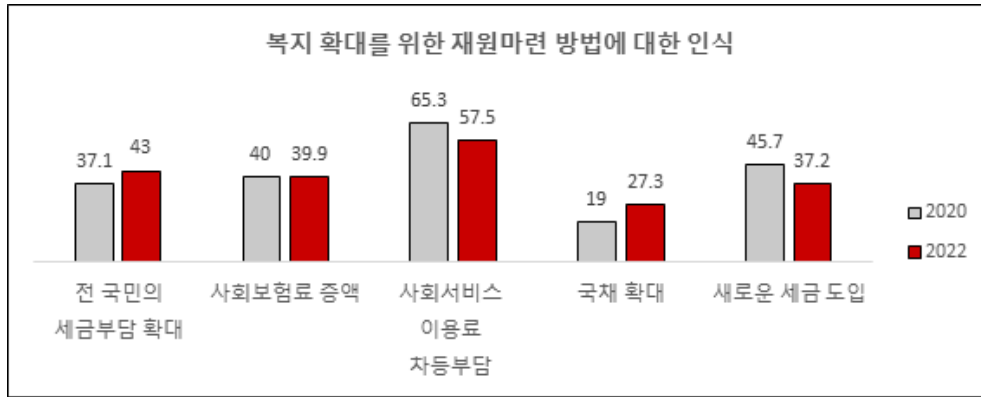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0년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안 함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	5.0	38.0	45.0	12.0	3.3	33.8	52.2	10.7
사회보험료 증액	2.5	37.4	45.4	14.7	3.3	36.7	49.1	10.9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	4.6	52.9	34.6	7.9	13.3	52.0	30.7	4.0
국채 확대	1.0	26.3	49.0	23.7	1.6	17.4	55.8	25.2
새로운 세금 도입	8.6	28.6	45.9	16.9	4.5	41.2	42.0	12.3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4]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동의를 2020년과 비교하였다 (<표 4-8> 참조), 소득세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으로 소득세 증액에 동의하는 비율은 2020년 25.5%에서 2022년 39.6%로 14%p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에 반해, 상속/증여세 증액은 약 11%p, 법인세 증액은 약 8%p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lt;표 4-8&gt; 복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증세 방안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2022년				2020년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동의	동의 안 함	매우 동의 안 함
소득세 증액	1.9	37.7	46.8	13.6	2.0	23.5	59.7	14.8
소비세 증액	4.3	32.4	48.3	15.0	5.9	34.3	48.9	10.9
법인세 증액	26.7	39.1	23.8	10.4	27.3	46.9	21.9	3.9
재산세 증액	10.2	37.0	37.5	15.3	13.7	38.0	37.1	11.2
상속/증여세 증액	9.5	39.5	35.1	15.9	17.1	42.5	33.1	7.3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조세부담 의향에 관한 의견을 2020년과 비교한 결과, 모든 경우에 대하여 조세부담 의향 수준이 감소하였고, 특히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세금 납부 의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4-9〉 참조). 평균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은 5.13점에서 5.03점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은 5.62점에서 5.18점으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은 5.50점에서 5.22점으로 감소하였다.

〈표 4-9〉 조세부담 의향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점)

구분		2022년										평균
		<div>전혀 더 낼 생각 없음</div> <div>←</div> <div>→</div> <div>많이 라도 더 낼 것</div>										
		1	2	3	4	5	6	7	8	9	10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22	6.1	8.2	11.1	10.8	18.7	19.7	16.0	5.1	3.2	1.1	5.03
	‘20	3.8	5.2	9.8	12.9	21.0	25.8	15.5	4.8	1.0	0.2	5.13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22	6.0	7.2	10.1	9.9	18.5	20.4	16.6	6.7	2.6	2.0	5.18
	‘20	2.8	3.0	6.1	11.0	19.2	25.3	21.1	9.4	1.2	0.9	5.62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22	5.5	6.7	7.9	10.2	21.1	22.2	16.3	7.0	1.6	1.5	5.22
	‘20	3.1	3.2	5.9	10.6	23.2	23.5	21.6	7.9	0.7	0.3	5.50

주 :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납부 의향이 높음. (10점 기준)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선별적 복지 증가,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의 경우, 2020년과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의 평균이 다소 높았으나, 2022년에는 둘 다 그 의향이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된다(〈표 4-10〉 참조). 다만, 그 하락의 정도는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10〉 선별적,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 추이(2006~2022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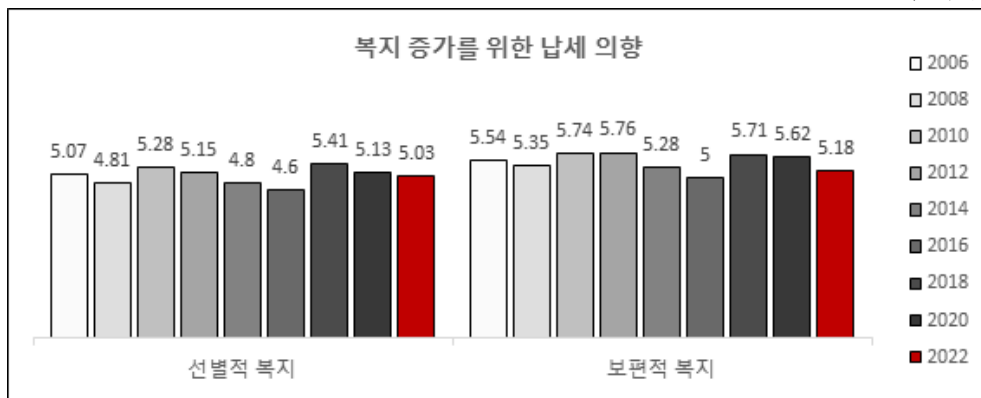
구분	선별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
2006	5.07	5.54
2008	4.81	5.35
2010	5.28	5.74
2012	5.15	5.76
2014	4.80	5.28
2016	4.60	5.00
2018	5.41	5.71
2020	5.13	5.62
2022	5.03	5.18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5〕 선별적, 보편적 복지 증가를 위한 납세 의향 추이(2006~2022년)

(단위: 점)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납세 의사의 경우, 2020년과 비교할 때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21.5%에서 25.4%로 3.9%p 높아진 반면, 보편적 복지 혹은 소득 증가 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2.5%에서 27.9%, 30.5%에서 26.4%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감소하는 추이에도 불구하고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에 동의하는 국민이 약간 더 많고, 소득 증가 시 복지 증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4-11〉 참조).

〈표 4-11〉 납세 의사 추이(2006~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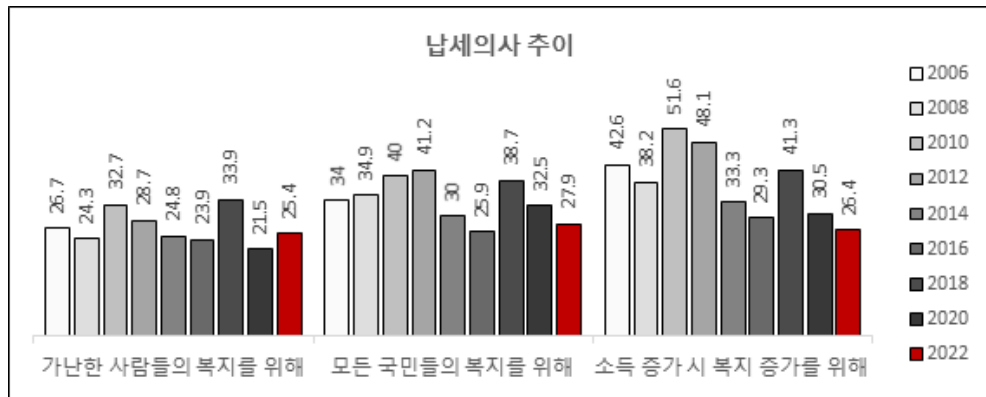
구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 있음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 있음	소득 증가 시 복지 증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 있음
2006	26.7	34.0	42.6
2008	24.3	34.9	38.2
2010	32.7	40.0	51.6
2012	28.7	41.2	48.1
2014	24.8	30.0	33.3
2016	23.9	25.9	29.3
2018	33.9	38.7	41.3
2020	21.5	32.5	30.5
2022	25.4	27.9	26.4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6〕 납세 의사 추이(2006~2022년)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지난 세 차례의 조사(2018, 2020, 2022년) 모두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 증세를 지지하는 비율이 각각 71.0%, 74.2%,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세, 재산세 인상은 2022년과 비교할 때 동의 비율의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2년 사이 약 14%p 감소한 것에 반해, 소득세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약 17%p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4-12〉 참조).

〈표 4-12〉 복지 증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인식 비교(2018~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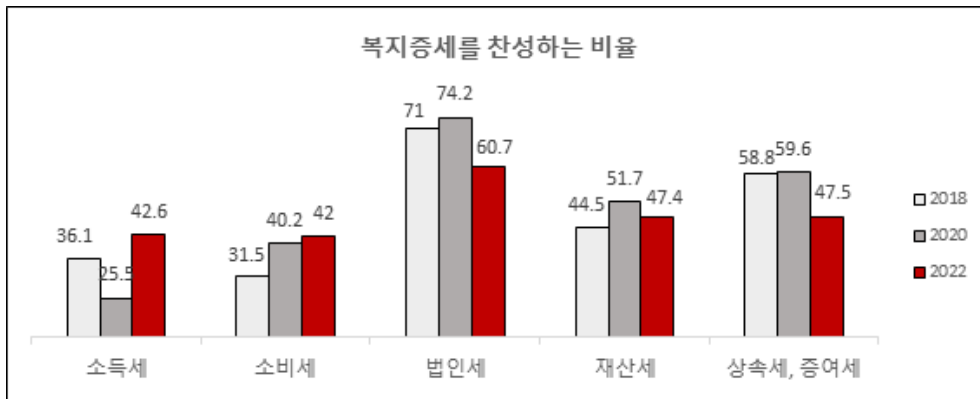
구분	소득세 인상	소비세 인상	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상속/증여세 인상
2018	36.1	31.5	71.0	44.5	58.8
2020	25.5	40.2	74.2	51.7	59.6
2022	42.6	42.0	60.7	47.4	47.5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7〕 복지 증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인식 비교(2018~2022년)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제2절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노인복지정책 개혁 방향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요양과 치료’와 ‘노후소득보장’,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는 높아진 반면, ‘일자리 제공’, ‘가사 도움’은 낮아졌다.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의 노인복지 우선순위의 인식 추이를 살펴보면, 각 정책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4-13〉 참조). 다만, 2018년 이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이 되었을 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물론 2022년을 제외하면 노후소득보장보다 일자리 제공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점에서 고령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노후 빈곤 예방 및 은퇴 후 적절한 소득 유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표 4-13〉 노인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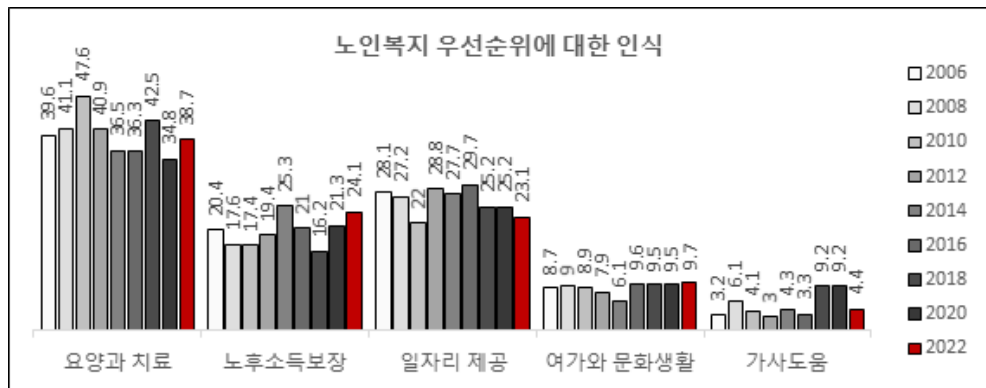
구분	요양과 치료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일자리 제공	여가와 문화생활	가사 도움
2006	39.6	20.4	28.1	8.7	3.2
2008	41.1	17.6	27.2	9.0	6.1
2010	47.6	17.4	22.0	8.9	4.1
2012	40.9	19.4	28.8	7.9	3.0
2014	36.5	25.3	27.7	6.1	4.3
2016	36.3	21.0	29.7	9.6	3.3
2018	42.5	16.2	25.2	9.5	9.2
2020	34.8	21.3	25.2	9.5	9.2
2022	38.7	24.1	23.1	9.7	4.4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8〕 노인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제3절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통일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통일과 통일에 따른 사회지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급여 등 - 확대를 위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2020년과 비교할 때 대체로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통일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에 있어서 더 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022년 모두 30%대 초반 수준이며, 더 낼 생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 66.8%, 2022년 66.2%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표 4-14〉 참조).

〈표 4-14〉 통일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많이 더 낼 생각 있다	조금 더 낼 생각 있다	별로 더 낼 생각 없다	전혀 더 낼 생각 없다			
2022년	1.8	32.0	47.5	18.7	2.17	0.74	(1,000)
2020년	2.0	31.2	44.4	22.4	2.87	0.78	(1,000)

주: 평균 점수는 '통일과 통일에 따른 사회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해 많이 더 낼 생각이 있다(1)~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4)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2.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7.6%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혹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조사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인지도가 30% 수준에 그친 것에 비해 2022년에는 47.6%로 나타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4-15〉 참조).

〈표 4-15〉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전혀 알지 못함	잘 알지 못하나, 들어본 적 있음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알고 있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음			
2022년	8.4	44.0	42.1	5.5	2.45	0.73	(1,000)
2020년	20.1	49.2	26.2	4.5	2.15	0.79	(1,000)

주: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잘 알지 못한다고 인식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이번에는 ‘일반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값이라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질문했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4%는 상품 구입,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7%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할 때 원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4-16〉 참조).

〈표 4-16〉 사회적 경제 조직 생상품 구매 및 이용 의사: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구매/이용 하고 싶다	약간 구매/이용 하고 싶다	보통 이다	별로 구매/이용 하고 싶지 않다	전혀 구매/이용 하고 싶지 않다			
2022년	3.3	30.1	50.9	13.8	1.9	3.19	0.78	(1,000)
2020년	5.5	41.0	43.7	6.3	3.5	2.61	0.83	(1,000)

주: 평균 점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시거나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에 대해 매우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싶다(1)~전혀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싶지 않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 기부 또는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2022년에 전체 응답자의 22.1%가 투자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20년의 32.8%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응답 비율이다(〈표 4-17〉 참조).

〈표 4-17〉 사회적 경제 조직 기부 혹은 투자 의사: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하고 싶다	약간 하고 싶다	보통 이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전혀 하고 싶지 않다			
2022년	2.4	19.7	50.6	21.8	5.5	2.92	0.85	(1,000)
2020년	3.7	29.1	45.0	15.0	7.2	2.93	0.93	(1,000)

주: 평균 점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해 기부 또는 투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에 대해 매우 하고 싶다(1)~전혀 하고 싶지 않다(5)로 응답한 값을 역코딩하여 활용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1%가 찬성하고, 42.9%가 반대로 나타나 다수의 우리 국민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0년에 71.8%가 찬성으로 응답한 것에 비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국가 지원의 지지가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 4-18〉 참조).

〈표 4-18〉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확대 관련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2022년	2.0	55.1	38.7	4.2	2.45	0.61	(1,000)
2020년	7.2	64.6	23.9	4.3	2.25	0.65	(1,000)

주: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 지원정책 확대에 반대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다양한 복지 욕구(보육, 노인 돌봄, 학교교육, 평생교육, 보건의료, 주거서비스 등)와 연관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4%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과반 이상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2020년의 77.6%에 비하면 그 하락 폭이 두드러진다(〈표 4-19〉 참조).

〈표 4-19〉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점, 명)

구분	응답 범주				평균	표준 편차	사례 수
	매우 바람직	약간 바람직	약간 바람직하지 않음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2022년	4.0	55.4	34.2	6.4	2.43	0.67	(1,000)
2020년	13.7	63.9	19.7	2.7	2.11	0.66	(1,000)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제4절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 1. 정치적 성향

구체적인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향을 확인한 결과, 2020년과 비교할 때 각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에 있어 순위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지비율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 살리기(후보 을)’, ‘제한적 복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후보 갑)’, ‘노동자, 빈민을 위한 정책 실현(후보 병)’,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 갑, 후보 을은 각각 2.5%p, 4.9%p씩 지지 비율이 증가한 반면, 후보 병,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고 표를 지지하는 비율은 각각 5.4%p, 2.8%p 감소하였다(〈표 4-20〉 참조). 이처럼 지난 두 차례의 조사 모두에서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보편적 복지와 경제살리기를 강조한 후보를 지지한 것은 복지와 경제 성장의 균형 있는 조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4-20〉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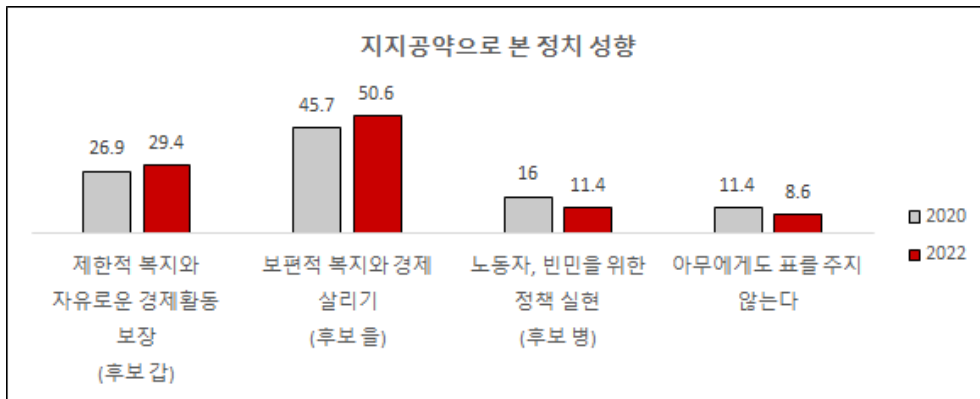
구분	후보 갑	후보 을	후보 병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는다
	제한적 복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보편적 복지와 경제 살리기	노동자, 빈민을 위한 정책 실현	
2022년	29.4	50.6	11.4	8.6
2020년	26.9	45.7	16.0	11.4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9] 지지 공약으로 본 정치 성향: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좌파, 중도, 우파를 11점 척도 연속 스펙트럼으로 각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지난 2년 사이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표 4-21〉 참조). 그 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2020년 32.7%에서 약 15%p 증가하여 2022년에는 49.7%로 나타나 국민 절반 가까이가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좌파와 우파는 둘 다 감소하여 2022년에는 각각 18.8%, 31.5%로 나타났다.

〈표 4-21〉 자신의 정치 이념적 위치: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좌파					중도				우파	
	-5	-4	-3	-2	-1	0	+1	+2	+3	+4	+5
2022년	18.8					49.7	31.5				
2020년	28.7					32.7	38.6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2.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한국의 소득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표 4-22〉 참조). 2006년 전체 응답자의 95.2%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것과 비교할 때, 2020년 76.9%, 2022년은 79.3%로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이를 나타낸다.

한편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에 동의하는 비율은 2020년과 비교할 때 약 5%p 감소하여 2022년에는 56.5%로 나타났고, 중립을 유지하는 입장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표 4-23〉 참조).

〈표 4-22〉 소득 격차에 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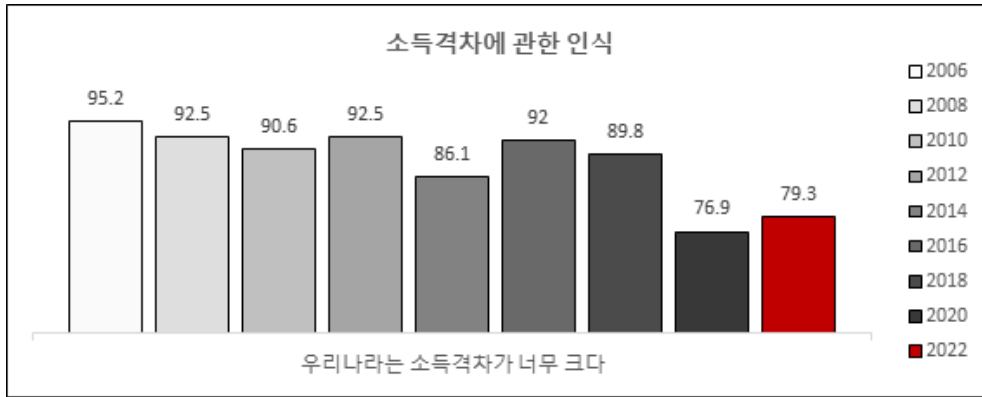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2006	95.2
2008	92.5
2010	90.6
2012	92.5
2014	86.1
2016	92.0
2018	89.8
2020	76.9
2022	79.3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10] 소득 격차에 관한 인식 추이(2006~2022년)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표 4-23〉 소득 격차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2022년					2020년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크다	28.3	51.0	17.4	3.0	0.3	25.0	51.9	20.4	2.6	0.1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15.4	41.1	31.5	9.3	2.7	21.4	39.6	33.8	4.8	0.4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3. 일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복지를 보장한다면 현재에 비해 얼마나 노동시간을 줄일 것인지 조사하였다. 노동시간을 현재 수준에서 거의 줄이지 않겠다는 비율은 2020년 17.2%, 2022년 19.8%로 약간 증가하였고, 노동시간을 절반보다 더 줄이겠다는 의견은 2020년 26.3%에서 약 9%p 감소한 17.1%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시간을 70~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의견은 2년 전 26.3%에서 약 11%p 가까이 증가하여 36.9%로 나타난다(〈표 4-24〉 참조).



〈표 4-24〉 기본적 생활 보장 시, 희망 노동시간: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일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일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22년	1.0	1.6	3.9	4.7	5.9	13.6	12.6	18.5	18.4	11.0	8.8
2020년	0.9	1.4	3.1	8.5	12.4	16.4	13.8	15.9	10.4	7.4	9.8
2022년	17.1					26.2			36.9		19.8
2020년	26.3					30.2			26.3		17.2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4. 공정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및 타인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대한 의견은 2020년과 2022년 모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를 지지하는 수준이 평균 4.08점(7점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에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가 평균 3.86점으로 공정성 인식 문항 가운데 지지 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2022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가 평균 3.62점,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가 평균 3.65점으로 지지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4-25〉 참조). 2020년에는 평가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던 것에 반해, 2022년에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25〉 우리 사회 및 타인에 대한 공정성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점)

구분	2022년	2020년
	평균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3.98	3.97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4.08	4.08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가진다	4.05	4.0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3.93	3.89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3.93	3.94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3.83	3.95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	3.65	3.86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	3.62	3.94

주: 7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함을 의미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5. 일반적인 복지 인식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두 가지 문항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동의, 중립, 반대 의견의 비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에 반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해야 해야 함’에 동의하는 의견은 2020년 16.5%, 2022년 20.1%로 증가, 반대하는 의견은 41.6%에서 33.3%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표 4-26〉 참조).

〈표 4-26〉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2022년					2020년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	5.3	22.7	44.9	24.9	2.2	4.1	25.5	43.7	24.7	2.0
	28.0			27.1		29.6			26.7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1.7	18.4	46.6	27.8	5.5	0.7	15.8	41.9	32.6	9.0
	20.1			33.3		16.5			41.6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복지에 대한 견해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비율은 동의, 반대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하였고, 중립 의견은 지난 2년 사이 39.9%에서 54.7%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4-27〉 참조).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동의 비율이 2020년 33.3%에서 2022년 39.1%로 증가한 반면, 반대 의견은 동 기간 27.7%에서 23.3%로 감소하였다.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 비율이 30.2%로 2020년(27.4%)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반대 비율은 2022년 33.6%로 2020년(35.6%)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자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22년 28.2%로 2020년(21.6%)과 비교할 때 약 7%p 증가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더 큰 수준에서 감소(33.7% → 21.5%)한 것이 특징이다.

〈표 4-27〉 복지에 대한 견해: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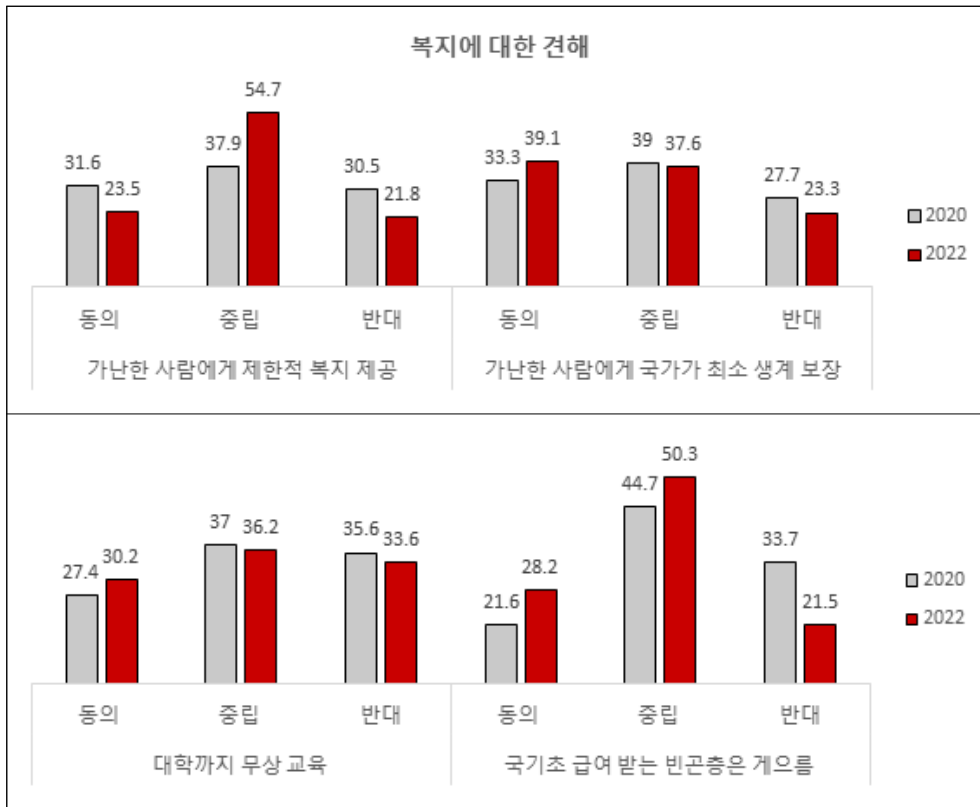
구분		응답 범주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제공	2020년	6.5	25.1	37.9	26.2	4.3
		31.6			30.5	
	2022년	3.8	19.7	54.7	19.3	2.5
		23.5			21.8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 생계 보장	2020년	4.5	28.8	39.0	22.3	5.4
		33.3			27.7	
	2022년	5.1	34.0	37.6	17.3	6.0
		39.1			23.3	
대학까지 무상교육	2020년	3.9	23.5	37.0	28.0	7.6
		27.4			35.6	
	2022년	5.8	24.4	36.2	25.1	8.5
		30.2			33.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게으름	2020년	3.7	17.9	44.7	27.1	6.6
		21.6			33.7	
	2022년	6.3	21.9	50.3	15.2	6.3
		28.2			21.5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11] 소득 격차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앞서 우리는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이 여전히 여성(어머니)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과 비교할 때 어린 자녀를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38.7%였으나, 2022년에는 이보다 크게 증가한 60.5%로 나타났다. 지난 2년 사이 자녀 돌봄에 대한 모성 책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욱 확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하여 코로나에 따른 아동돌봄의 공백 등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 역시 2020년 24.5%에서 2022년 36.2%로 증가하였다(〈표 4-28〉 참조). 이상의 결과들은 가족 돌봄 혹은 부양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가족 범주 내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4-28〉 가족 관련 인식 수준: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2022년					2020년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반대	매우 반대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22.1	38.4	26.4	10.5	2.6	8.4	30.3	36.9	21.5	2.9
	60.5			13.1		38.7			24.4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11.1	25.1	42.1	17.7	4.0	4.0	20.5	42.6	25.1	7.8
	36.2			21.7		24.5			32.9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제5절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 삶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도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먼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행복도를 2020년과 비교하였다. 지난 2년 사이 삶의 만족도는 평균 5.69점에서 6.42점으로, 행복도는 평균 6.03점에서 6.55점으로 둘 다 증가하였다(〈표 4-29〉 참조).

〈표 4-29〉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및 행복도: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점)

구분	삶의 만족도 (평균)	행복도 (평균)
2020년	5.69	6.03
2022년	6.42	6.55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2. 신뢰수준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동의 비율이 39.9%에서 31.5%로 감소하였고, ‘대체로 남을 도우려고 함’에 동의하는 비율은 39.5%에서

4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30〉 참조).

〈표 4-30〉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구분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 (동의)	대체로 남을 도우려고 함 (동의)
2020년	39.9	39.5
2022년	31.5	45.0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3.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현재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지난 2년 사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36.7%에서 49.3%로 약 13%p 높아진 반면,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7.2%에서 24.2%로 낮아졌다. ‘보통’이라는 중립적 의견은 26.1%에서 26.5%로 변화가 없었다(〈표 4-31〉 참조). 이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복수 응답)의 경우, ‘소득, 성, 지위 등 불균형, 사회적 격차가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73.1%에서 56.9%, ‘빈곤, 실업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63.0%에서 45.7%로 감소하였다. 한편, ‘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할이 작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16.8%에서 46.4%로 3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2〉 참조).

〈표 4-31〉 우리나라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점)

구분	부정	보통	긍정	평균
2020년	36.7	26.1	37.2	4.93
2022년	49.3	26.5	24.2	4.18

주: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함. 0~10까지의 답변 중 0~4까지를 부정적, 5는 보통, 6~10을 긍정적으로 간주함.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표 4-32〉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종합 순위)\_복수 응답: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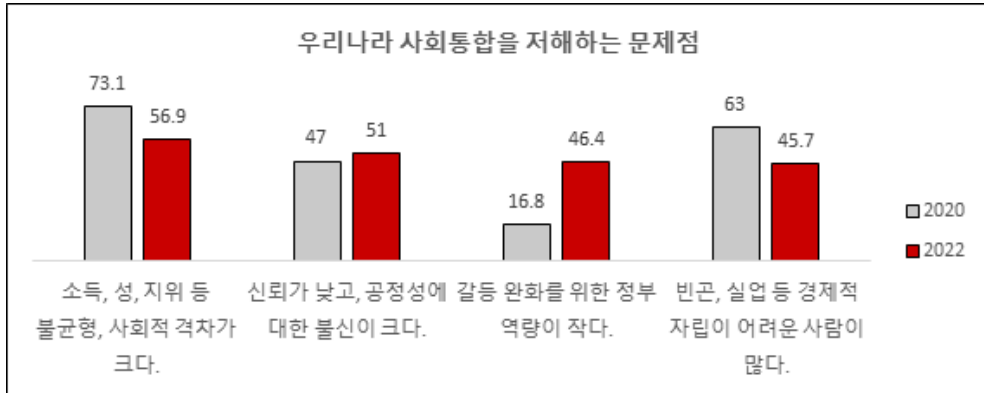
구분	소득, 성, 지위 등 불균형, 사회적 격차가 크다	신뢰가 낮고,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	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량이 작다	빈곤, 실업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
2020년	73.1	47.0	16.8	63.0
2022년	56.9	51.0	46.4	45.7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12〕 우리나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점(종합 순위)\_복수 응답: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마지막으로,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 중 앞으로 가장 크게 변화할 사항에 있어서 2020년, 2022년 각 항목별 동의 비율은 그 순위가 비슷하였으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성별, 교육수준별, 고용형태별 불균형과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둘 다 소폭 감소하였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것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14.1%에서 24.7%로 10%p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표 4-33〉 참조).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어려움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별, 학력, 고용 안정성에 따라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적 격차 역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최근으로 오면서 더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표 4-33〉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가장 크게 변화할 것):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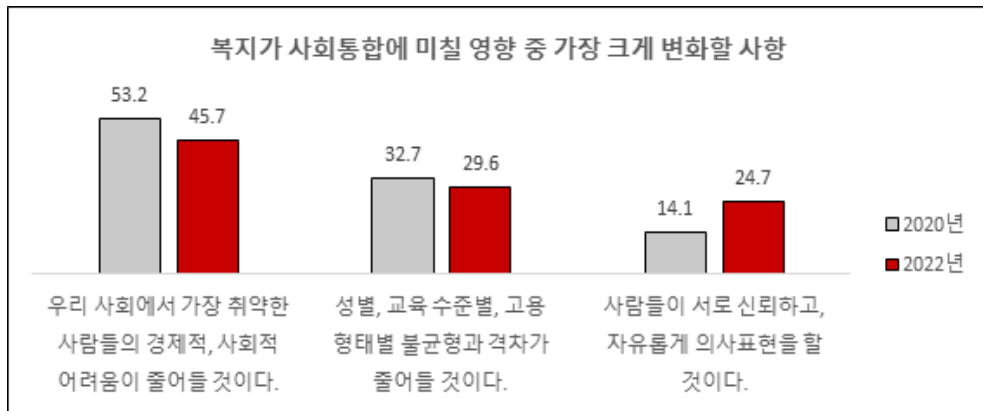
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든 것이다.	성별, 교육수준별, 고용 형태별 불균형과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것이다.
2020년	53.2	32.7	14.1
2022년	45.7	29.6	24.7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그림 4-13] 복지가 사회통합에 미칠 영향(가장 크게 변화할 것): 2020년, 2022년 비교

(단위: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정책 욕구 및 사회통합 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제5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 제언



## 제5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정책 영역별 인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문항은 크게 5개 영역, ‘①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②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③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④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⑤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구성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11개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은 2020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정부 책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 정책’(81.3%)이었다. 아동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책임 응답률은 81.1%로 2020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2년 사이 가장 크게 정부 책임 인식이 증가한 것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으로 나타났다. 2020년 48.6%에서 2022년 63.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2년 사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사회정책에서 고소득 집단의 정부 책임 인식 수준이 높았고,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을 가진 이가 중도, 우파 성향인 이들보다 정부 책임 인식이 높았다.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의 주체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은 장애인 (80.9%)으로 나타났고, 장기실직자에 대한 응답 비율이 40.3%로 가장 낮았다. 2020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삶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인식 하에 이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동과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 책임이 대체로 가족 책임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점차 국가 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범위의 경우, 대체로 아동보육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 서비스에 대하여 중간소득 이하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건의료 서비스(30.3%)가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아동보육 서비스는 보편적 보육제도를 통해 이미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과 비교하면,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매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보다 두텁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현금성 소득지원보다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동과 노인은 상대적으로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고,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은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현금성 소득지원 확대를, 고소득층은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에 있어서는 대다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응답자 다수가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는 아동보육서비스(78.7%)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 인식은 지역별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사회정책 영역별 정부지출 증감에 대한 인식의 경우, 모든 사회정책 영역에서 현재 수준으로 지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은 돌봄지원정책(43.0%)에서 가장 높았다. 복지정책 영역 대상별 정부지출 확대의 경우, 현재의 지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보다 정부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 복지정책(42.7%)이 가장 높았고, 축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청년 복지정책(30.0%), 실직자 복지정책(23.0%)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영역에서 2030 세대가 60대 이상보다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60대 이상은 노인 복지정책에 한하여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영역에서 저소득층보다 중상층 이상에서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확대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사회서비스 이용료 차등 부담 (57.5%)이며,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43.0%), 사회보험료 증액(39.9%),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37.2%), 국채 확대(27.3%) 순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의 세금부담 확대, 사회보험료 증액에 대한 동의는 4050 세대에서, 국채 확대에 대한 동의는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 확대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전통적 증세 방안은 법인세 증액(65.8%)이었으며, 소비세 증액(36.7%)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각 영역별 조세부담 의향의 경우, 평균 5점대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복지 확대를 위한 납세 의향이 있다는 평균(5.22점)이 가장 높았고,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납세 의향이 평균 5.18점,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납세 의향이 평균 5.03점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하면 모든 경우에 대하여 납세 의향 수준이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도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한 납세 의향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2. 구체적인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인복지정책의 개혁 방향에서 우선순위는 ‘요양과 치료’(38.7%)였고, 그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24.1%), 일자리 제공(23.1%), 여가와 문화생활(9.7%), 가사 도움(4.4%)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정책의 당사자인 60세 이상은 이들 중 40%가 요양과 치료를 우선 제공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하였고, 고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2020년과 이를 비교하면, 요양과 치료,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다. 2018년 이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의 우선순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인이 되었을 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022년을 제외하면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일자리 제공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점에서 고령자에 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노후 빈곤 예방 및 은퇴 후 적절한 소득 유지를 위한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연금 급여를 줄이는 대신 노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동의율이 47.0%로 가장 높고,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연금지급시기를 연장하는 것 - 수급개시연령 연장 - 에 대한 동의율 또한 46.7%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지지율이 29.2%로 가장 높았고,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23.4%,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23.2%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경우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27.2%)가 다른 세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소득층은 자신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한 선호(2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서는 현행 유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44.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수급개시연령 연장이 31.8%, 보험료 인상이 16.2%, 급여를 덜 받는 방안이 7.7%의 동의율을 나타냈다.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60세 이상(52.5%)에서 가장 높고, 4050 세대가 41.0%의 동의율을 나타내는 등 60세 이상과는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세대 간의 극명한 인식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수급개시연령 연장에 대한 선호는 2030 세대(33.9%)에서 가장 높고, 급여를 덜 받는 방안에 대한 선호는 모든 세대에서 낮은 편이나, 특히 2030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유지에 대한 선호는 저소득층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선호는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정책의 경우, ‘모든 계층이 무상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맞벌이/한부모 가족이 장시간 보육서비스 이용’, ‘현금성 양육수당 지급’으로 구성된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족이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의 동의 수준(3.89점)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동의 수준은 맞벌이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3.93점), 현금성 수당 지급에 대한 선호는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 비율이 49.9%로 가장 높았고, 2030 세대는 지급연령 확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들의 27.6%가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지급계층 역시 현행 유지에 대한 지지비율이 49.1%로 가장 높았다. 급여수준 또한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71.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중간소득층에서 급여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현금성 청년복지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 청년에게만 현금성 소득지원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51.8%로 과반을 넘어섰고, 이와 달리 비현금성 지원은 중간소득층 청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다. 즉 현금지원은 저소득 청년에게, 비현금성 사회서비스 지원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지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 40.6%, 반대 59.4%, 기존의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 33.2%, 반대 66.8%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많이 지지하였고(46.2%),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들 집단의 지지율이 36.7%로 가장 높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좌파라고 응답한 경우에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46.8%로, 중도(39.6%), 우파(38.5%)보다 높았다.

통일이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63.2%가 악화될 것으로 응답함에 따라 통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것이 확인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영향(42.1%) 우려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통일비용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에서 전체 응답자의 33.8%는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으나, 66.2%는 더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상’,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복지정책 필요성’으로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8%가 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약 89%가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았고, 86.1%는 과학기술의 인간노동 대체로 인해 전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우파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경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한 응답률(81.4%)이 가장 높았고, 전 국민 현금지원에 대하여는 세대가 높을수록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7.6%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혹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30%)과 비교하면 지난 2년 사이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33.4%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한 상품을 구입,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원치 않는다는 의견은 15.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2.1%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 기부 또는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2020년(32.8%)과 비교하면 응답률은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59.4%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020년(77.6%)과 비교하면 응답률이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정치적 성향의 경우, ‘보편적 복지와 경제 살리기’에 대한 지지율이 50.6%로 가장 높았고, 보수 성향인 ‘제한적 복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은 29.4%, ‘노동자, 빈민을 위한 정책 실현’은 11.4%,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겠다는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할 때 각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의 순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보편적 복지와 경제살리기를 강조한 후보를 지지한 것은 복지와 경제성장의 균형 있는 조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지난 2년 사이 변화가 두드러졌다. 자신이 ‘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2020년 32.7%에서 2022년에는 49.7%로 증가하여 현재는 국민 절반 가까이가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관적 계층 인식에 있어서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 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한 응답 비율이 41.8%로 가장 많았고, 소득 중간층 45.5%, 소득 상층 12.7%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상층으로의 계층 이동을 전망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12.7%에 불과한 상층 인식 비율은 10년 후 전망에서 30.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미래에는 사회경제적 계층이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79.3%는 한국 사회의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격차가 크지 않은 평등한 사회로 인식하는 비율은 3.3% 이하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 해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에는 59.5%가 동의하였고,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은 12%, 중립적 혹은 유보적 의견은 31.5%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더라도 노동시간을 거의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9.8%에 그쳤으나, 70~80%로 줄이겠다는 의견은 36.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정성 인식의 경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4.08점)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문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3.62점)로 나타났다. 즉 절차적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는 평가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던 것에 반해, 2022년에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의 경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에는 28.0%가 찬성, 2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하여는 20.1%가 찬성, 33.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감세에는 소극적이며, 복지 증세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0.5%가 찬성, 13.1%만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36.2%가 찬성, 21.7%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두 문항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린 자녀에 대한 모성 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3.67점)이 자식의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동의 수준(3.22점)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 5.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평균 6.42점으로 나타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파 성향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행복도는 이보다 약간 높은 평균 6.55점으로 나타나는데, 집단 간 차이는 대체로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우리 사회는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비율은 31.5%, 평균 3.10점으로 나타났고, ‘우리 사회는 대체로 남을 도우려고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5.0%,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사회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부정이 49.3%로 긍정(24.2%)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응답률이 높았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남성, 60대 이상, 저소득층, 좌파 집단에서 사회통합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사회통합 저해 요인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고, ‘성별, 교육수준별, 고용형태별 불균형과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29.6%),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것이다’(24.7%)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고, 특히 여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파 성향일수록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조사결과들은 사회정책 각 영역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에 있어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정책은 노동시장 및 기술 변화와 같은 거시적 환경 변화 외에도 개인 차원의 정치적 성향,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 향후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보편적 복지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공약을 지지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복지제공이 성장과 분배라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닌,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절반 가까운 국민이 사회통합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사회정책의 수행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올해 실시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정책 영역에서 정책 수요자들의 욕구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심층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신규 추가된 조사 문항의 경우,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누가 어떠한 정책을 지지하는가’를 파악하는 친복지 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인식 조사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누가, 왜 이러한 정책 혹은 방향을 지지하지 않는가’와 같은 반복지 지형을 분석하는 것 역시 사회정책 설계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내년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치열한 정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정해식, 이원진, 고혜진, 김영미, 안상훈. (2021). 삶의 질/사회통합지수 및 보건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미래예측 모델 개발: 사회통합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계청 홈페이지(사회통합실태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0&vw\\_cd=MT\\_ZTITLE&list\\_id=D2\\_002\\_003&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0&vw_cd=MT_ZTITLE&list_id=D2_002_003&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2023.3.19. 인출)





## [부록 1]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설문지

###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의 면접원 \_\_\_\_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사회정책 국민 욕구 및 인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복지국가가 확대되어 가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 복지국가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 취합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할애하여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주관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이글로벌리얼씨	조사문의   이인택 차장 itlee@globalri.co.kr
-------------------	-----------------	---------------------------------------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목적으로 이용되며, 귀사의 비밀이 절대 보장됨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응답자 성별	<input type="checkbox"/> ① 남 <input type="checkbox"/> ② 여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만 19세 미만, 만 75세 초과 설문중단
시도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경기 <input type="checkbox"/> ⑨ 강원 <input type="checkbox"/> ⑩ 충북 <input type="checkbox"/> ⑪ 충남 <input type="checkbox"/> ⑫ 전북 <input type="checkbox"/> ⑬ 전남 <input type="checkbox"/> ⑭ 경북 <input type="checkbox"/> ⑮ 경남 <input type="checkbox"/> ⑯ 제주 <input type="checkbox"/> ⑰ 세종		
지역 크기	<input type="checkbox"/> ①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② 중소도시(~동) <input type="checkbox"/> ③ 읍/면 지역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가구주 본인 <input type="checkbox"/> ②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 자녀 <input type="checkbox"/> ④ 부모 <input type="checkbox"/> ⑤ 형제자매 <input type="checkbox"/> ⑥ 조부모 <input type="checkbox"/> ⑦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⑧ 친척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동안
면접원 ID		면접원 성명	
수퍼바이저 확인		검증 결과	

## I.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다음은 복지에 관한 일반적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당연히 정부 책임이다	대체로 정부 책임인 것 같다	대체로 정부 책임이 아닌 것 같다	당연히 정부 책임이 아니다
1)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1	2	3	4
2)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	2	3	4
3)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1	2	3	4
4) 실업자가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1	2	3	4
5)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	1	2	3	4
6)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1	2	3	4
7) 아동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	2	3	4
8) 장애인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	1	2	3	4
9)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	1	2	3	4
10) 빈곤층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	1	2	3	4
11) 청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1	2	3	4

**문2** 귀하는 다음 대상집단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유지를 누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노인의 경우, 젊었을 때 일해서 모아놓은 저축이나 사적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은 '본인이 일해서'에 포함되고,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에 포함됩니다

구분	본인이 일해서	가족, 친지의 지원을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사회 공헌이나 자선단체를 통해서
1) 노인	1	2	3	4
2) 장애인	1	2	3	4
3) 아동	1	2	3	4
4) 북한이탈주민	1	2	3	4
5) 장기실직자	1	2	3	4
6) 저소득층	1	2	3	4
7) 여성가장	1	2	3	4



**문3** 귀하는 다음의 복지서비스를 누구에게까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수록 세금/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야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만	중간소득 이하 사람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잘사는 사람들 (중상층)에게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1) 보건의료서비스	1	2	3	4
2) 요양 및 간병서비스	1	2	3	4
3) 아동보육서비스	1	2	3	4
4) 교육서비스 (대학교육 포함)	1	2	3	4
5) 주거복지서비스	1	2	3	4
6) 장애인복지서비스	1	2	3	4
7) 고용지원서비스 (교육훈련 포함)	1	2	3	4

**문4** 귀하는 정부가 다음의 대상 집단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래 중 어느 것에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현금성 소득지원을 확대한다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
1) 노인	1	2
2) 장애인	1	2
3) 아동	1	2
4) 북한이탈주민	1	2
5) 장기실직자	1	2
6) 저소득층	1	2
7) 여성가장	1	2

**문5** 귀하는 각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누가 맡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운영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구분	국가 (중앙/지방정부)가 설치한 공공기관	민간기관 (영리)	민간기관 (비영리)	가족, 친지 외 개인
1) 아동보육서비스	1	2	3	4
2) 노인돌봄서비스	1	2	3	4
3) 장애인지원서비스	1	2	3	4
4) 교육서비스	1	2	3	4
5) 보건의료서비스	1	2	3	4
6) 간병서비스 (만성질환자, 급성환자 등)	1	2	3	4

**문6**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정부 지출이 현재보다 얼마나 확대 혹은 축소되기를 바라는지 말씀해주시시오.  
단, 정부지출 증가를 위해서는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 증가가 필요합니다.

정책 영역	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1) 치안정책(범죄 및 폭력 대응)	1	2	3	4	5
2)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1	2	3	4	5
3)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1	2	3	4	5
4) 경제정책(산업발전지원 등)	1	2	3	4	5
5) 고용정책(일자리지원정책)	1	2	3	4	5
6) 교육정책	1	2	3	4	5
7) 보건의료정책	1	2	3	4	5
8) 돌봄지원정책	1	2	3	4	5
9) 주거정책	1	2	3	4	5
10) 사회복지정책(전반)	1	2	3	4	5

**문6-1**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한 정부 지출이 현재보다 얼마나 확대 혹은 축소되기를 바라는지 말씀해주시시오.  
단, 정부지출 증가를 위해서는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 증가가 필요합니다.

정책 영역	훨씬 더 많이 지출	조금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1) 노인 복지정책	1	2	3	4	5
2) 아동 복지정책	1	2	3	4	5
3) 청년 복지정책	1	2	3	4	5
4) 장애인 복지정책	1	2	3	4	5
5) 빈곤층 복지정책	1	2	3	4	5
6) 실직자 복지정책	1	2	3	4	5

다음은 복지재원 마련 및 세금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세금은 소득세, 소비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단, 사회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문7**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려면 국민부담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귀하는 다음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마련 방법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복지는 모두의 문제이므로 전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린다	1	2	3	4
2)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올린다	1	2	3	4
3) 보육이나 요양 등 사회서비스 혜택을 입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부담하도록 한다	1	2	3	4
4) 세금, 보험료, 이용료를 높이지 말고 '국채(나라빚)'를 늘린다 (단, 이 경우 후세대의 부담이 늘게 될)	1	2	3	4
5)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도입한다 (자동화세, 로봇세, 탄소세, 사회복지세, 통일세 등)	1	2	3	4

**문8** 만약 향후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면, 귀하는 전통적 증세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세방안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내가 번 돈에 대한 '소득세'를 높인다	1	2	3	4
2)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높인다	1	2	3	4
3) 기업의 '법인세'를 높인다	1	2	3	4
4) 보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를 높인다	1	2	3	4
5) '상속세/증여세'를 높인다	1	2	3	4

**문9** 귀하가 내는 세금이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대부분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									많이라도 더 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0**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									많이라도 더 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1** 만약 귀하의 소득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									많이라도 더 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12** 귀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항목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면, 얼마나 더 부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할 생각이 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부담할 생각이 있다	더 부담할 생각이 별로 없다	더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다
1	2	3	4

## Ⅱ. 구체적 복지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다음은 노후소득보장과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야 할 복지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요양과 치료  
☐ 2) 가사 도움  
☐ 3) 일자리 제공  
☐ 4) 여가와 문화생활  
☐ 5) 노후소득보장(기초연금과 국민연금)  
☐ 6) 기타 ( )

**문14** 향후 기초연금은 지급대상과 지급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선택)** (\* 현재는 만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접원

\* 연령기준은 현행과 같이 만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질문  
 \* 2022년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인당 월 307,500원을 지급하고 있음.

1순위

2순위

- ☐ 1) 지급대상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높인다  
☐ 2) 지급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인다  
☐ 3)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 4) 지급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도 높인다  
☐ 5)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문15** 귀하는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연금 급여를 줄이는 대신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의료, 요양, 주거, 가사지원 등)를 늘리도록 한다	1	2	3	4	5
2)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연금지급을 더 늘리도록 한다	1	2	3	4	5

**문16**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다고 할 때,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개혁 조치는 지금 바로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 ☐ 1)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 2)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  
☐ 3) 급여를 덜 받도록 해야 한다  
☐ 4)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다음은 아동 및 청년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 귀하는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모든 계층이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1	2	3	4	5
2) 맞벌이나 일하는 한부모가족이 더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2	3	4	5
3) 현금성 양육수당(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을 지급하고 보육서비스 이용여부와 사실 선택은 부모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1	2	3	4	5

**문18** 향후 아동수당은 지급대상과 지급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는 만 8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급대상 연령	<input type="checkbox"/> 1) 현행 유지(만 8세까지) <input type="checkbox"/> 2) 초등학교까지 확대 <input type="checkbox"/> 3) 중학생까지 확대 <input type="checkbox"/> 4) 만 18세 아동 전체로 확대
2) 지급대상 계층	<input type="checkbox"/> 1) 현행 유지(모든 아동) <input type="checkbox"/> 2) 저소득층 가구 아동에게만 <input type="checkbox"/> 3) 중간소득층 가구 아동까지 <input type="checkbox"/> 4) 중상층 가구 아동까지
3) 급여 수준	<input type="checkbox"/> 1) 현행 유지 <input type="checkbox"/> 2) 현재보다 인상

**문19** 귀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현금수당이나 사회서비스를 어느 계층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저소득층 가구 청년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중간소득층 가구 청년까지 제공해야 한다	모든 청년에게 제공해야 한다
1) 현금성 소득 지원(청년수당 등)	1	2	3
2) 비현금성 사회서비스(교육, 주거,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	1	2	3

### Ⅲ.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다음은 기본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20** 귀하는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누군가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기본소득 제도란.

-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월 소득을 지급합니다.
- 이는 다른 많은 사회 급여를 대체합니다.
- 이는 모든 사람들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모든 사람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 사람들은 일이나 다른 자원을 통해 돈을 벌더라도 기본소득 금액은 계속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 이 제도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2	3	4

- 문21**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부담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2	3	4

다음은 통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22** 귀하는 통일이 되면 전반적인 사회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될 것이다	약간 개선될 것이다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약간 악화될 것이다	크게 악화될 것이다
1	2	3	4	5

- 문23** 귀하는 통일과 통일에 따른 사회지출(북한주민에 대한 복지급여 등) 확대를 위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많이 더 낼 생각이 있다	조금 더 낼 생각이 있다	별로 더 낼 생각이 없다	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
1	2	3	4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4** 귀하는 아래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로봇과 컴퓨터의 새로운 발전들이 많은 일자리들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기술들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들을 수행하는 환경에서 주로 사용된다.
- 하지만 미래에는 고도로 발달된 로봇과 컴퓨터가 오늘날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1	2	3	4

**문25** 귀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면접원

인간처럼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가능한 인공지능은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로봇, 무인항공기 등도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	매우 관심이 있다
1	2	3	4

**문26** 귀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높다	높다	낮다	매우 낮다
1)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오늘날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	2	3	4
2)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1	2	3	4
3) 로봇과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1	2	3	4
4) 기술이 기존에 인간이 하던 일을 대체하여 내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다	1	2	3	4
5) 사람들은 일에 덜 신경 쓰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6) 전체적인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1	2	3	4
7) 인간에게 새롭고, 더 좋은 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1	2	3	4
8) 고령자, 장애인 친화적인 복지기술 활성화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1	2	3	4

**문27** 귀하는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의 복지정책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1	2	3	4
2)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상담 및 적응지원 서비스 확대	1	2	3	4
3) 지능정보기술 발달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에게 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1	2	3	4
4)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은 금액의 현금 (기본소득)을 지급	1	2	3	4

다음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8** 귀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적은 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면접원

**문31) 응답 후 문32)에 대한 응답을 받기 전, 다음 내용을 응답자에게 설명할 것**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예: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활동 등)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임

**문29** 일반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값이라면, 귀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시거나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매우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싶다	약간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싶다	보통이다	별로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싶지 않다	전혀 구매하거나 이용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문30** 귀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해 기부 또는 투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매우 하고 싶다	약간 하고 싶다	보통이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전혀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문31** 귀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2	3	4

**문32** 귀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바람직하다	약간 바람직하다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	2	3	4

※ 사회서비스는 육아, 아동보육, 노인돌봄,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보건의료, 주거 등 사람들의 일상적인 다양한 복지 욕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무형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예로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돌봄서비스(재가요양, 장애인지원, 신생아 및 산모 지원)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등이 있습니다.

#### Ⅳ.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인식과 태도

**문33** 다음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다음 공약들로 볼 때, 만약 내일 선거가 실시된다면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① 후보 갑	우리나라는 경제도 어려운데 복지를 너무 강조합니다. 저는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로 제한시키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② 후보 을	저는 경제를 살리는 데 힘쓰는 동시에, 국민전체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후보 병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노동자들과 빈민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④ 아무에게도 표를 주지 않는다	

**문34**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좌파 혹은 우파가 되기도 합니다. 좌파에 -5점을 주고 우파에 +5점을 준다면 귀하 자신에게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좌파	중도					우파				
-5	-4	-3	-2	-1	0	+1	+2	+3	+4	+5

**문35** 한국 사회를 10개의 층으로 나눈다면, 현재 귀하의 가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는 어느 계층에 속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10년 후에는 어느 계층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계		10년 전		10년 후	
최상층	1	최상층	1	최상층	1
	2		2		2
	3		3		3
	4		4		4
	5		5		5
	6		6		6
	7		7		7
	8		8		8
	9		9		9
최하층	10	최하층	10	최하층	10

**문36** 다음은 소득분배와 관련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우리나라는 <b>소득격차</b> 가 크다	1	2	3	4	5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b>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b> 이다	1	2	3	4	5

**문37** 귀 가구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복지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하지 않는다 (현재 노동시간의 0%만큼 일한다)					현재와 같이 일한다 (현재 노동시간의 100%만큼 일한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문38** 다음은 우리사회 및 타인에 대한 공정성 관련 항목입니다. 각각에 대해 '전혀 동의안함(1점)' 부터 '매우 동의(7점)' 중 해당 되는 점수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1	2	3	4	5	6	7
전혀 동의안함	동의안함	약간 동의안함	보통	약간 동의	동의	매우 동의
항목						점수
1)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3)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질 자격이 있는 만큼 가진다						
4)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5)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6)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7)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다						
8)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						

**문39**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야 한다.	1	2	3	4	5
2)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1	2	3	4	5
3)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1	2	3	4	5
5)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1	2	3	4	5
6)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1	2	3	4	5
7)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2	3	4	5
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1	2	3	4	5

## V. 우리나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면접원

다음 다섯 문항은(문41~문43-2)에 대해서는 즉시 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문40** 귀하께서는 요즘 전체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div> <div>전혀 만족하지 않는다</div> <div>←-----→</div> <div>매우 만족 한다</div> </div>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1** 귀하께서는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다?

**문42** 다음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믿고 살만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우리 사회는 매우 믿을 수 있는 사회이다	1	2	3	4	5
2) 사람들은 대체로 남을 도우려고 한다	1	2	3	4	5

**문43**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통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44** 귀하께서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 1) 빈곤, 실업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  
☐ 2) 소득, 성, 지위 등 불균형, 사회적 격차가 크다.  
☐ 3) 신뢰가 낮고,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크다.  
☐ 4) 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량이 작다.

**문4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복지가 더 발달한다면 다음 중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 2) 성별, 교육수준별, 고용형태별 불균형과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 3)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

## Ⅶ. 기본 인적사항 및 복지 경험

**문46** 귀하의 현재 종교는 무엇입니까?

- ☐ 1) 불교                      ☐ 2) 개신교                      ☐ 3) 천주교                      ☐ 4) 원불교  
☐ 5) 기타 ( )                      ☐ 98) 없다

**문47**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 1) 미혼                      ☐ 2) 기혼                      ☐ 3) 동거                      ☐ 4) 사별  
☐ 5) 이혼                      ☐ 6) 별거

**문48** 귀하의 아버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17) 세종      ☐ 18) 기타( )

**문49**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 면접원                                       | 재학, 휴학,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으로 받을 것<br>(예. 고등학교 '중퇴'면 3. 중학교 졸업으로 받을 것) |                                       |
|---|---|---------------------------------------|
| <input type="checkbox"/> 1) 무학            | <input type="checkbox"/> 2) 초등학교 졸업                               | <input type="checkbox"/> 3) 중학교 졸업    |
| <input type="checkbox"/> 4) 고등학교 졸업       | <input type="checkbox"/> 5) 2·3년제 대학 졸업                           | <input type="checkbox"/> 6) 4년제 대학 졸업 |
| <input type="checkbox"/> 7) 대학원 석·박사과정 이상 |   |                                       |

**문50** 귀하가 지난주에 주로 한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고용주인 경우) 귀 직장의 직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 **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직장,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
- \* **종업원 없는 자영업**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 **종업원 있는 고용주**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 **무급 가족 종사자** :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 평균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1. 임금 근로자 → **문51-1)로 갈 것**
2.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3. 종업원 있는 고용주 (직원 수 : \_\_\_\_\_명)
4. 무급 가족 종사자(주당 18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 **문51-1-51-3) 응답 후 문52)로 갈 것**
5. 구직활동
6. 학생, 취업/진학준비, 직업훈련 중
7. 퇴직  
(퇴직 후 일을 안 하거나, 연로하여 일을 못하는 경우)
8. 가사 혹은 육아
9. 심신장애
10. 쉬었음
11. 기타(봉사활동 등) → **문53)으로 갈 것**

다음 문항은 취업자용 질문입니다.

**문51-1** 귀하가 현재 주로 일하시는 곳(직장)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 1) 농업, 임업 및 어업
- ☐ 2) 광업
- ☐ 3) 제조업
- ☐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 6) 건설업
- ☐ 7) 도매 및 소매업
- ☐ 8) 운수 및 창고업
- ☐ 9) 숙박 및 음식점업
- ☐ 10) 정보통신업
- ☐ 11) 금융 및 보험업
- ☐ 12) 부동산업
- ☐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16) 교육 서비스업
- ☐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 ☐ 21) 국제 및 외국기관

**문51-2**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귀하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 1) 관리자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3) 사무종사자
- ☐ 4) 서비스종사자
- ☐ 5) 판매종사자
- ☐ 6)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8)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 9) 단순 노무 종사자
- ☐ 10) 군인

**문51-3**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귀하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1) 그렇다
- ☐ 2) 아니다

\*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직장 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 그렇다'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문53)의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는 문53)으로 갈 것

**문51-4**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했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문51-5**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전일제☐ 2) 시간제

##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의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51-6**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몇 시간입니까?

면접원

정규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해 응답 받을 것

일주일 \_\_\_\_\_ 시간 (초과근로시간 포함)

**문51-7** 귀하의 고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면접원

문53-4) 종사상지위가 2.임시직/3.일용직이고  
문53-5) 근로시간 형태가 2.시간제인 경우  
고용형태는 '2. 비정규직'만 응답이 가능합니다.

**문51-8**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귀하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노조가 없다**문52** 귀하의 현재 일하는 시간과 수입을 고려할 때, 다음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 1)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을 더 벌겠다
- ☐ 2) 지금 시간만큼 일하고 지금만큼 돈을 벌겠다
- ☐ 3)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돈을 덜 벌겠다

**문52-1** 귀하는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매우 걱정한다	다소 걱정한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 문54)로 갈 것

다음 문항은 미취업자용 질문입니다.

**문53** 귀하는 현재 취업(혹은 창업)을 원하고 있습니까?

- ☐ 1) 그렇다 ☐ 2) 아니다

**문53-1** 귀하는 지난 1개월 이내에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 포함)나 직장을 구해 보았습니까?

- ☐ 1) 그렇다 ☐ 2) 아니다

**문53-2** 귀하는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 ☐ 1) 그렇다 ☐ 2) 아니다

다음 문항은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주세요.

**문54** 귀하는 최근 1년간 새로운 일(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방법이나 경로를 활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온라인(워크넷, 사람인, 각종 홈페이지 구직광고)	1	2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1	2
3)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1	2
4)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	1	2
5) 민간 취업알선기관	1	2
6) 신문, 잡지, TV 등의 구인광고	1	2
7) 학교, 학원	1	2
8) 가족, 친척, 친구, 동료	1	2

※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ex.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시군구청이나 동면읍 주민센터에 위치한 일자리지원센터(취업알선창구)

※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 세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 대학청년일자리센터 등



**문55** 귀하는 귀 가구의 가장 주된 소득자이십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문55-1** 주된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형제자매

☐ 5) 조부모

☐ 6) 손자녀

☐ 7) 친척

☐ 8) 기타( )

**문56** 귀댁 구성원들의 다음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가구원수
1) 총 가구원 수 (본인 포함)	명
2) 가구원 중 미취학 아동 수 (*없으면 0으로 입력)	명
3) 가구원 중 초등학교생 아동 수 (*없으면 0으로 입력)	명
4)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 수 (*없으면 0으로 입력)	명
5) 가구원 중 신체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분이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 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분 (*없으면 0으로 입력)	명
※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관계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단, 군복무나 직업 또는 학업 상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는 가구원으로 포함해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주는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문57** 귀하와 귀하의 가구원(동거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은 **최근 1년** 동안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음의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혜택경험	
	있다	없다
1) 현금성 복지급여	1	2
2) 현물성 복지서비스	1	2

## 문57-1 급여 혜택 경험에 있으시다면, 월평균 얼마 정도 입니까?

면접원	현물성 복지서비스는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를 민간에서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적습니다.
구분	월 평균 금액
1) 현금성 복지급여	_____ 만 원
2) 현물성 복지서비스	_____ 만 원
<p>※ 현금성 복지급여</p> <p>1) 연금 급여 (국민연금, 군인·공무원·사학 연금),</p> <p>2) 고용보험 급여 (구직수당, 훈련수당 등),</p> <p>3)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p> <p>4) 산재보험 급여,</p> <p>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p> <p>6) 기초연금,</p> <p>7) 중증장애인연금,</p> <p>8) 양육수당,</p> <p>9) 아동수당 등을 의미함</p> <p>※ 현물성 복지서비스</p> <p>1) 보육서비스, 아이돌봄비 등 양육지원서비스,</p> <p>2) 국민건강보험 서비스,</p> <p>3)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p> <p>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장애인지원서비스,</p> <p>5)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간병서비스 등 어르신지원서비스,</p> <p>6) 산모/산생아도우미 지원서비스,</p> <p>7) 무료 건강검진, 무료 예방주사, 무료 진료 등 의료지원서비스,</p> <p>8)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저리대부 등 주거지원서비스,</p> <p>9)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서비스,</p> <p>10) 공공근로/자활사업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의미함</p>	

다음은 귀댁의 수입, 지출 및 자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58 다음은 귀댁의 수입, 지출 및 자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면접원	각각의 문항에 대해 모두 응답을 받을 것
<p>문58-1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구원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p>	
<p>1) 총수입</p> <p>월평균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p>	
면접원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으로 응답받고, 임금이 월급이나 일당제가 아닌 경우 (갯수급 등) 대체적인 월평균으로 응답받을 것

**문58-2** 귀하가 속한 가구의 한 달 평균 지출은 얼마정도입니까? 아래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총지출

음	광	간	간	만	원
	간	만	원		

**문58-3** 귀하가 속한 가구의 자산은 얼마정도입니까? 아래 각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순자산

총	+	-		억					만원
---	---	---	--	---	--	--	--	--	----

3-1) 주택 및 토지 자산액

총		억						만원
---	--	---	--	--	--	--	--	----

3-2) 금융자산액

총		억						만원
---	--	---	--	--	--	--	--	----

3-3) 부채

총		억						만원
---	--	---	--	--	--	--	--	----

면접원 (1)주택 및 토지자산액 + (2)금융자산액 - (3)부채  
※ 순자산이 적자일 경우 마이너스(-) 표시를 할 것

- ※ **총수입** :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회보장급여, 민간보험 급여, 사적(비공식)이전, 기타소득 등 포함
- ※ **총지출** : 식료품비, 교육비, 보육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부모님/자녀 용돈, 기타(보험료, 광열수도비, 피복, 잡비 등) 포함
- ※ **순자산** : 금융자산, 살고 있는 주택, 그 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산한 것에서 부채를 제외

**문59** 귀덕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 1) 자가
- ☐ 2) 전세
- ☐ 3) 보증부 월세
- ☐ 4) 월세(사글세 포함)
- ☐ 5) 무상 및 기타(사택, 관사 등)

※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조금이라도 내고 있다면 '보증부 월세'로 분류하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세'로 분류합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